

#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이창재 · 방호경



#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이창재 · 방호경

## Ⅱ 서 언 Ⅱ

우리나라가 구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장(場)인 아세안+3 체제가 출범한 지도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역과 투자 같은 시장 위주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되어 왔으나, 여타 지역에 비해 제도적 경제통합 면에서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동참하여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지난 10년간 대부분 국가들이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중 상당수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 공동연구의 건의에 따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 경제통합 논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역내 국가간 FTA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에는 각기 FTA가 체결되었으나, 동북아 3국간에는 아직 어떠한 FTA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3국간 제도적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비로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일곱 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고될 계획입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 경제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21세기 중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기능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경제통합을 살펴보고, 특히 이들 지역의 제도적 통합의 핵심인 한·중·일 FTA가 실현될 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아시아 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요구되며,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해서는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는 본원의 이창재 박사 및 방호경 전문연구원이 참여 하였습니다.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사의를 표 합니다. 특히 심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인원 고려대학교 교수님, 외교 통상부 고경석 과장님, 기획재정부 조창상 과장님 및 본원의 정형곤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관련 국내 의 이해를 넓히고 향후 한국이 지역 차원의 FTA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원장 채 욱

## 국문요약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중·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중·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담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중·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중·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

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중·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중·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

한 수단이기도 한 한·중·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중·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중 FTA와 한·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중·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중·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제1장 서 론 .....	19
■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	27
1. 기능적 경제통합 .....	28
가. 경제 일반 .....	28
나. 역내교역 .....	31
다. 역내투자 .....	46
2. 제도적 통합 .....	53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	53
나. 한·중·일 경제협력 .....	58
■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	77
1. 기능적 경제통합 .....	79
가. 경제 일반 .....	79
나. 역내교역 .....	82
다. 역내투자 .....	91
2. 제도적 경제통합 .....	95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	95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	109
다. 동아시아 FTA 논의 .....	116

<b>Ⅰ 제4장 동아시아 시대</b> .....	127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	128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	128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	131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	134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	137
2. 동아시아 FTA .....	142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	142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	144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중·일 FTA의 필요성 .....	146
3. 한·중·일 FTA .....	149
가. 한·중·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	149
나. 한·중·일 FTA 실현방안 .....	156
<b>Ⅰ 제5장 결 론</b> .....	159
<b>Ⅰ 참고문헌</b> .....	166
<b>Ⅰ 부 표</b> .....	171
<b>Ⅰ Executive Summary</b> .....	197

## 표 차례

표 2-1. 동북아지역의 경제지표 .....	30
표 2-2. 동북아 역내교역의 비중 .....	32
표 2-3. 한·중·일 3국의 지역별 수출 중 생산공정별 상품의 비중 .....	45
표 2-4.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규모 .....	49
표 2-5.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	52
표 2-6.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3년) .....	67
표 2-7. 한·중·일 FTA에 대한 업계의 시각 .....	67
표 2-8.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	68
표 2-9.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5년) .....	69
표 2-10.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7년) .....	71
표 2-11. 한·중·일 3국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부문 및 민감부문 .....	71
표 2-12. FTA 체결의 16개 시나리오 .....	72
표 2-13.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8년) .....	73
표 3-1. 동아시아의 경제지표 .....	79
표 3-2. ASEAN+6 각국의 역내교역 의존도 .....	88
표 3-3.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별 수출 중 생산공정별 상품의 비중 .....	90
표 3-4. 동아시아 국가들의 각 생산공정별 상품의 지역별 수출 비중 .....	91
표 3-5. 동아시아 국가·지역의 FTA 추진 현황 .....	110
표 3-6. 동아시아 국가·지역 간 FTA 추진 현황 .....	112
표 3-7. EAFTA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 .....	119
표 4-1. 주요국의 경제규모 전망 .....	133
표 4-2. 아세안+3국간 FTA 현황 .....	143
표 4-3. 아세안+6국간 FTA 현황 .....	144
표 4-4.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145

## 그림 차례

그림 2-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 .....	33
그림 2-2.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추이 .....	34
그림 2-3.	한·중·일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 .....	35
그림 2-4.	한국의 대중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추이 .....	37
그림 2-5.	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추이 .....	37
그림 2-6.	일본의 대한민국 및 중국 수출입 의존도 추이 .....	38
그림 2-7.	한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추이 .....	39
그림 2-8.	한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추이 .....	40
그림 2-9.	중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추이 .....	41
그림 2-10.	중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추이 .....	42
그림 2-11.	일본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추이 .....	43
그림 2-12.	일본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추이 .....	44
그림 2-1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	47
그림 2-1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	48
그림 2-1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	50
그림 2-1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규모 및 비중 .....	51
그림 3-1.	역내교역의 비중 추이 비교 .....	83
그림 3-2.	역내교역의 집중도 추이 비교 .....	84
그림 3-3.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의존도 .....	87
그림 3-4.	한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	92
그림 3-5.	중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	92
그림 3-6.	일본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	94
그림 4-1.	전 세계 GDP의 지역별 점유 비중 .....	129

그림 4-2. 아시아 주요국의 세계 GDP 점유 비중 .....	129
그림 4-3. 전 세계 인구의 지역별 점유 비중 .....	130
그림 4-4. 아시아 지역의 세계 GDP 비중 전망(1700~2050년) .....	132
그림 4-5. 아시아 성장 시나리오별 성장 전망 .....	132
그림 4-6. 동아시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	139
그림 4-7. 동아시아 국가의 EU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	139
그림 4-8. 동아시아 FTA 추진 개념도 .....	148

## 부표 차례

부표 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	172
부표 2.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	173
부표 3. 한·중·일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	174
부표 4. 한국의 대중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	175
부표 5. 중국의 대한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	176
부표 6. 일본의 대한국 및 중국 수출입 의존도 .....	177
부표 7. 한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	178
부표 8. 한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	179
부표 9. 중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	180
부표 10. 중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	181
부표 11. 일본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	182
부표 12. 일본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	183
부표 1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	184
부표 1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	185
부표 1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	186
부표 1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규모 및 비중 .....	187
부표 17.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존도 .....	188
부표 18. 한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	191
부표 19. 중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	192
부표 20. 일본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	192
부표 21. 전 세계 GDP의 지역별 점유 비중 .....	193
부표 22. 동아시아 주요국의 세계 GDP 및 아시아 GDP 점유 비중 .....	193
부표 23. 전 세계 인구의 지역별 점유 비중 .....	194

부표 24. 동아시아 주요국의 세계 인구 및 아시아 인구 점유 비중 .....	194
부표 25. 동아시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	195
부표 26. 동아시아 국가의 EU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	195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제1장 서론



## ■ 동북아 경제협력의 특성 및 전개

1950년대 초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출범하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90년대 초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그 후 다수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이에 동참하면서 20세기 말에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의 물결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협력의 장으로서의 동북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1990년) 및 중국(1992년)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역내 국가간 정치·경제체제의 차이,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두만강유역 개발사업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 상대적 낙후지역인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서의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환동해 경제협력과 환황해 경제협력과 같은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 구상되고 추진되었던 이러한 협력 사업들을 현 시점에서 돌아켜볼 때, 이들 사업 중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적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지리적으로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북한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한 장애요인으

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 종식 후 동북아 경제협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촉망받던 러시아 극동지역도 신생 러시아의 국내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진전과 이에 따른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 결과, 동북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한·중·일 3국간 교역 및 투자가 증대하면서 시장주도의 기능적 경제통합이 진전되었고, 또한 중국경제의 부상은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위상 제고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동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독립적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중·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담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중·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중·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Joint Study Committee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고될 계획이다.

##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조성된 만큼 아세안+3 협력체제의 성과는 금융협력 분야에서 먼저 나왔다.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구상(CMI: Chiang Mai Initiative)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그 후 2009년 12월에는 치앙마이 구상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협정이 서명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협정이 아세안 6개국간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의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함께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 ■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이와 같이 이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호응하여 지역차원의 경제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주요한 시점을 맞이하였다. 동북아에서는 한·중·일 3국간 한·중·일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고될 계획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2012년부터 동아시아 차원에서 FTA 형성 준비를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새로이 구성되는 실무작업반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현재 우리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각각 다루어 온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FTA 간의 상관관계를 조명해 봄으로써 이들 FTA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책의 상호조화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FTA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함으로써 이들 FTA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추동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필자가 한·중·일 3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의 연구진,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학계 참여자, 제1~2기 EAFTA 연구와 CEPEA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과정에서 습득한 현장경험을 이 보고서를 통해 알리고 싶다.

그리고 제도적 경제통합과 별도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 시장주도로 지난 20년간의 경제교류 상황을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기능적 경제통합의 추이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킴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전개과정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기능적·제도적 경제통합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아시아

아 FTA와 한·중·일 FTA의 추진여건 및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중·일 FTA의 실현이 동아시아 FTA 형성과 동아시아 시대의 개막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2. 제도적 통합



동북아지역은 한반도, 중국, 일본,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대만 및 중국과 별도의 관세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를 추가하여 동북아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1980년대까지는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냉전 종식과 함께 1990년대에 들어 비로소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 상태의 지속, 과거사 문제의 잔존 및 정치·경제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제약요인들로 인해 동북아지역에서는 세계 여타 지역처럼 제도적 경제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반면, 시장주도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먼저 지난 20년간 역내 국가간 교역 및 직접투자의 추이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을 살펴본 후,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논의에 이어 제도적 통합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검토해 보겠다.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 및 최근 진전되고 있는 제도적 경제통합 논의가 모두 한국,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분석 및 제도화 논의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1. 기능적 경제통합

### 가. 경제 일반

동북아지역은 전 세계 면적의 12.0%를 점유하고 있다.<sup>1)</sup> 동북아지역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2.9%에 달해 1990년

24.1%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2-1 참고).

반면 경제규모 면에서 동북아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8.1%에서 2010년 20.8%로 증가하였으며,<sup>2)</sup> 같은 기간 중 동북아지역의 총수출과 총수입이 전 세계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각각 16.9%에서 23.2% 및 14.4%에서 20.7%로 크게 신장하였다. 또한 외환보유고 면에서 동북아는 2010년 말 전 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그리고 같은 기간 중 동북아지역의 총 외국인직접투자(유량 기준, inflows)는 4.8%에서 15.2%로 급증하였으나, 총 해외직접투자(유량 기준, outflows)의 비중은 각각 24.9%에서 17.4%로 하락하였다.

한편 한·중·일 3국만으로도 2010년 전 세계 경제의 19.6%를 차지해 동북아 경제의 94.3%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에서도 한·중·일은 전 세계의 18.6%(동북아의 80.2%) 및 16.1%(동북아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국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 2010년 전 세계 및 동북아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비중(유량 기준)은 각각 9.0%(동북아의 59.3%) 및 10.8%(동북아의 62.2%)에 불과하였다.

---

1) 러시아 전체를 포함할 경우 18.9%를 차지한다.

2) 그러나 1인당 GDP 면에서 동북아는 지난 20년간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3)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54.7%를 점유한다.

표 2-1.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지표

국가	면적(km <sup>2</sup> )	인구(백만)		경제규모(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한국	96,920	43	49	270	1,014	6,308	20,756
중국	9,569,901	1,143	1,341	390	5,878	341	4,382
일본	364,485	123	128	3,058	5,459	24,774	42,783
홍콩	1,054	6	7	77	224	13,368	31,514
마카오	28	0	1	3	28	8,425	14,512
대만	32,260	20	23	165	430	8,086	18,558
북한	120,408	20	24*	25	23*	1,217	945*
몽골	1,553,556	2.2	2.7	3.0	5.8	1,336	2,153
러시아 극동**	6,169,300	8	6	23	57	2,875	9,500
한중일	10,031,306 (6.8)	1,309 (23.1)	1,518 (22.3)	3,718 (16.8)	12,351 (19.6)	2,840	8,136
동북아	17,907,912 (12.0)	1,365 (24.1)	1,558 (22.9)	4,014 (18.1)	13,096 (20.8)	2,941	8,407
세계	148,940,000	5,659	6,810	22,183	62,911	3,920	9,238

(단위: 십억 달러)

국가	수출		수입		외환보유고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한국	68	442	74	415	15	287
중국	63	1,580	54	1,394	30	2,847
일본	288	772	235	694	76	1,067
홍콩	82	390	82	434	25	269
마카오	2	1	2	6	1	24
대만	67	275	55	251	72	382
북한	0.9	2	1	6	-	-
몽골	0.1	3	0.1	4	-	-
러시아 극동***	2	19	2	8	6	442
한중일	419 (12.4)	2,794 (18.6)	363 (10.3)	2,503 (16.1)	121 (-)	4,201 (47.1)
동북아	573 (16.9)	3,484 (23.2)	505 (14.4)	3,212 (20.7)	219 (-)	5,318 (59.6)
세계	3,383	15,028	3,517	15,526	-	8,918

표 2-1. 계속

(단위: 십억 달러)

국가	유량				저량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한국	1	7	1	19	5	127	2	139
중국	3	106	1	68	21	579	4	298
일본	2	-1	51	56	10	215	201	831
홍콩	3	69	2	76	202	1,098	12	948
마카오	0	3	0	0	3	15	0	-
대만	1	2	5	11	10	64	30	201
북한	0	0	0	0	1	2	0	0
몽골	0	2	0	0	0	4	0	0
러시아 극동	0	1	-	-	-	17	-	-
한중일	6 (2.9)	112 (9.0)	53 (22.0)	143 (10.8)	36 (1.7)	921 (4.8)	207 (9.9)	1,268 (6.2)
동북아	10 (4.8)	189 (15.2)	60 (24.9)	230 (17.4)	252 (12.1)	2,121 (11.1)	249 (11.9)	2,417 (11.8)
세계	207	1,244	241	1,323	2,081	19,141	2,094	20,408

주: ( ) 안의 숫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

\* 2009년 통계임.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1990년 통계가 이용 불가능할 경우 러시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연도를 사용하였음.

\*\*\*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환보유고는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없어 러시아 전체 통계 수치를 이용함.

자료: CIA World Factbook 데이터베이스; Global Insight 데이터베이스;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 IMF(2011a); 러시아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 나. 역내교역

### 1) 동북아 역내교역의 비중

[표 2-2]는 다양한 동북아 역내교역의 비중<sup>4)</sup>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서 지난 20년간 동북아 역내교역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

4) 역내교역의 비중은 역내 국(혹은 별도 관세지역)의 총 교역에서 역내 국(혹은 별도 관세 지역)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중·일 3국 간 역내교역 비중이 2010년 현재 22.5%를 기록하였고, 한·중·일 3국에 북한,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을 추가하면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승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여 23.1%에 달했다. 반면 한·중·일 3국에 홍콩, 마카오, 대만을 추가할 경우 역내교역의 비중이 대폭 상승하여 37.3%에 이르렀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과 별개의 관세지역이지만 중국에 속해 중국과 긴밀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특히 자유무역항으로서 무역량이 크며, 대만 또한 교역량도 크고 역내교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에 북한, 몽골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추가하면 역내교역의 비중이 37.6%로 약간 높아진다.

표 2-2. 동북아 역내교역의 비중

(단위: %)

	1990년	2010년
한·중·일	12,3	22,5
한·중·일+A	13,4	23,1
한·중·일+HMT	28,9	37,3
한·중·일+A+HMT	29,6	37,6

주: 1) A: 북한+몽골+러시아 극동지역.  
HMT: 홍콩+마카오+대만.

2) 동북아 각국의 대만 무역통계는 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하였음.

자료: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 2)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 및 집중도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12.3%에 머물렀던 역내교역의 비중이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역내교역 비중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잠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4.1%를 기록하였다. 그 후 감소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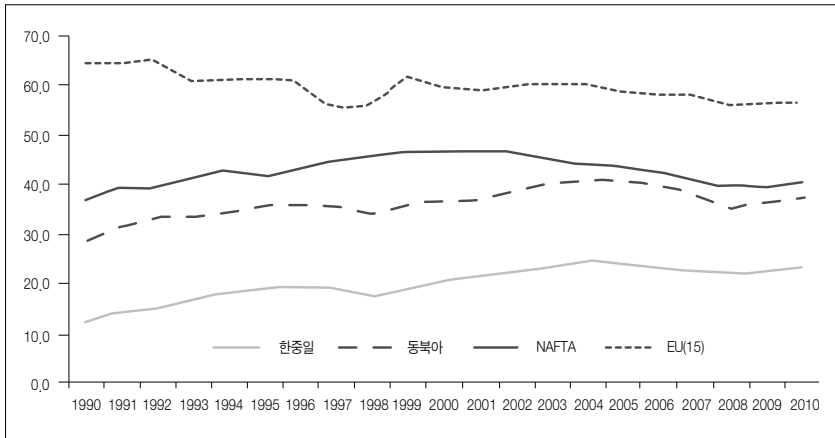
반전되었던 역내교역의 비중은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중 NAFTA와 EU(15개국)의 역내교역의 비중이 각각 37.2%에서 40.5% 및 64.5%에서 56.3%로 변화한 것과 비교할 때,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증가분 면에서는 두드러지나 절대수준 면에서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추가하여 이를 동북아로 지칭할 경우,<sup>5)</sup> 동북아 역내교역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28.9%에서 37.3%로 증가하여 한·중·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최근에는 거의 NAFTA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교역의 비중은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의 총교역 규모가 크면 클

그림 2-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

(단위: %)



주: 동북아 = 한·중·일 + 홍콩, 마카오, 대만.  
 자료: [부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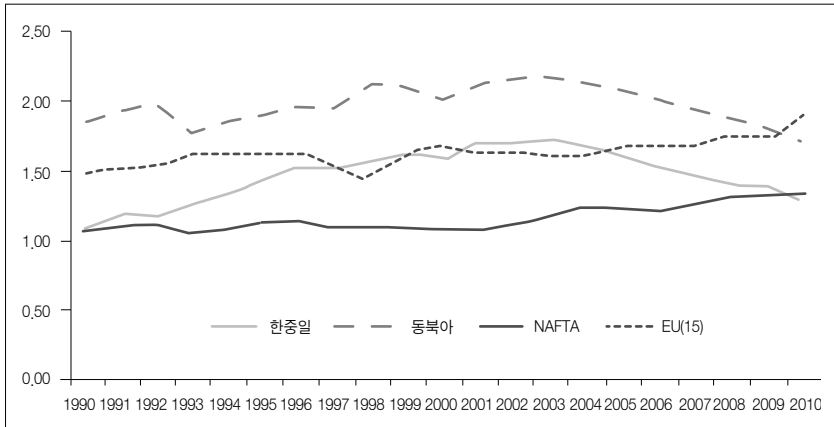
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여도 그 차이는 미미하며 이들 지역의 교역통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내교역 분석에서는 이들 지역을 제외하였다.

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한 지역의 역내교역이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가를 그 지역의 총교역의 크기와 관계없이 평가하고 이를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역내교역의 집중도를 구해야 한다.<sup>6)</sup>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1990년 1.09에서 증가세를 보여 2003년 1.74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1.30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2009년과 2010년)에 역내교역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같은 기간 중 3국의 총교역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3국간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NAFTA와 EU(15개국)와 비교해 보면, 지난 20년간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대체로 EU에 비해서는 낮고 NAFTA에 비해서는 높았다. 시기별로는 한·중·일의 집중도가 1998년과 2001~04년에는 EU보다도 높았던 데 반해, 2010년에는 EU(1.64)는 물론이

그림 2-2.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2] 참고.

6) 역내교역의 집중도 = 역내교역 비중/소속국가들의 총교역의 합이 전 세계 총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 NAFTA(1.32)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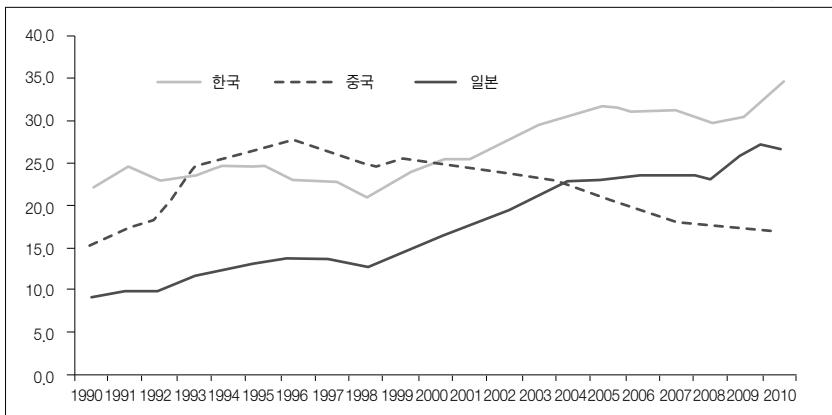
한편 한·중·일에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할 경우, 동북아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한·중·일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 대부분 EU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드러난다.

즉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은 1990년대에는 점차 더욱 긴밀해져 2000년대 초반에는 그 긴밀도가 EU보다도 높았으나, 2004년부터는 긴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NAFTA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중·일에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할 경우, 동북아 역내교역의 긴밀도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EU보다도 높게 나타나 한·중·일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은 지난 20년간 한·중·일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1990년 21.9%에서 2010년 34.5%로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고, 같은 기간 중 일본의 역내교역의

그림 2-3. 한·중·일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3] 참고.

비중도 한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 9.1%에서 26.9%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상당히 다른 추이를 보였다. 중국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1990년 15.0%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1996년 27.6%에 달했으나, 그 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0년에는 16.9%로 낮아졌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이 2004년을 정점으로 비교적 감소세를 보이고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집중도 또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중국의 역내교역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역내교역의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역내교역 비중의 변화 면에서는 일본이 17.8%포인트 증가하여 한국(12.6%포인트)과 중국(1.9%포인트)보다 높은 신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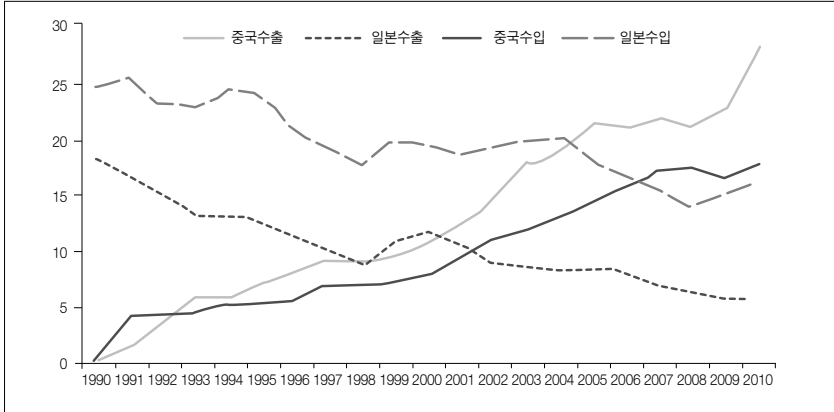
### 3)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지난 20년간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모두 급증하였다. 1990년 전무하던 중국의 비중은 2010년에는 각각 28.4% 및 18.2%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8.6%에서 5.9% 및 25.0%에서 16.5%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비중의 급등과 일본 비중의 현저한 하락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2-4 참고).

중국의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1995년 이래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을 제외하고는 4.4~5.2%의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1996년 이래 9.0~11.6% 구간에서 역시

그림 2-4. 한국의 대중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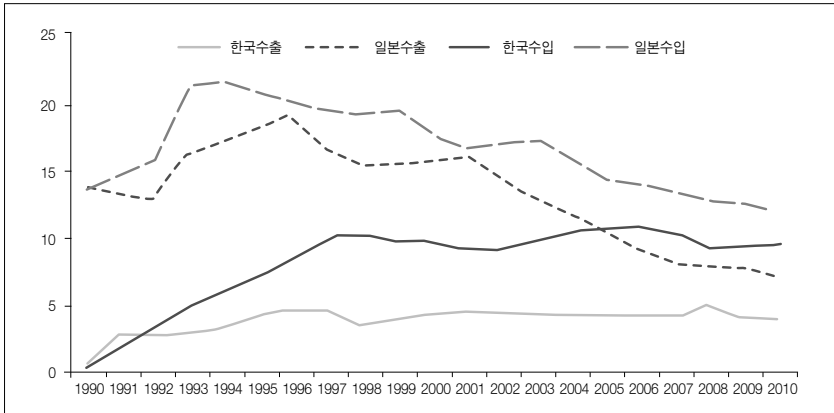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부표 4] 참고.

그림 2-5. 중국의 대한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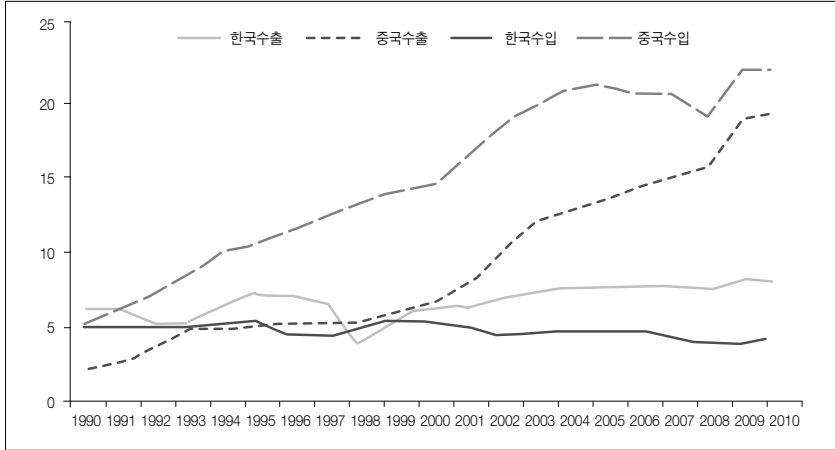


자료: [부표 5] 참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각각 1996년(20.4%) 및 1994년(22.7%)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10년에는 각각 7.6% 및 12.6%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5 참고).

그림 2-6. 일본의 대한국 및 중국 수출입 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6] 참고.

일본의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5.2~8.1% 구간에서 등락을 보여 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그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최근 가장 높은 비중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3.9~5.4%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수출과 반대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그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일본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0년 각각 2.1% 및 5.1%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에는 19.4% 및 22.1%로 크게 신장되었다(그림 2-6 참고).

지난 20년간 한·중·일 3국간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한·중·일 역내교역 증대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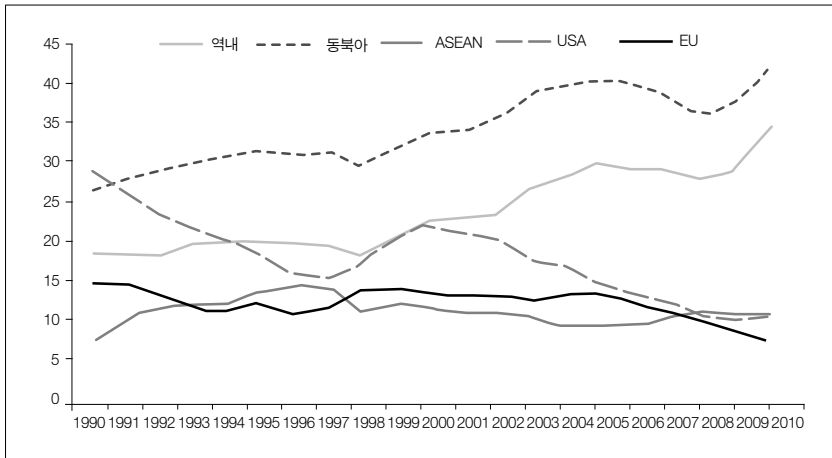
#### 4) 한·중·일 3국의 주요 권역별 수출 및 수입 의존도

한국의 수출에서 역내(중국과 일본)의 비중은 1990년 18.6%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까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후 2005년까지 빠르게 상승하여 30.1%를 기록한 바 있다. 다시 정체기간을 거친 후 2010년에는 34.3%로 높아져 여타 권역에 비해 월등히 중요해졌다(그림 2-7 참고). 그리고 한국 수출에서 중국, 일본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중요해져 1990년 26.7%에서 2010년에는 41.4%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한국 수출에서 1990년 28.6%를 점유하였던 미국의 비중은 감소하여 1997년 15.2%로 낮아졌다. 그 후 잠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10.4%까지 축소되었다. EU의 경우 1990년에 한국 수출의 14.8%를 차지하였으

그림 2-7. 한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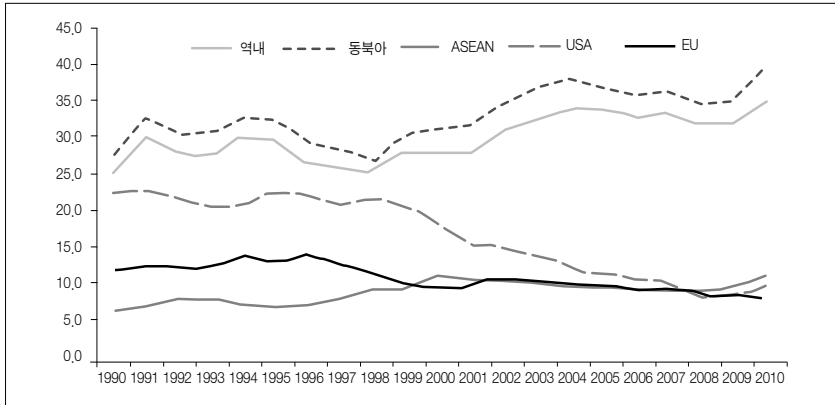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부표 7] 참고.

그림 2-8. 한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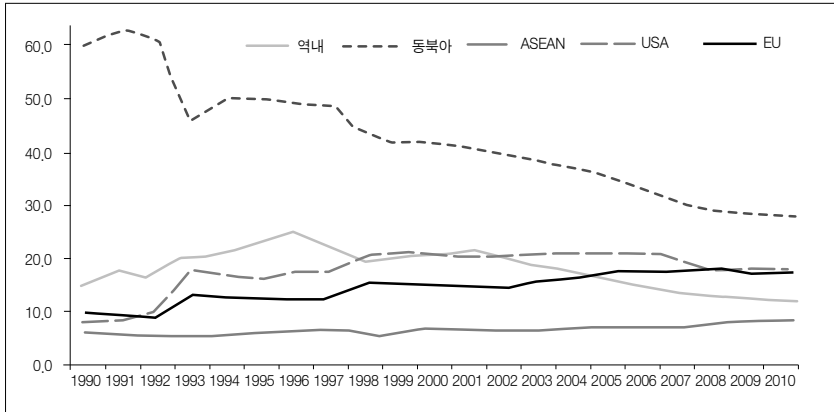
나, 특히 2000년대 들면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7.5%에 불과하였다. 아세안의 한국 수출에서의 비중은 1990년 7.5%에서 1996년 14.7%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010년에는 10.9%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입에서도 국내 비중은 여타 권역에 비해 현격히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 25.0%에 달했던 국내 비중은 등락을 보이다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2010년에는 34.7%까지 높아졌다(그림 2-8 참고). 동북아의 비중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같은 기간 중 27.4%에서 39.1%로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중 한국 수입에서 미국의 비중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1990년 한국 수입의 22.8%를 차지했던 미국의 비중은 2008년 8.9%로 감소한 후 다소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3%에 달했다. EU의 비중도 1990년 12.2%에서 1994년 14.2%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세를 보여 2010년에는 8.3%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중 아세안의 비중은

그림 2-9. 중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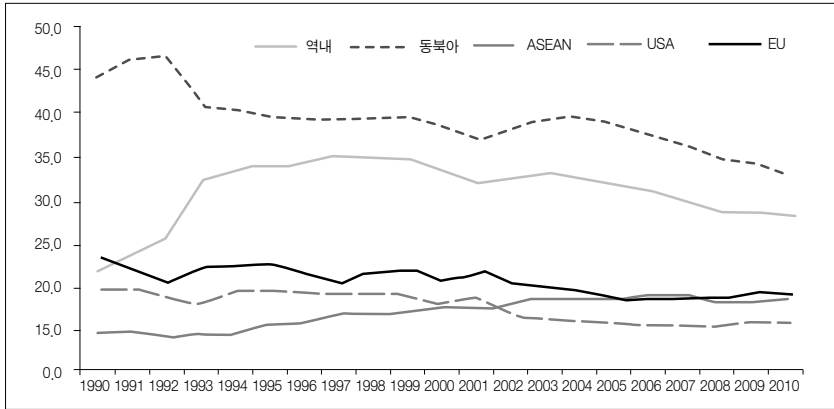
증가세를 보여 6.8%에서 11.5%를 기록하였다.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중국의 수출에서의 권역별 비중은 큰 변화를 보였다. 1990년 15.4%로 중국 수출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역내 비중은 1996년 25.4%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0년 12.0%로 낮아졌다. 그리고 한국, 일본에 홍콩, 마카오, 대만을 추가한 동북아의 경우 그 비중이 1991년(63.5%) 이래 대체로 하강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28.2%를 차지해 여타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수출시장에서 1990년 8.5%에 불과하였던 미국의 비중은 상승세를 보여 1998~2006년 동안에는 2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다소 낮아져 2010년 17.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 EU의 비중도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10.0%에서 17.4%로 높아졌다. 아세안의 비중 또한 1990년 6.6%에서 2010년 8.7%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2-10. 중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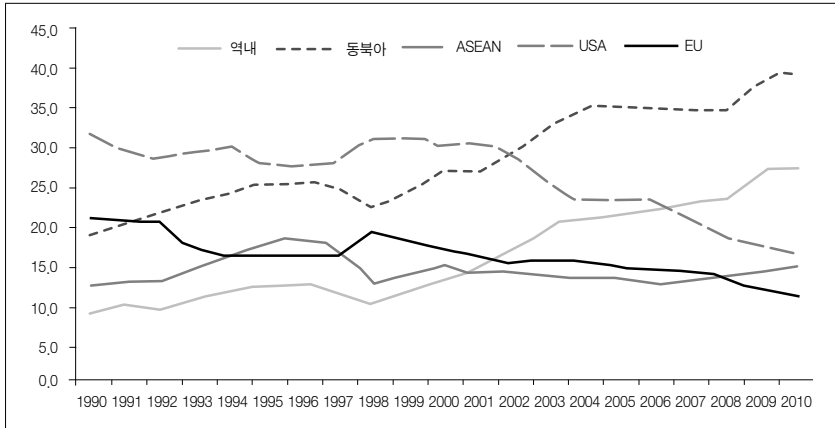
중국의 수입에서 권역별 비중은 수출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1990년 14.7%를 점유하였던 국내 비중은 1997년과 1998년에 30.9%까지 높아졌으며, 그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22.5%라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그림 2-10 참고). 또한 동북아의 비중도 1992년(45.2%) 이후 비교적 하락세를 보여 왔지만, 2010년에 28.8%를 점하고 있다.

1990년 각각 17.0%와 12.2%를 점유하였던 EU와 미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각각 11.4% 및 7.3%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아세안의 비중은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5.8%에서 11.1%로 높아졌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수출에서 권역별 비중은 획기적으로 변하였다. 국내 비중은 1990년 8.2%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시 감소하여 1998년 9.2%에 달했다. 그러나 그 후 지속적으로

그림 2-11. 일본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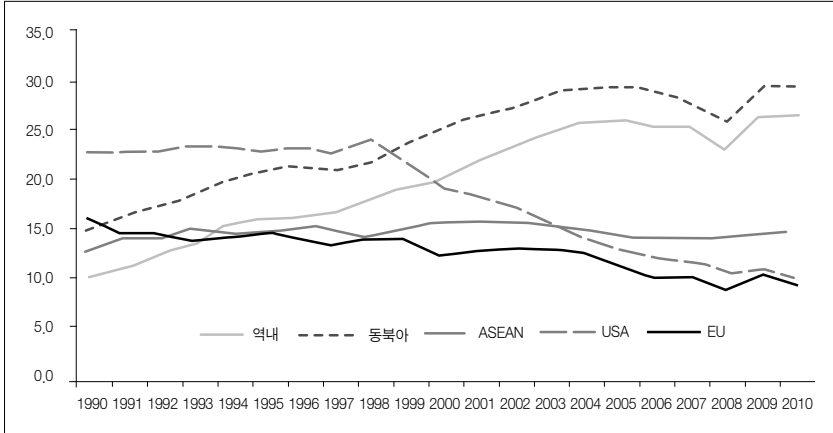
상승하여 2010년에는 27.5%를 기록하였다. [그림 2-11]이 보여주듯이 2000년까지만 해도 국내 비중(12.8%)이 여타 권역에 비해 낮았다는 점에서 지난 10년간의 상승세는 더욱 극적이다. 더욱이 한국, 중국에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의 비중은 1990년 26.2%에서 2010년 41.4%로 증가해 여타 지역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일본 수출에서 31.6%를 점유했던 미국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0년대는 확연한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15.6%로 낮아졌다. EU의 비중도 같은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0.3%에 그쳤다. 한편 1990년 11.6%를 차지하였던 아세안의 비중은 1996년 17.8%로 상승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위기로 1998년 12.0%로 하락하였고, 그 후에는 등락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14.6%에 달했다.

일본의 수입에서 국내 비중은 지난 20년간 1990년 10.1%에서 꾸준히

그림 2-12. 일본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부표 12] 참고.

증가하여 2005년 25.8%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여 2008년에는 22.7%로 낮아졌으나 다시 상승하여 2010년에는 26.2%에 달했다(그림 2-12 참고). 동북아의 비중 또한 상승세를 보여 1990년 27.4%에서 2010년 39.1%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 수입에서 1990년 22.5%를 차지하던 미국의 비중은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다 1998년 24.0%를 기록한 다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9.2%로 낮아졌다. EU의 비중도 1990년 16.1%에서 2010년 9.2%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그 비중이 1990년 12.7%에서 2000년 15.7%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후 다소 감소하여 2010년에는 14.6%를 기록하였다.

#### 5) 한·중·일 3국의 생산공정별 수출의존도

한·중·일 3국의 생산공정별 상품의 수출 패턴을 살펴보면, 전 세계

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였으며 그 비중이 1995년 50.7%에서 2009년에는 47.2%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3국의 역내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과 2009년에 각각 54.5% 및 61.1%를 기록하여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역내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64.9%에서 71.2% 및 64.1%에서 72.9%로 상승하였고, 그 비중이 1995년 32.5%였던 중국도 2009년에는 42.0%로 높아져

표 2-3. 한·중·일 3국의 지역별 수출 중 생산공정별 상품의 비중

(단위: %)

지역	구분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1995	2009	1995	2009	1995	2009	1995	2009
역내	중간재	부품	18.3	26.7	18.4	30.7	6.0	19.5	26.5	31.0
		반제품	36.2	34.4	46.5	40.5	26.5	22.5	37.6	41.9
	자본재	18.4	20.1	9.2	22.7	7.0	21.4	30.7	17.0	
	소비재	23.2	16.0	24.6	5.1	50.0	33.3	4.5	6.6	
아세안	중간재	부품	37.5	26.2	34.3	23.9	10.7	19.5	41.8	36.7
		반제품	28.6	36.5	43.2	48.3	41.5	31.8	23.5	36.6
	자본재	24.7	25.5	15.2	22.1	16.8	30.3	28.0	20.5	
	소비재	8.5	11.1	7.1	5.1	25.2	17.2	6.6	5.7	
EU	중간재	부품	27.2	17.9	33.0	16.6	5.6	14.3	31.8	30.8
		반제품	16.3	17.9	14.7	21.5	26.3	16.3	14.0	21.4
	자본재	28.7	32.1	25.9	49.5	13.9	32.3	33.4	22.2	
	소비재	26.9	31.5	26.3	12.2	49.7	36.4	20.7	25.4	
미국	중간재	부품	33.5	18.5	41.9	23.0	6.4	12.5	37.4	31.2
		반제품	11.7	14.4	11.1	18.7	13.7	13.3	11.4	15.3
	자본재	24.4	29.7	20.2	35.8	16.1	33.5	27.1	17.8	
	소비재	30.0	37.1	26.7	22.4	61.4	40.3	24.1	35.5	
세계	중간재	부품	26.6	22.2	26.4	24.5	7.2	17.6	33.3	30.6
		반제품	24.1	25.0	33.1	31.9	27.6	21.2	20.4	28.9
	자본재	24.4	28.3	18.5	32.4	12.0	30.0	30.4	21.8	
	소비재	23.5	23.5	21.5	10.8	48.1	30.1	15.7	17.4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3국 모두 중간재의 역내수출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3 참고).

한·중·일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3국의 아세안으로의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66.1%에서 62.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3국의 EU 및 미국으로의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43.5%, 45.2%에서 35.8%, 32.9%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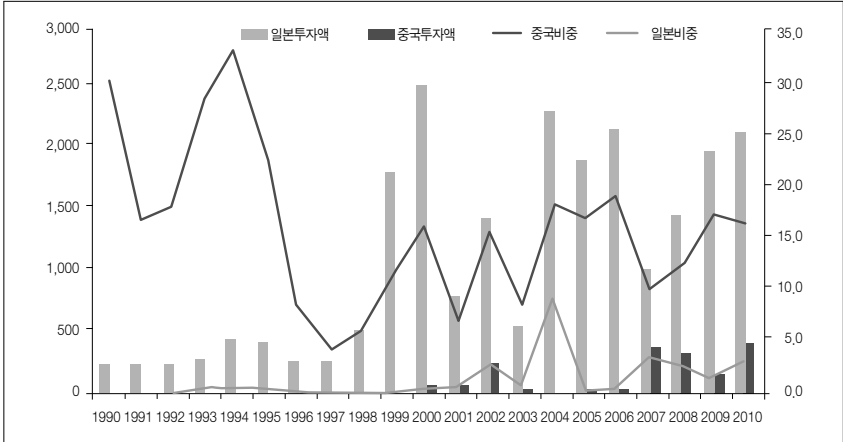
한편 한·중·일 3국의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3국의 전 세계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23.5%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중 3국의 역내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23.2%에서 16.0%로 감소한 데 반해, 3국의 EU 및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각각 26.9%, 30.0%에서 31.5%, 37.1%로 증가하였다. 즉 한·중·일 3국의 역내수출에서는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증가세인 데 반해, EU 및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 다. 역내투자

한·중·일 3국의 역내투자는 역내교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국이 세계 투자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역내투자의 비중 또한 비교적 낮다. 둘째,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셋째, 상당 부분 비대칭적이다. 넷째, 국제통계의 부재상태에서 국별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림 2-1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부표 13] 참고.

### 1) 외국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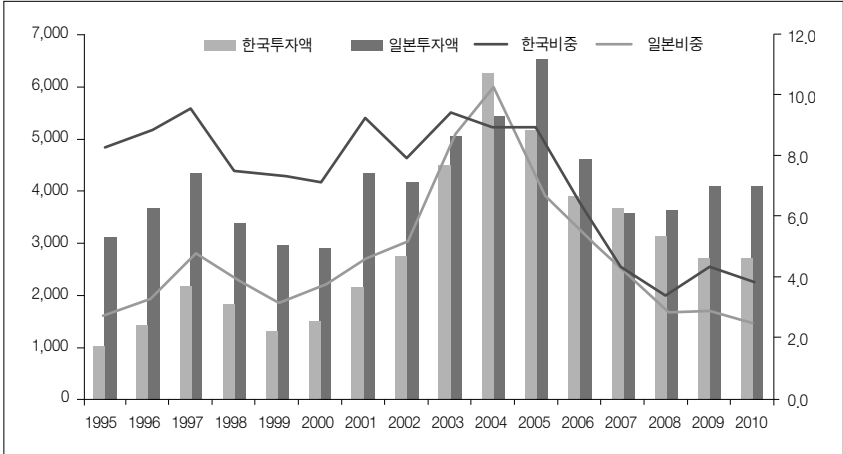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flows)에서 일본은 1990년대 상반기에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1994년 32.5%에 달했으나, 그 후 하락하여 1997년 3.8%를 기록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15.9%를 점유하고 있다(그림 2-13 참고). 또한 투자액 면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0억 8,300만 달러에 달했다.

1990년대에 미미하였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서는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그 비중이 0.3%(2006년)에서 9.1%(2004년)까지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투자액이 4억 1,400만 달러에 달해 그 비중이 3.2%에 이르렀다.

한·중·일 3국의 역내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중

그림 2-1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CEIC에서 제공하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외국인직접투자(실행된 외국인직접투자-회수분)임. 자료: [부표 14] 참고.

국에 대한 직접투자이다.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비중은 1995년 2.8%에서 2004년 10.3%까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2.5%에 달했고 투자액은 26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 비중은 1995년(8.3%)에서 2005년(9.0%)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후 대체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3.9%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액은 40억 8,400만 달러에 달했다.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표 2-4]에서 보듯이 나라별 투자액 및 일본 내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 비교가 어려우나, 한국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렸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 중 투자액 면에서 가장 컸던 2008년의 2억 7,900만 달러는 2008년 일본 내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1.1%에 불과하였다. 단,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액이 3억 1,400만 달러에 달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결국 지난 20년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역내(중국과 일본)의 비중은 1990년 29.4%에서 1994년 38.6%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표 2-4.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한국	중국	총 금액
1995	117.2	-21.9	40.2
1996	56.0	0.9	207.6
1997	81.4	-22.1	3,199.3
1998	19.2	-11.8	3,268.8
1999	49.4	2.6	12,308.1
2000	47.9	0.0	8,225.9
2001	37.5	1.7	6,190.7
2002	63.2	1.4	9,089.2
2003	-100.6	-1.8	6,237.6
2004	250.8	-9.2	7,808.1
2005	31.4	11.4	3,223.0
2006	108.2	11.6	-6,788.8
2007	220.8	14.5	22,180.6
2008	279.2	37.0	24,550.3
2009	254.8	-137.4	11,839.4
2010	273.9	314.3	-1,358.9

주: JETRO에서 제공하는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순외국인직접투자(=실행된 외국인직접투자-회수분)만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일본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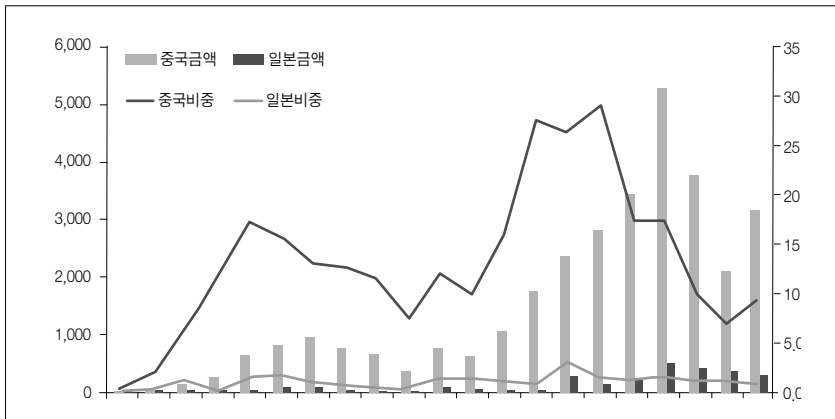
19.1%로 감소하였다. 절대규모 면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내 외국인직접 투자에서도 지난 15년간 역내 비중이 1995년 11.1%에서 2004년 19.3% 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6.4%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는 역내투자의 비중이 더욱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해외직접투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액 면에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반전하여 2007년 최고치(52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해 2010년에는 31억6,5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utflows)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 증가하여 1994년에 17.4%에 달한 후 감소하였고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2005년에 29.1%를 기록하였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9.6%에 그쳤다(그림 2-15 참고).

그림 2-1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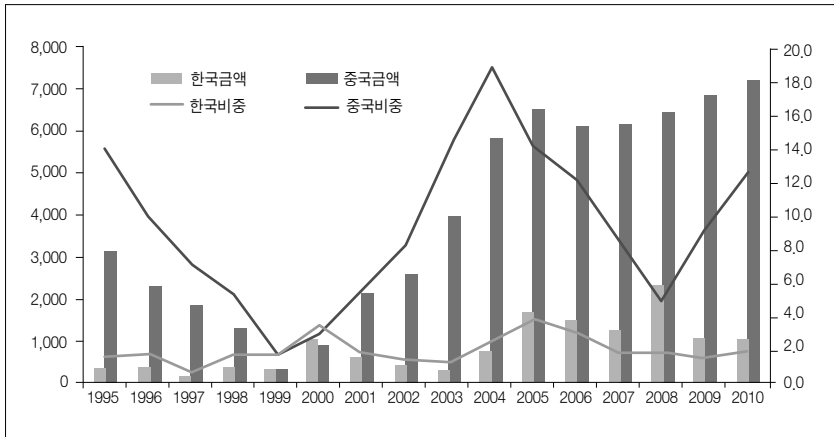
자료: [부표 15] 참고.

한편 한국의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액이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비중 면에서 미미하였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금액 면에서는 2007년에 5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해 최고치에 달했고 비중 면에서는 2004년에 3.2%로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3억 400만 달러에 달해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0.9%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액 면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감소한 후 상승세로 반전하여 2005년 65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잠시 하락하였으나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2010년에는 72억 5,2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4.1%에서 1999년 1.6%로 감소하였고 다시 증가해 2004년에 18.9%를 기록하였으나, 하락세로 반전해 2008년 5.0%를 보인 후 다시 증가해 2010년에는 12.7%에 달했다(그림 2-16 참고).

그림 2-1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부표 16] 참고.

표 2-5.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한국		일본		전체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3	153.9	5.4	7.4	0.3	2,854.7
2004	40.2	0.7	15.3	0.3	5,498.0
2005	588.8	4.8	17.2	0.1	12,261.2
2006	27.3	0.2	39.5	0.2	17,634.0
2007	56.7	0.2	39.0	0.1	26,506.1
2008	96.9	0.2	58.6	0.1	55,907.2
2009	265.1	0.5	84.1	0.1	56,529.0
2010	-721.7	-	338.0	0.5	68,811.3

자료: CEIC 통계 데이터베이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액이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비중 면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비해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는 크게 낮았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금액 면에서는 2008년에 23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해 최고치에 달했고 비중 면에서는 2005년에 3.8%로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10억 8,500만 달러에 달해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1.9%를 점유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이다. [표 2-5]에서 보듯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의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2005년에 5억 8,900만 달러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의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0년 3억 3,8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그 비중은 0.5%에 불과하였다.

## 2. 제도적 통합

###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 1) 배경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 종식으로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으로 인해 분단되어 왔던 동북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그 여파는 공산권 국가와 단절관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1992년 8월에는 한국과 중국 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여건 변화로 동북아지역에서도 비로소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1978년 중국이 개방정책을 선택하면서 꾸준히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동북아 경제협력이 시작될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오랫동안 북방지역과 단절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오랫동안 단절되어 왔던 천연부존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로 통칭되던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거대한 중국에서의 자원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이들 지역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로 여겨졌으며, 이들과 경제교류 증대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객관적으로도 일본의 자본과 첨단기술, 한국의 개발경험과 생산기술, 중국의 노동력과 잠재시장,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소련(러시아)의 천연자원과 과학기술, 몽골의 자원 등 동북아 국가들은 부존요소 면에서 높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 요소가 결합할 경우 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 동북아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산적해 있었다. 즉 체제 전환 초기에 있던 구(舊)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시장경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도적·물적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시장경제체제 관련제도 미비와 상관행에 대한 인식 부족은 심각하였다. 또한 이 지역들은 자원개발사업을 비롯한 외국인직접투자에 필요한 수송, 통신을 비롯한 각종 물리적 인프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2) 특성 및 한계

정치 및 경제체제의 차이가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활용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까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는 중앙정부간 경제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주로 인근 지역간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환동해연안 경제협력과 환황해연안 경제협력으로, 이는 동해와 황해 연안 및 한·일 해협 인근 지방 및 도시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지방자치단체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논의는 과거 소원했던 동해 및 황해 연안 지역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지방 및 도시간 정기적 회의 및 박람회 등을 통한 인적교류의 증대와 경제교류의 기반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일부 항공 및 해운 연결, 관광진흥 및 학술·문화교류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도시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지는 못하였다.<sup>7)</sup>

한편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에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1991년 UNDP 기치하에 추진된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다. 이 사업은 접경국인 북한, 중국 및 러시아 외에도 한국 및 몽골 정부가 참여한 계획관리위원회(Program Management Committee)가 조직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5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위원회(Consultative Commission)와 접경 3국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구성을 골자로 하는 2건의 국제협정과 두만강 경제개발지역과 동북아지역에 대한 환경원칙에 관한 1건의 양해각서가 조인됨에 따라 다자간 협력사업으로서 TRADP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sup>8)</sup>

북한, 중국 및 러시아 국경지역의 개발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모색해 보려는 이 사업은 국지적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사업이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TRADP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시도되었으며, 더욱이 1991년 12월 북한의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sup>9)</sup>가 병행하여 추진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훈춘-라진·선봉-포시에트를 잇는 소삼각 지역에서 시작한 TRADP는 점차 연길-청진-나호드카를 잇는 대삼각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들

7) 여기에 한·일 해협권 경제협력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들 지방차원에서의 협력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시장회의(일명 황해권 시장회의), 환동해권 지방당국자회의, 환동해권 성장거점도시회의, 환동해권 도시정상회의, 한·일 해협권 시도지사 교류회의 및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등 지방간 협의체가 운영되었다(안충영, 이창재 편(2003), p. 220, 221, 226).

8) 안충영, 이창재 편, 앞의 책, pp. 174~175; 두만강지역개발계획프로그램(TRADP) 공식 사이트 <http://www.tumenprogramme.org/>.

9) 홍익표(2001), pp. 46~64.

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시설과 같은 수송 인프라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에 기여하였다.<sup>10)</sup> 그러나 관련국의 이해 상충과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및 북한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실패 등으로 인해 초기에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의 특징은 그 대상지역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환동해연안 경제협력의 경우 남북한 외에 일본의 일부 지역, 중국의 일부 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일부만이 포함되었고, 환황해연안 경제협력에는 남북한, 일본의 일부 지역, 중국의 일부 지역만이 속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할 때도 동북아의 지리적 개념은 남북한, 일본, 몽골, 중국 동북 3성(혹은 내몽고도 포함), 러시아 극동지역 정도에 그쳤다.<sup>12)</sup> 러시아의 경우, 유라시아 국가이며 핵심지역이 유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일부 지역만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지역만을 동북아지역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 동북아 경제협력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가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근 지역간 다각적으로 모색된 초기의 동북아 경제협력을 개념화하려는

---

10) 안충영, 이창재 편(2003), pp. 177~179.

11) 이에 따라 2005년 제8차 협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명칭을 광역두만강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개칭하고, 대상지역도 중국 동북 3성과 내몽고, 몽골의 동부지역, 러시아의 연해주 및 한국의 동해안 지역(부간, 속초, 울산, 포항 포함)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수송, 에너지, 관광 및 환경을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업계자문위원회(BAC: Business Advisory Council)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모색 중이다(TRADP 공식 사이트).

12)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에서도 개발 대상지역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만 포함시켰다.

다양한 시도가 행해졌다. 스칼라피노(Scalapino)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자연경제지역(NETs: Natural Economic Territories)’이라고 명명하였다.<sup>13)</sup> 오용석 교수는 동북아 경제협력이 소지역에서 시작해 확산되고 광역화되어 가는 것을 ‘물결 모형’으로 설명하였다.<sup>14)</sup> 그리고 손병해 교수는 역내 경제특구를 이어 선형(線形)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경제교류를 확대·심화시키려는 구상<sup>15)</sup>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구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경제통합 논의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동북아 경제통합 구상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환경분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 Cooperation)와 같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회의 외에도 동북아 환경협력 회의(NEA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및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등 역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부문별로는 가장 일찍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sup>16)</sup>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구체적 협력사업의 성과나 제도화의 진전 면에서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즉 계획경제체하에 있었던 지역에서 비즈니스 관련 제도 및 상관행이 바뀌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대다

13) Khanna(1996), p. 8.

14) 오용석(1996).

15) 손병해(1992).

16) 안충영, 이창재(2003), pp. 114~123.

수의 경우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국내 정치·경제적 변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교적 변방인 극동지역까지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북한이 개혁·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최근에는 역내 안보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한·중·일 경제협력

### 1)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동북아 경제협력은 일부 분야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성과가 초기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계는 상당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지역주의에 반대하여 왔던 미국이 1988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4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east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출범시키는 등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함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동아시아 차원에서 1997년 12월 첫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 때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 2) 한·중·일 정상회의<sup>17)</sup>

### 가) 한·중·일 정상회의의 시작 및 성과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한국 김대중 대통령, 중국 주룽지 총리 및 일본 오부치 게이조 수상 간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렸다. 조찬모임으로 진행된 이 회담으로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2000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고, 2002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제1차 정상회담은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국 정상은 3국 국책연구기관들로 하여금 3국간 경제협력 증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sup>18)</sup> 그리고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2001년 1월부터 한·중·일 공동연구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중 수교 10주년 및 중·일 수교 30주년이며 한·일 공동주최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을 한·중·일 국교의 해(Year of China-Japan-Korea Exchange)로 지정하였다.

제3차 브루나이 회의에서 3국이 경제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업계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설립키로 하였다. 제4차 회의에서는 3국 공동으로 관광 및 관광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스포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협력도 논의되었다.

---

17) 이 절의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한·중·일 협력 사이버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Cyber Secretariat)(<http://www.tcs-asia.org>) 및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에 수록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18) 이에 따른 3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5차 발리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f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채택하였으며, 이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위해 '3자 위원회(Three-Party Committee)'를 결성하기로 하였다.<sup>19)</sup> 공동선언은 무역 및 투자, IT, 환경보호, 재해예방, 에너지, 지역금융 안정, 과학기술, 관광, 어족자원 보존, 인적교류, 국제 이슈, 아시아지역 협력(동아시아 연구그룹 건의사항 집행), 안보군사인력 교류, 전염병 및 국제범죄 방지 등 14개 부문에서의 협력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3자 위원회에서 2001년 1월 이후 경제협력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하였다.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6차 정상회의에서는 3자 위원회가 제출하고 2003년 채택된 공동선언 이후 3국 협력 경과보고(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와 3국 협력 행동전략(Action Strategy for Promot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승인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역통화의 안정을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7년 1월 세부에서 개최된 제7차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을 발표하였고 제2차 중간보고(Progress Report) (2005

---

19) 3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다.

~06년)를 채택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2007년을 문화협력의 해로 지정하였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아세안+3 정상회의와 관계없이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3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제3차 중간보고(2007년)를 승인하였고 13개 새로운 협력사업을 채택하였다. 또한 3국간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 작성되었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2007년 6월 제1차 3국 외교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었고, 이에 앞서 고위 외교당국자 회의가 같은 해 5월 베이징에서 열렸다. 행동계획은 2~3년마다 3국이 순번제로 작성기로 하였으며, 정치, 경제,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 및 문화 4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정치 부문에서는 2008년 일본에서 열릴 제1차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2009년과 2010년 각기 중국과 한국에서 제2~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2009년부터 '3자 협력 사이버 사무국(TCCS: Trilateral Cooperation Cyber-Secretariat)'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2003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2008년에 종결 단계에 접어들고, 2009년부터는 3국 연구기관 간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나)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의 출범 및 성과

2007년 행동계획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2008년 12월 제1차 독립적 한

· 중 · 일 정상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다. 기존의 한 · 중 · 일 정상회의는 아세안+3 정상회의 시 아세안 국가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의 정상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3국 정상은 이 회의를 3국을 순회하며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한 · 중 · 일 정상회의는 온전한 3국간 정상회의가 되었고, 한 · 중 · 일 3국 정상간 대화의 장(場)이 한 단계 격상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의 기본 원칙 및 방향을 담은 한 · 중 · 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or Tripartite Partnership)과 3국 정상 공동선언(2003), 3국 협력 행동전략(2004) 및 3국 협력 행동계획(2007) 등에 근거한 한 · 중 · 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Promot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 채택되었다. 그 외에도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Economy)과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 · 중 · 일 3국 공동발표문(Trilateral Joint Announcement on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등이 발표되었다.

제2차 한 · 중 · 일 정상회의는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시 처음으로 열린 한 · 중 · 일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한 · 중 · 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과 한 · 중 · 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3국 정상은 한·중·일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010년 5월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 비전 2020(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이 채택되었다. 2020년까지 3국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상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 이 선언은 ①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제도화, ②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③ 지속가능 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④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⑤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국 정상은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Memorandum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3국 정상회의, 3국 외교장관회의, 기타 장관급회의 및 3국 고위급회의 등과 같은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당사자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을 2011년 대한민국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제3차 정상회의 중 표준협력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tandards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과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trengthening Science and Innovation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 발표되었다.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1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의의 성과는 3국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문제를 다룬 한·중·일 정상회의 정상선언문(Summit Declaration)에 포함되어 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1년 내에 완료하고 그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가능한 조속히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현존 협력체를 통해 지역협력을 증진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동력으로서 아세안의 역할을 계속 지지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해 아세안과 여타 회원국과 함께 3국간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여파 속에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관리 협력 및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3) 한·중·일 공동연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에서 3국 정상은 3국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발전연구

중심(DRC) 및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가 각국의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출범하게 된다.<sup>20)</sup> 이들 연구기관은 매년 공동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책 건의와 함께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sup>21)</sup> 이 공동연구는 3국 정상회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그 결과가 정상회의에 보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성격상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공동연구 전 과정에 참여하였던 필자가 본 절에서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sup>22)</sup>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한·중·일 3국간 무역활성화 방안과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장기적 경제비전과 중기적 정책방향(Long-term Economic Vision and Medium-term Policy Direction)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를 택하였다. 당시 일본정부가 한·중·일 FTA를 주제로 삼는 데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제목을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로 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제하의 공동연구는 3년 예정으로 시작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이 연장되어 업계 및 정부의 참여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원래 업계 및 정부인사는 공동연구의 결과가 발표되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

20) 2009년부터는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로 교체되었다.

21) 3국 연구기관이 합의한 공동연구 요약과 정책 건의를 각국 정부를 통해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2) 그 중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중·일 FTA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왔으며, 연구진은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각국 업계대표가 매년 연구 계획 및 중간점검이 이루어지는 워크숍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전경련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일본의 경단련 혹은 경제동우회에서 업계대표가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는 3국 정부관계자가 모든 워크숍에 옵서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의 옵서버가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한·중·일 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 환경이 성숙되지 못해 이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승격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본 연구를 중단할 경우 한·중·일 FTA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절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첫 해인 2003년에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심화에 관한 연구(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라는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과 업계 설문 조사가 시도되었다.<sup>23)</sup>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역내 국가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는 가정하에 각국의 경제성장 및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한·중·일 FTA는 역내 모든 국가의 거시경제 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고).

3국 연구기관이 각기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행한 주요 설문내용은 한·중·일 FTA에 대한 업계 입장, 예상 효과, 업계 전략 및 정부의 정책

---

23)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표 2-6.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3년)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경제적 후생	GDP 성장
중국	4.7~6.4	1.1~2.9
일본	6.7~7.4	0.1~0.5
한국	11.4~26.3	2.5~3.1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표 2-7. 한·중·일 FTA에 대한 업계의 시각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찬성	85.3	78.7	70.9
반대	1.5	5.9	13.3
조건적 찬성 혹은 반대	13.2	14.2	15.8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적 요구사항 등이었다. 총 설문대상 업체는 한국 2,461개, 중국 1,650개 및 일본 1,920개로, 이 중 응답 업체는 한국 203개, 중국 203개 및 일본 346개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국 업계 모두 한·중·일 FTA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7 참고).

2004년에는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Sectoral Implications of a China-Japan-Korea FTA)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중·일 FTA 체결 시 우려되는 각국의 민감산업을 파악하고 농업, 자동차, 전자 산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sup>24)</sup>

각국의 민감산업 도출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관세율 수준 등을 이용하였고, 농업·자동차와 전자산업의 경우 여러 가지 무역지수 분석과 해당 업계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중·일 FTA의 파급

24)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4).

표 2-8.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산업부문	중국	일본	한국
농업	+	-	-
수산업	+	/	-
섬유	+	-	+
전자	+	/	+
일반기계	-	+	-
철강	/	+	/
자동차	-	+	/
화학	-	+	+

주: +는 산출 증가, -는 산출 감소, /는 효과 미미를 각각 의미함.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본은 농업과 섬유산업, 한국은 농업과 자동차(일본 관련), 섬유(중국 관련) 등이 민감산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산업 부문 내에서도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stream) 품목에 따라 FTA의 파급효과는 상이할 수 있어 각 산업의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표 2-8 참고).

이 연구는 원래 3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2005년 주제는 한·중·일 FTA의 비전과 과제(Towards a CJK FTA: Visions and Tasks)이었다. 그러나 실제 2005년 연구는 2004년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업, 섬유 및 철강 산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울러 한·중·일 FTA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3국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sup>25)</sup>

그리고 2003년에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25)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표 2-9.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5년)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경제적 후생	GDP 성장
중국	3.3	0.30
일본	16.7	0.37
한국	12.4	3.55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바 있으나, CGE 모형에 사용되는 GTAP 데이터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재분석하였다(표 2-9 참고).

2006년에는 한·중·일 FTA의 주요 이슈: 서비스, 원산지 규정 및 기체결 FTA의 특징(Important Issues of CJK FTA)이라는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5년 연구에서 다룬 서비스 분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무역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인 물류 부문과 도소매 부문에서의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 분석을 통해 3국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고 민감품목을 파악하였다.<sup>26)</sup>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으나, 3국 모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점차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 부문에서는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부문에서는 3국 모두 각종 규제에 의해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일 3국이 각각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26)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6).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AFTA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세번변경 기준과 특정공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3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 조항은 모두 양자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각국이 체결한 FTA 상품양허안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의 민감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이나 중국의 민감품목은 석유화학제품과 철강·기계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중·일 FTA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a CJK FTA)에서는, 먼저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및 세계적 FTA 확산 추세 등 세계적 무역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한·중·일 FTA 체결 당위성이 재검토되었다.<sup>27)</sup>

또한 2005년 연구에서 사용된 GTAP 데이터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율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관세율을 적용한 CGE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 FTA는 3국 모두의 거시경제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GDP 및 경제적 후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10 참고).

그리고 각국의 최근 통계 데이터 및 관세율을 이용하여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3국의 비교우위 및 민감품목에 대한 재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서비스는 부문별로 경쟁력 수준이

---

27)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표 2-10.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7년)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Case 1		Case 2	
	후생	GDP	후생	GDP
중국	4.7	0.30	5.0	0.55
일본	19.1	0.41	9.4	0.15
한국	20.0	5.26	10.9	2.61

주: Case I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완전철폐, Case II는 곡물을 제외한 관세 완전철폐.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표 2-11. 한·중·일 3국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부문 및 민감부문

구분	한국	중국	일본
경쟁력 보유 부문	1994~2005: 운송 정부서비스	1994~2005: 관광 커뮤니케이션	1994~2005: 정부서비스
	1990년 후반 이후: 건설, 금융	2000년 이후: 비즈니스 서비스 정부 서비스	2003년 이후: 컴퓨터·정보 서비스
민감부문	관광 컴퓨터·정보 보험	운송 금융서비스	운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11 참고). 그 외에도 추가로 체결된 3국의 FTA 협정에서의 원산지 조항 및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기타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졌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의 마지막 해였던 2008년에는 한·중·일 FTA의 현실적 로드맵 구축에 관한 연구(Possible Roadmaps to a CJK FTA: Obstacles and Expectations)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sup>28)</sup>

한·중·일 3국의 FTA 정책과 기체결 FTA 협정문의 주요 특징을 비

표 2-12. FTA 체결의 16개 시나리오

기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2006~2010	한·중·일	중·일	중·일	중·일	중·일	중·일
2011~2015			한·중	한·중	한·일	한·일
2016~2020				한·중·일		한·중·일
기간	시나리오 7	시나리오 8	시나리오 9	시나리오 10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2006~2010	한·중	한·중	한·중	한·중	한·중	한·일
2011~2015		한·일	한·일	한·일	중·일	
2016~2020			한·중·일		한·중·일	
기간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	시나리오 15	시나리오 16		
2006~2010	한·일	한·일	한·일	한·일		
2011~2015	중·일	중·일	한·중	한·중		
2016~2020		한·중·일		한·중·일		

주: 각각의 FTA는 해당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교한 결과, 3국은 FTA 추진전략 및 대상국 선택에 있어 각각 다른 특징을 보였으며 협정문의 범위 및 내용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3국 모두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한·중·일 FTA 체결은 역내무역 및 투자확대를 포함하여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술이전 효과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 기타 분야(환경, 교육, 문화 등)에서 3국간 협력증진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각국 취약산업의 생산기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

28)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득 및 기대효과와 달리 시안이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중·일 FTA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중·일 3국 혹은 양자간 FTA 체결의 조합 및 순서를 달리하여 총 16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각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 차원(region-wide)의 FTA 구축과정에서 한·중·일 FTA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표 2-12 참고).

16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한·중·일 FTA가 바로 체결될 때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고 3국 모두에게 윈윈(win-win)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3 참고).

기술적으로는 한·중·일 FTA를 마친 상태이나 한·중·일 FTA가 향후 3국간 협력유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에도 3국 연구기관 및 정부의 합의하에 제2단계(phase II) 한·중·일 FTA 관련 연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역내교역 현황 및 한·중·일 3국간 무역원활화에 관한 연구(Road to Recovery of Reg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CJK FTA)라는

표 2-13.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08년)

(단위: 증가율, %)

	국가	2006~10년	2011~15년	2016~20년	2021~25년
경제적 후생증대효과*	중국	0.06	0.21	0.31	0.37
	일본	0.06	0.15	0.23	0.30
	한국	1.35	1.74	2.17	2.79
수출증대 효과	중국	4.18	3.6	3.4	3.4
	일본	3.99	5.63	7.07	7.95
	한국	6.05	6.41	6.49	6.25

주: \* 베이스라인 명목 GDP 대비.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주제로 제2단계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sup>29)</sup>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중·일 3국의 역내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한·중·일 3국은 부품 등과 같은 중간재의 활발한 역내교역을 통해 생산된 최종재를 미국 및 유럽 등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3국의 무역구조가 최종 소비시장의 충격에 취약함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과 EU 등 주요 소비시장에 의존한 수출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역내 소비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이를 토대로 3국 연구기관은 3국 정상에게 그동안 수행해 온 한·중·일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3국 정부차원의 공식연구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다.<sup>30)</sup>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이 그간 국제기구 및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무역원활화가 거래비용 감소 및 무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기 체결한 FTA에 반영된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3국간 무역원활화 추진방향 및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

29)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IDE-JETRO and KIEP(2009).

30) 사실 이전에도 공동연구진은 몇 차례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정부가 주도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는 건의를 고려하였으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 이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2009년에 이러한 정책건의가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 지적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FTA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성이 부각된 점 외에도, 다음 장에서 살펴볼 2008년 동아시아 차원의 FTA 전문가 논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고 그 결과 아세안+3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였다. 3국이 기체결한 FTA에 포함된 무역원활화의 범위는 단순히 통관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무역·세관 현대화·표준화·운송 및 물류 협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공동연구의 정책건의에 부응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2010년 동 공동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며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와 별도로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증진방안(New Vi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이라는 주제하에 새로운 연구에 착수하였다.<sup>31)</sup> 2010년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및 투자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3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정부간 대화채널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 3국 연구기관은 역내 국가간 소비재 교역확대 및 역내 투자확대를 위한 모멘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3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대화 메커니즘의 단계적 강화도 제안하였다.

2011년에는 최근 역외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신기술 및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의 세계적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3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한·중·일 3국간 산업협력 증진방안(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sup>32)</sup> 이를 위해 3국간 산업무역구조 및 상호의존성의 변화, 3국간 산업기술의 흐름 및 역내 산업협력 제고의 필요성 등이 다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신흥분야에서의

---

31)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IDE-JETRO and KIEP(2010).

32)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IDE-JETRO and KIEP(2011).

공통된 표준화 및 규정 제정을 위해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건의가 이루어졌다.

#### 4)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한·중·일 FTA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한·중·일 공동 연구진(중국 발전연구중심,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아시아경제연구소,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연구를 정부차원의 공식 연구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The Joint Study Committee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제1차 회의가 2010년 5월 서울에서 열렸다. 그리고 제2차 회의(도쿄), 제3차 회의(중국 웨이하이), 제4차 회의(제주도), 제5차 회의(일본 기타큐슈), 제6차 회의(중국 창춘)가 개최되었으며, 마지막 제7차 회의는 12월 평창에서 열렸다.

본 연구는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1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를 2011년 내에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1년 말에 종결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에게 보고될 계획이다.<sup>33)</sup>

---

33) 필자가 학계 대표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 보고서에서 다룰 수 없음을 밝힌다.

##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2. 제도적 경제통합



동북아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지리적 정의도 상당히 복잡하다. 경제통합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3국이 포함된 아세안+3국을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는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아세안+3국 정상회의 이래 형성된 아세안+3국 협력체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한 후에는 아세안+3국 외에도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가 그 회원국이기 때문에 아세안+6국을 동아시아로 포함하기도 한다. 일본은 경제통합 논의에서도 아세안+3국보다 아세안+6국을 선호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기능적 차원에서는 동북아에서와 같이 홍콩, 마카오 및 대만도 동아시아에 포함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에 포함된 북한,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도 이에 속할 수 있고, 보다 광의로는 동아시아를 호주와 뉴질랜드 외의 여타 오세아니아 지역 및 인도 외의 남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도적 경제통합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토대로 아세안+3국을 중심으로 아세안+6국까지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기능적 경제통합 차원에서는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이 지역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추가한 아세안+3+HMT 및 아세안+6+HMT 지역도 비교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그리고 때로는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과의 비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 1. 기능적 경제통합

## 가. 경제 일반

동아시아지역의 면적은 그 정의에 따라 세계 전체의 9.7%(아세안+3국)에서 16.4%(아세안+6국) 혹은 21.6%(동북아+아세안+인도·호주·뉴질랜드)를 점유하고 있다.<sup>34)</sup> 인구 면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은 2010년 31.1%(아세안+3국)에서 49.4%(아세안+6+HMT 지역)에 달해, 광의의 동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표 3-1 참고).

표 3-1. 동아시아의 경제지표

(단위: 십억 달러)

지역	면적(km <sup>2</sup> )	인구(백만)		경제규모		1인당 GDP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아세안	4,346,131 (2.9)	439 (7.8)	600 (8.8)	358 (1.6)	1,865 (3.0)	816	3,111
아세안+3	14,377,437 (9.7)	1,748 (30.9)	2,117 (31.1)	4,076 (18.4)	14,217 (22.6)	2,332	6,714
아세안+3+HMT	14,410,779 (9.7)	1,774 (31.3)	2,149 (31.6)	4,321 (19.5)	14,898 (23.7)	2,436	6,933
아세안+6	24,408,743 (16.4)	2,612 (46.2)	3,335 (49.0)	4,772 (21.5)	17,227 (27.4)	1,827	5,166
아세안+6+HMT	24,442,085 (16.4)	2,639 (46.6)	3,365 (49.4)	5,017 (22.6)	17,909 (28.5)	1,901	5,322
한·중·일	10,031,306 (6.8)	1,310 (23.1)	1,518 (22.3)	3,719 (16.8)	12,352 (19.6)	2,840	8,137
한·중·일+HMT	10,064,648 (6.8)	1,335 (23.6)	1,549 (22.7)	3,963 (17.9)	13,033 (20.7)	2,969	8,414
동북아	17,907,912 (12.0)	1,365 (24.1)	1,558 (22.9)	4,014 (18.1)	13,096 (20.8)	2,941	8,407
미국	9,161,966 (6.2)	251 (4.4)	311 (4.6)	5,801 (26.2)	14,527 (23.1)	23,147	46,734
EU-15	3,220,935 (2.2)	348 (6.1)	398 (5.8)	6,844 (30.9)	14,953 (23.8)	19,667	37,570
세계	148,940,000	5,659	6,810	22,183	62,911	3,920	9,238

34) 면적 외에는 동북아지역에 속하는 북한,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을 제외하고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아세안+6+HMT 지역을 광의의 동아시아로 사용하기로 한다.

표 3-1. 계속

(단위: 십억 달러)

지역	수출		수입		외환보유고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아세안	144 (4,3)	1,084 (7,2)	163 (4,6)	1,012 (6,5)	60	663 (7,4)
아세안+3	563 (16,6)	3,878 (25,8)	527 (15,0)	3,515 (22,6)	181	4,864 (54,5)
아세안+3+HMT	714 (21,1)	4,544 (30,2)	665 (18,9)	4,206 (27,1)	279	5,539 (62,1)
아세안+6	629 (18,6)	4,330 (28,8)	603 (17,2)	4,102 (26,4)	203	5,195 (58,3)
아세안+6+HMT	781 (23,1)	4,995 (33,2)	742 (21,1)	4,792 (30,9)	300	5,869 (65,8)
한·중·일	419 (12,4)	2,794 (18,6)	364 (10,3)	2,503 (16,1)	121	4,201 (47,1)
한·중·일+HMT	570 (16,8)	3,460 (23,0)	502 (14,3)	3,194 (20,6)	219	4,876 (54,7)
동북아	573 (16,9)	3,484 (23,2)	505 (14,4)	3,212 (20,7)	219	5,318 (59,6)
미국	393 (11,6)	1,278 (8,5)	517 (14,7)	1,968 (12,7)	72	121 (1,4)
EU-15	1,489 (44,0)	4,406 (29,3)	1,539 (43,8)	4,536 (29,2)	355	429 (4,8)
세계	3,383	15,028	3,517	15,526	-	8,918

지역	유량				저량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1990	2010
아세안	13 (6,3)	79 (6,4)	2 (0,8)	42 (3,2)	64 (3,1)	938 (4,9)	9 (0,4)	432 (2,1)
아세안+3	19 (9,2)	190 (15,3)	55 (22,8)	186 (14,1)	100 (4,8)	1,859 (9,7)	218 (10,4)	1,699 (8,3)
아세안+3+HMT	23 (11,1)	265 (21,3)	62 (25,7)	272 (20,6)	315 (15,1)	3,036 (15,9)	258 (12,3)	2,849 (14,0)
아세안+6	29 (14,0)	248 (19,9)	58 (24,1)	227 (17,2)	190 (9,1)	2,635 (13,8)	260 (12,4)	2,211 (10,8)
아세안+6+HMT	34 (16,4)	322 (25,9)	66 (27,2)	314 (23,8)	404 (19,4)	3,812 (19,9)	302 (14,4)	3,361 (16,5)
한·중·일	6 (2,9)	111 (8,9)	53 (22,0)	143 (10,8)	36 (1,7)	921 (4,8)	208 (9,9)	1,268 (6,2)
한·중·일+HMT	10 (4,8)	186 (15,0)	60 (24,9)	230 (17,4)	251 (12,1)	2,098 (11,0)	249 (11,9)	2,417 (11,8)
동북아	10 (4,8)	189 (15,2)	60 (24,9)	230 (17,4)	252 (12,1)	2,121 (11,1)	249 (11,9)	2,417 (11,8)
미국	48 (23,2)	228 (18,3)	31 (12,9)	329 (24,9)	540 (25,9)	3,451 (18,0)	732 (35,0)	4,843 (23,7)
EU-15	96 (46,4)	270 (21,7)	131 (54,4)	394 (29,8)	758 (36,4)	6,212 (32,5)	809 (38,6)	8,816 (43,2)
세계	207	1,244	241	1,323	2,081	19,141	2,094	20,408

주: ( ) 안의 숫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HMT(홍콩·마카오·대만), 아세안+3(아세안 10개국+한국·중국·일본), 아세안+6(아세안+3+인도·호주·뉴질랜드), 아세안+6+HMT(아세안+6+홍콩·대만·마카오).

자료: CIA World Factbook 데이터베이스; Global Insight 데이터베이스;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 IMF(2011a); 러시아 통계청[online]; UNCTAD FDI 데이터베이스.

경제규모 면에서 1990~2010년간 아세안+3국과 아세안+6+HMT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4% 및 22.6%에서 22.6% 및 28.5%로 증가해, 2010년 현재 경제규모 면에서 협의의 동아시아(아세안+3국)는 미국(23.1%)이나 EU 15개국(23.8%)에 비해 다소 작으나, 광의의 동아시아(아세안+6+HMT)는 이들보다 현저히 커졌다. 이와 같이 지난 20년간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동아시아의 1인당 GDP는 수준은 여전히 세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해, 아직까지 동아시아는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임을 보여 준다.

동아시아의 교역규모도 지난 20년간 빠르게 상승해, 1990년 EU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아세안+3+HMT의 교역량이 2010년에는 EU 수준에 도달했으며, 2010년에는 광의의 동아시아가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각각 33.2%, 30.9%에 달해 EU의 비중(29.3%, 29.2%)을 넘어섰다.

또한 외환보유고 면에서 전 세계에서 협의의 동아시아와 광의의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현재 각각 54.5%와 65.8%에 달해, 동아시아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간 동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유량)에서 협의의 동아시아 및 광의의 동아시아가 점유하는 비중이 각각 9.2%와 16.4%에서 15.3%와 25.9%로 높아졌다. 해외직접투자(유량)의 경우 빠른 신장세를 보였으나, 전 세계에서 협의의 동아시아와 광의의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중 각각 22.8%와 27.2%에서 14.1%와 23.8%로 감소하였다.

저량 기준으로는 2010년 현재 협의의 동아시아와 광의의 동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 세계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각각 9.7% 및 19.9%로 미국(18.0%)과 EU(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더욱이 해외직접 투자 면에서는 협의의 동아시아와 광의의 동아시아 비중은 각각 8.3% 및 16.5%에 달해 미국(23.7%) 및 EU(43.2%)에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아시아지역 중 경제규모 면에서는 아세안+6국이 아세안+3+HMT 보다 크지만, 교역, 직접투자 및 외환보유고 면에서는 대부분 아세안+3+HMT 가 아세안+6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역내교역

### 1) 역내교역의 비중 및 집중도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28.6%에서 1996년 37.4%까지 빠르게 상승 하였으나 하락세로 반전하여 1998년에는 33.2%를 기록하였고, 그 후 등락을 보이면서 완만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39.7%에 달했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동북아(한·중·일+HMT)와 유사했으며, NAFTA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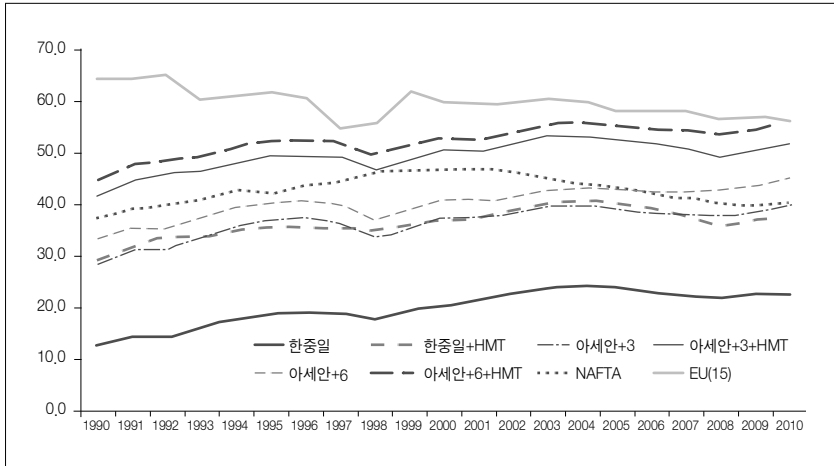
같은 기간 중 아세안+6국의 역내교역 비중도 아세안+3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 33.0%에서 45.1%로 증가하였다. 아세안+6국의 역내비중은 대부분 기간 중 NAFTA에 못 미쳤으나, 2006년 이후에는 NA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35) NAFTA의 2010년 역내교역 비중은 40.5%를 기록하였다.

그림 3-1. 역내교역의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부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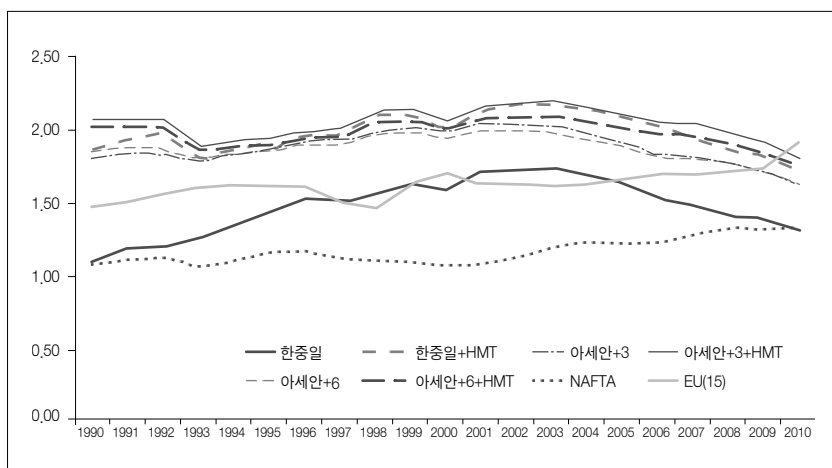
아세안+3+HMT와 아세안+6+HMT의 경우 역내교역 비중은 같은 기간 중 각각 41.3%, 44.6%에서 51.9%, 56.2%로 증가하였다. 이 역내교역 비중은 모두 NAFTA보다는 높고 EU(15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이 EU 수준(56.3%)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역내교역 비중 면에서 협의의 동아시아는 동북아(한·중·일+HMT) 수준과 비슷한 데 반해, 광의의 동아시아(아세안+6+HMT)는 최근 EU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역내교역 집중도는 NAFTA나 한·중·일 3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는 EU보다도 상당히 높았다.

아세안+3국간 역내교역 집중도는 1990년 1.81에서 2001년 2.05까지

그림 3-2. 역내교역의 집중도 추이 비교



자료: [부표 2] 참고.

상승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1.64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6국 역내교역 집중도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1990년대 초반 아세안+3국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1995년 이후에는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 중 아세안+3+HMT의 역내교역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아세안+3+HMT의 집중도는 1990년 2.07에서 2003년 2.20에 달한 후 2010년에는 1.81을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집중도는 지난 20년 동안 아세안+3+HMT 지역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한편 한·중·일+HMT의 역내교역 집중도가 대부분 기간 중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집중도보다 높았으며,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세안+6+HMT에 비해서도 높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동아시아의 역내교역 집중도는 역내교역 비중과 달리 2010년을 제외하고는 EU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역내교역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긴밀도가 2000년 초반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아세안+6국과 아세안+6+HMT가 아세안+3국과 아세안+3+HMT에 비해 역내교역 비중은 높으나 역내교역 집중도에서는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교역 의존도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모든 형태의 동아시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지난 20년간 높아져 왔다. 한국의 아세안+3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1990년 29.1%에서 2010년에는 45.7%로 상승하였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 급증하였다.

한국의 아세안+6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여 1990년 32.5%에서 2010년에는 50.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아세안+3+HMT 및 아세안+6+HMT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같은 기간 중 각각 34.0% 및 37.4%에서 51.5% 및 56.4%로 상승하였다.

즉 동아시아의 범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1990년 한국 교역의 약 1/3을 점유하였던 동아시아지역은 2010년에는 한국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중국 교역 비중이 아세안+3국에서 가장 낮고, 아세안+6국, 아세안+3국+HMT, 아세안+6국+HMT 순으로 높아진다는 점은 한국과 같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는 아세안+3국+HMT와 아세안+6국+HMT 지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990~2010년에 중국의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에 대한 교역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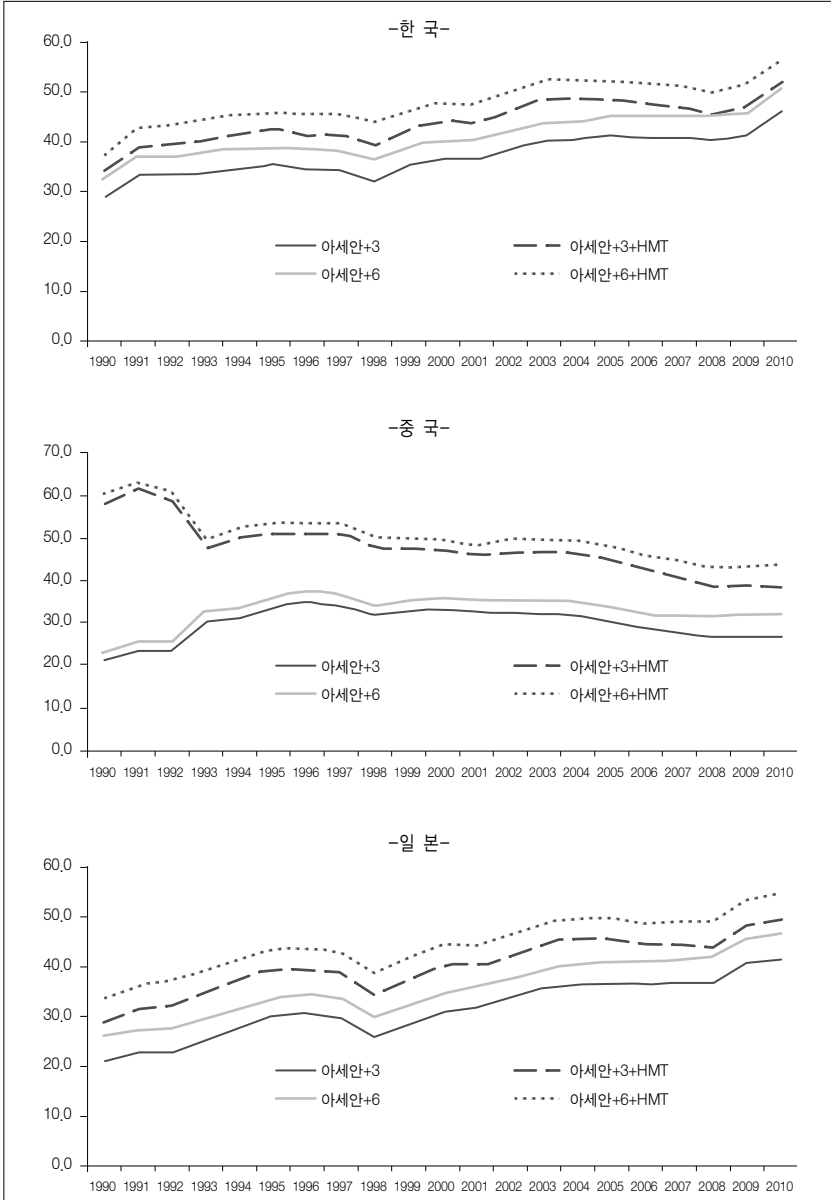
도는 각각 21.3% 및 23.2%에서 26.8% 및 32.0%로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아세안+3+HMT와 아세안+6+HMT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각각 58.0% 및 59.9%에서 38.3% 및 43.5%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1990년대 초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의존했던 중국이 점차 교역 상대를 동아시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1990년 후반부터는 중국의 역외 지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교역의존도 추이는 한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지난 20년간 증가 추세와 동아시아지역별 순위도 한국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본의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한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같은 기간 중 일본의 아세안+3국과 아세안+6+HMT에의 교역의존도는 각각 21.2%, 33.7%에서 41.5%, 54.7%로 증가하였다.

한·중·일 3국 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난 20년간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표 3-2 참고). 아세안 국가 중 같은 기간 역내교역의 비중이 감소한 국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각각 아세안+6국에 대한 교역의 비중이 71.6%에서 61.5% 및 86.5%에서 85.7%로 감소하였다. 2010년 아세안 국가 중 아세안+6국에의 역내교역의존도는 싱가포르(55.0%), 태국(56.6%), 베트남(57.2%)에서 비교적 낮고, 브루나이(94.3%), 미얀마(90.5%)에서 특히 높았다.

그림 3-3.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의존도

(단위: %)



자료: [부표 17] 참고.

표 3-2. ASEAN+6 각국의 역내교역 의존도

(단위: %)

연도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990	32.5	23.2	26.1	36.1	43.3	45.6	55.9	53.8
1991	36.9	25.4	27.5	37.5	45.3	45.3	55.9	55.1
1992	37.0	25.4	27.6	35.5	44.1	45.5	53.4	54.1
1993	38.1	32.3	30.0	38.3	47.4	45.8	52.8	53.4
1994	38.5	33.5	32.1	40.4	49.7	47.2	53.0	52.1
1995	38.9	35.8	34.0	40.4	50.4	44.5	54.3	51.6
1996	38.5	37.4	34.8	40.8	49.0	46.2	52.8	53.4
1997	38.1	36.2	33.6	41.4	47.6	45.2	53.0	52.0
1998	36.5	34.1	29.9	40.5	45.8	42.0	50.7	49.3
1999	38.9	35.4	32.3	40.6	48.2	45.8	53.2	50.6
2000	40.1	35.8	34.6	41.8	50.2	48.2	56.0	53.5
2001	40.5	35.2	35.8	43.1	49.7	47.7	55.3	52.6
2002	42.3	35.0	37.5	45.5	50.9	49.8	56.5	53.6
2003	43.8	35.0	39.6	48.3	54.3	51.8	58.8	53.9
2004	44.1	34.6	40.8	49.9	54.8	52.9	59.1	54.6
2005	45.4	33.4	41.1	49.4	54.8	54.0	62.5	55.2
2006	44.8	32.0	40.7	48.7	55.2	53.3	62.7	55.1
2007	45.2	31.5	41.4	49.4	55.6	54.3	63.1	56.6
2008	45.1	31.2	42.2	50.8	55.0	53.8	65.1	58.4
2009	46.1	32.0	45.9	51.6	54.6	55.0	63.9	59.5
2010	50.5	32.0	47.0	60.3	55.0	56.6	66.1	65.6

연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호주	뉴질랜드
1990	83.4	28.6	71.6	86.5	65.4	17.7	42.9	44.1
1991	84.0	53.5	53.7	74.7	70.3	17.3	45.6	46.7
1992	80.7	52.2	85.9	80.9	72.2	18.2	46.8	46.7
1993	72.5	61.8	85.7	62.6	73.4	18.7	47.9	48.0
1994	81.2	58.3	86.9	63.6	73.7	20.9	48.3	49.2
1995	82.0	59.2	84.0	65.4	77.6	19.7	47.9	49.8
1996	76.6	58.2	77.1	68.5	74.2	20.5	46.7	51.0
1997	80.7	55.6	62.6	70.7	75.6	20.3	47.5	50.2
1998	60.3	57.8	51.9	73.0	72.2	20.2	45.3	47.6
1999	77.4	58.8	47.1	78.7	71.0	19.6	46.9	50.6
2000	78.5	62.6	36.6	73.9	67.0	17.4	48.3	49.8
2001	82.2	59.1	47.8	73.8	68.9	21.3	49.1	50.3
2002	86.3	56.6	33.9	72.7	71.3	19.4	49.7	51.3
2003	86.3	55.6	32.0	71.9	75.9	21.7	50.7	52.3
2004	84.6	57.4	32.6	69.8	79.9	22.4	53.3	53.2
2005	87.1	59.2	31.1	76.3	83.5	23.0	55.8	53.3
2006	87.1	59.7	33.1	81.9	85.1	25.1	56.2	54.7
2007	75.4	59.2	51.4	80.6	85.1	25.5	56.9	56.7
2008	94.6	59.3	36.3	81.5	88.7	25.2	58.8	56.2
2009	93.6	56.8	39.4	82.3	89.0	27.0	61.2	56.8
2010	94.3	57.2	61.5	85.7	90.5	29.7	63.5	58.8

자료: IMF(2011a).

또한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도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같은 기간 중 상승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교역의존도는 각각 42.9% 및 44.1%에서 63.5% 및 58.8%로 증가하였으며, 인도의 교역의존도는 17.7%에서 29.7%로 상승하였다. 2010년 현재 인도의 역내교역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은 쉽게 이해되지만, 호주의 역내교역 의존도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필리핀에 비해서도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3) 동아시아 국가들의 생산공정별 수출의존도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 모두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가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특히 아세안+3국의 역내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점차 증가해 2009년에는 6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동아시아 역내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낮으며 또한 감소하여, 아세안+3국의 경우 2009년에 14.1%를 기록하였다(표 3-3 참고).

그러나 동아시아의 대미(對美) 및 대EU 수출에서는 상당히 다른 수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 모두에서 소비재 비중은 증가세를 보여, 아세안+3국의 대미 및 대EU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은 1995~2009년 동안 각각 28.8%에서 37.4% 및 26.8%에서 31.0%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의 역내수출에서는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또한 증가세에 있는 데 반해, 대미 및 대EU 수출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점차 상승해, 제2장에서 살펴본 한·중·

표 3-3.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별 수출 중 생산공정별 상품의 비중

(단위: %)

지역	구분		아세안+3		아세안+6	
			1995	2009	1995	2009
역내	중간재	부품	26.2	26.3	24.2	23.7
		반제품	32.0	35.6	32.8	34.7
	자본재	19.3	18.3	17.9	16.9	
	소비재	17.2	14.1	17.6	13.9	
EU	중간재	부품	27.3	20.2	25.3	18.8
		반제품	16.6	18.9	17.7	21.1
	자본재	27.1	28.3	24.9	25.7	
	소비재	26.8	31.0	28.2	31.9	
미국	중간재	부품	33.2	19.7	32.3	19.1
		반제품	10.5	13.5	11.5	14.6
	자본재	26.0	28.4	25.2	27.3	
	소비재	28.8	37.4	29.4	37.8	
세계	중간재	부품	26.4	23.7	24.6	21.7
		반제품	24.4	26.9	25.7	28.0
	자본재	22.9	24.2	21.3	22.3	
	소비재	23.1	22.2	23.6	22.4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일 3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 3-4]는 동아시아지역의 생산공정별 상품의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 모두의 중간재 수출, 특히 반제품 수출은 주로 역내시장에 집중되고 증가추세인 데 반해, 대미 및 대 EU 수출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는 역내수출은 감소세인 데 반해 대EU는 증가세를 보였다.

1995~2009년 동아시아지역의 소비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세안+3국 및 아세안+6국 모두에서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3-4. 동아시아 국가들의 각 생산공정별 상품의 지역별 수출 비중

(단위: %)

구분		아세안+3		아세안+6		
		1995	2009	1995	2009	
중간재	부품	역내	37,5	44,4	37,6	44,0
		EU	15,1	11,4	15,1	11,7
		미국	27,9	12,4	27,6	12,5
	반제품	역내	49,5	53,0	48,8	50,1
		EU	9,9	9,4	10,1	10,2
		미국	9,5	7,5	9,4	7,4
자본재	역내	31,9	30,3	32,2	30,5	
	EU	17,3	15,7	17,3	15,6	
	미국	25,2	17,5	24,9	17,4	
소비재	역내	28,1	25,4	28,6	25,0	
	EU	16,9	18,7	17,6	19,2	
	미국	27,6	25,1	26,2	23,9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그 결과 2009년에는 이들 소비재 수출에서 역내시장의 비중이 가장 큰 시장이던 미국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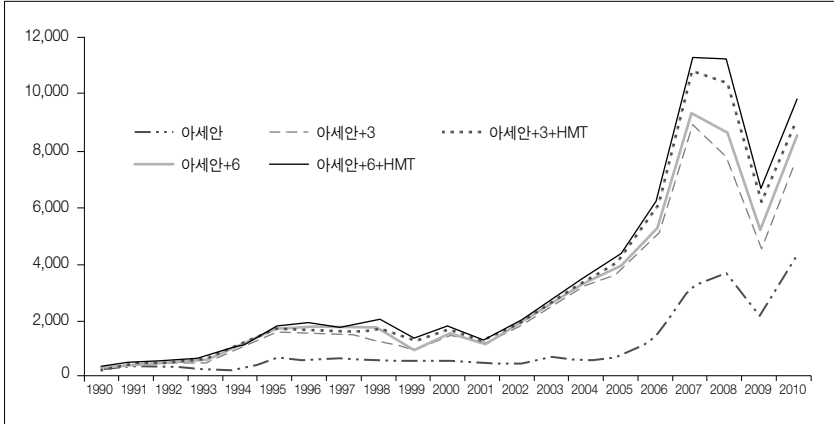
## 다. 역내투자

제2장에서 동북아의 역내투자는 한·중·일 3국간 역내투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지만 동아시아 역내투자는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의 대(對)동아시아 직접투자는 금액 면에서 대부분 일차적으로 1994년 1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며 2007년에 급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해 89억 달러(아세안+3국), 94억 달러(아세안+6국), 109억 달러(아세안+3+HMT), 113억 달러

그림 3-4. 한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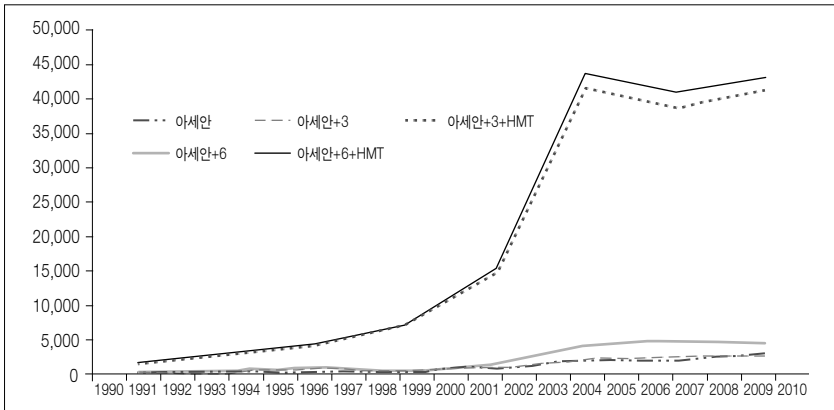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부표 18].

그림 3-5. 중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부표 19].

(아세안+6+HMT)를 기록하였다(그림 3-4 참고). 그러나 한국의 총 해외 직접투자 면에서는 2005년 투자 비중이 각각 38.2%, 40.5%, 42.7% 및 45.0%를 기록해 정점에 달했다(부표 18 참고). 그 후 2009년에 투자액이

급감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협의의 동아시아와 광의의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각각 78억 달러(23.4%) 및 98억 달러(29.6%)를 기록하였다.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아세안+3+HMT 및 아세안+6+HMT을 중심으로 2000년대 후반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중국의 직접투자가 주로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아세안+3+HMT 및 아세안+6+HMT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8년에 각각 415억 달러 및 435억 달러에 달해 중국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각각 74.2% 및 77.8%를 기록했으나, 같은 해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각각 22억 달러(3.9%) 및 42억 달러(7.5%) 수준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액 면에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9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후 2004년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3-6]에서 보듯이 2006년까지는 아세안+3국+HMT와 아세안+6국+HMT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아세안+6국과 아세안+6+HMT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빠른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2008년에는 아세안+6국과 아세안+6+HMT에의 투자가 각각 266억 달러 및 290억 달러에 달해 아세안+3국(152억 달러)과 아세안+3+HMT(175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다. 2010년에는 일본의 대아세안+6국과 아세안+6국+HMT 투자가 각각 264억 달러 및 284억 달러에 달해 일본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각각 46.2% 및 49.7%를 차지한 데 반해, 일본의 아세안+3국과 아세안+3국+HMT에 대한 투자는 각각 173억 달러 및 192억 달러에 달해 일본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각각 30.2% 및 33.6%를 점유하였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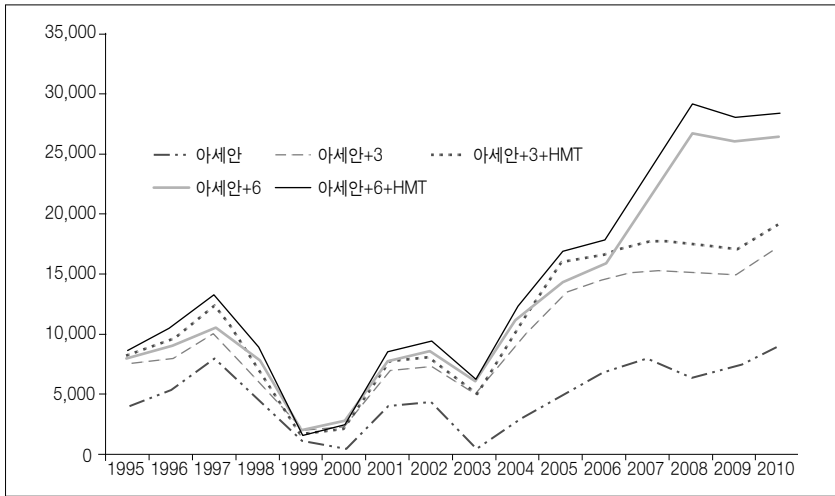
표 20 참고).

한·중·일 3국의 대동아시아 직접투자를 비교해 볼 때, 최근 중국의 아세안+3국+HMT와 아세안+6국+HMT에 대한 투자액이 크고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에 대한 투자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에서는 3국 중 일본의 직접투자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아세안+6국에 대한 투자가 아세안+3국에 대한 투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36)</sup>

그림 3-6. 일본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부표 20].

36)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동아시아 차원의 FTA 논의에서 아세안+3국보다 아세안+6국을 선호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2. 제도적 경제통합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각종 제도적 기반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아세안의 출범과 확대·심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해 온 FTA 현황을 역내 국가/지역간 FTA를 중심으로 점검해보며, 셋째, 이러한 역내 FTA의 확산과 동시에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차원의 FTA 관련 논의의 내용 및 진전 상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 1)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의 출범 및 확대·심화<sup>37)</sup>

아세안(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이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에 서명하면서 설립되었다.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가입하였고, 그 후 1995년 7월 베트남과 1997년 7월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에는 캄보디아가 회원국이 되었다.

1992년 1월에 아세안 6개국이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을 위한 특혜관세 양허표 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ce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에 서명함으로써 AFTA(ASEAN Free Trade Area)가 출범하였으며, 그 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

---

37) 아세안 내 제도적 진전 내용은 아세안사무국(<http://www.aseansec.org>) 자료 및 문서에 기초한다.

마 및 캄보디아가 아세안 회원국이 되면서 이에 추가로 가입하였다.<sup>38)</sup>

또한 1995년 12월 아세안 국가간 서비스 무역의 제약을 상당부분 제거하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이 서명되었으며, 1998년 10월에는 아세안 투자지역(AIA: ASEAN Investment Area) 설립을 목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이 서명되었다.<sup>39)</sup>

한편 아세안 역내무역,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에 이어 아세안 공동체 설립이라는 보다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통합구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은 아세안을 안정과 번영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아울러 역내 빈곤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인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치·안보협력,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협력 부문을 세 기둥으로 삼은 아세안 공동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아세안 협약 II(ASEAN Concord II)가 합의되었다.<sup>40)</sup> 이에 따라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아세안지역 경제통합의 목표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1월 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세안 정상

---

38) CEPT-AFTA 내용 관련 Lee *et al.*(2006), pp. 23-27 참고.

39) 1987년에는 아세안 투자보장협정(ASEAN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IGA, 혹은 ASEAN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라고도 알려짐)이 서명된 바 있다.

40) 혹은 발리 협약 II(Bali Concord II).

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설립을 2015년까지 가속화하자는 세부선언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2000년 아세안 정상은 역내 발전격차 축소 및 아세안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세안 통합계획(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에 합의하였으며, 추후 IAI 실행계획(Work Plan)(2002~08) 및 IAI 기본전략(Strategic Framework)과 제2 IAI 실행계획(2009~15)이 구체화되었다.

아세안 공동체의 핵심 부문인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작업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창립 40주년을 맞아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선언(Declaration 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이 채택되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최종 목표의 실현으로 경제통합을 심화·확대하려는 아세안 국가의 이해수렴에 기초한 것으로, ①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② 고도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지역, ③ 공평한(equitable) 경제발전 지역, ④ 글로벌 경제와 완전히 통합된 지역의 네 가지 핵심적 특징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 주요 사항별로 2년 단위(2008~09년, 2010~11년, 2012~13년, 2014~15년)의 우선실행 과제(priority actions)를 집계한 아세안 경제공동체 전략계획도 수립되었다. 예컨대 단일시장과 생산기지를 실현하기 위한 상품시장의 자유화 관련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를 2008~09년에 개선하고 2014~15년까지 아세안 6개국의 경우 민감품목이나 초민감품목 명단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제거하기로 되어 있다.

2009년 3월 태국 차암 후아힌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 선언(Cha-am Hua Hin Declaration on the Roadmap for the ASEAN Community (2009~15))이 이루어졌다. 아세안 정상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외에도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청사진,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청사진 및 IAI Work Plan 2(2009~15)가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을 구성하며, 아세안 각국은 이를 정시에 집행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007년 8월 필리핀 마카티에서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제통합 촉진조치로 1992년 체결한 CEPT-AFTA를 포괄적인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으로 격상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 5월 19일 ATIGA가 발효됨에 따라 상품무역 자유화로 2015년까지 아세안 단일시장과 생산기지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된 셈이다.

ATIGA의 발효로 기존 CEPT-AFTA에서 벗어나 아세안은 명실공히 다자간 FTA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외에도 상당 수준의 무역투자 원활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0년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경우 이는 FTA+ 차원의 지역경제공동체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투자 관련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서는 2008~09년에 AIA를 대체할 아세안 포괄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바, 2009년 2월 이 협정이 서명되었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간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아세안 헌장(ASEAN

---

41) 참고로 1957년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경제 통합 면에서 관세동맹을 지향하며 시작하였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EEC 간의 비교는 이창재 외(2005), pp. 140~141 참고.

Charter)이 2008년 12월 발효하였다는 점도 아세안 경제통합 및 아세안 경제공동체 설립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에 법적 지위와 제도적 틀을 부여함으로써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아세안 지역차원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의 기본틀(ASEAN Framework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채택하였다. 이는 아세안 정상들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아세안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차원 CEP는 보다 포괄적이며 기체결된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의 FTA들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이고, 준비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가입조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 CEP에서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상들은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부문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2) 아세안+3 체제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출범 및 전개<sup>42)</sup>

### 가) 아세안+3 체제

아세안+3 체제의 전개과정은 이 체제가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왔으므로 아세안+3 정상회의 시 합의사항과 의장 성명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그 전개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42)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내용은 아세안사무국(<http://www.aseansec.org>) 및 일본 외무성(<http://www.mofa.go.jp>) 정상회의 관련 자료에 기초한다.

아세안+3 정상회의가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한·중·일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후, 1998년 하노이에서는 이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고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 정상회의를 격상시키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협력, 통화·금융협력, 사회·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개발, 문화·정보부문 및 개발협력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제시하였다.

1999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과 아세안+3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이 결성되었고 그 결과보고서가 2001년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보고되었다.<sup>43)</sup>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부문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설립과 동아시아 투자지역을 위한 기본협정을 전 동아시아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도협력 부문에서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로 진화시키고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을 설립할 것을 건의하였다.

2000년 9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의 최종보고서가 2002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EASG의 최종보고서는 EAVG가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평가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비즈니스 협의회(East Asia Business

---

43)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2001);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1999-2004 (2005), p. 32.

Council) 설립을 비롯한 17개의 단기과제 및 EAFTA 형성, 동아시아 투자지역(East Asia Investment Area) 설립 및 아세안+3 정상회의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진화 추구 등을 비롯한 9개의 중·장기 과제 및 추가적 연구가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통합 공동체로의 심화가 바람직하나,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장기적 목표로 삼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과도한 회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무적 우려와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한·중·일 3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아세안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하였다.

2003년 제7차 아세안+3 정상회의 시 EASG 최종보고서 단기과제의 실행전략을 승인한 데 이어, 2004년 제8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은 EASG 단·장기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격려했다. 그리고 EAFTA 타당성 연구를 위해 전문가회의(Joint Expert Group)를 구성한다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아세안+3 정상들은 2005년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아세안 정상들의 결정을 지지하였고, 동시에 아세안+3 정상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의 주역(main vehicle)으로서 아세안+3 체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협력의 주된 추진세력(driving force)으로서의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2005년 12월 서명된 「아세안+3 정상회의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도 장기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공동결의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아세안+3 체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main vehicle)이라는 점

을 확신하면서, 아세안+3 정상들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아세안+3 정상회의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세안+3 협력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인도하고 정치적 모멘텀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세부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 양자간 스왑협정이 75억 달러로 확대된 것에 만족을 표했으며,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도 아시아 내 효율적 채권시장의 발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지하였다.<sup>44)</sup> 그리고 중국의 제안으로 진행된 EAFTA 타당성 연구 결과와 한국이 제안한 EAFTA 제2차 연구(EAFTA Phase II Study)를 환영하였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제2 동아시아 협력 공동성명과 아세안+3 협력 사업계획(ASEAN+3 Cooperation Work Plan) (2007~17)이 채택되었다. 제2 공동성명은 주로 아세안+3 체제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 등과 같은 제도적 목표보다는, 아세안+3국이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 등을 통한 번영의 동아시아를 구현하자는 다소 원칙적인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및 ABMI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향후 10년간 협력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재난관리, 광물 및 여성 문제의 새로운 4개 부문을

---

44)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아세안+3 재무장관이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들은 사업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아세안+3 협력기금(APTCF: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Fund)의 조기설립 계획을 승인하였다.

2009년 10월 태국 차암 후아힌 개최된 제12차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EAFTA Phase II Study 최종보고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고위경제관리들로 하여금 EAFTA 제1차 및 제2차 연구의 건의를 논의하고 고려할 것을 지시한 제12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AEM+3 Consultations, 2009년 8월, 방콕) 결정을 환영하였다.<sup>45)</sup> EAFTA와 CEPEA는 병행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sup>46)</sup>

그리고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2009년 9월, 발리)에서 합의한 1,200억 달러 규모의 CMIM의 2009년 말 이전 이행과 독립적 지역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정상들은 ABMI하에 지역 내 지역통화표시 회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의 초기자본을 지닌 신용보증 투자기구(CGIM: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설립 합의를 환영했다.

2010년 10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2010년 3월 24일 공식 출범한 CMIM과 2011년 초 개설될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AMRO: ASEAN Plus Three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환영하였고, 아세안+3 채권시장 포럼(ABMF: ASEAN Plus Three Bond Market Forum)과 2010년 말 개설될 CGIM 역시 환영했다. 또한 정상들은 아세안+3국으로부터 APTCF에 대한 기부금 300만 달러를

---

45) EAFTA의 내용은 이 장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참고.

46) EAFTA and CEPEA could be examined and considered in parallel.

환영하였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East Asian Vision Group II) 구성 제안도 감사를 표하며 받아들였다.

2011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실무작업반회의(APWGs: ASEAN Plus Working Groups)의 아세안+1 FTAs 통합 및 EAFTA와 CEPEA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격려하고, EAFTA와 CEPEA하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관련 새로운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는 중국과 일본의 공동제안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지역차원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의 기본틀(ASEAN Framework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채택한 것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정상들은 아세안이 일본과 중국이 공동건의를 고려하여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및 투자 부문의 아세안 플러스 실무작업반(APWGs)을 구성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2012년 초 구성될 상품교역 실무작업반은 기존 원산지규정, 관세분류체계 및 통관절차 관련 실무작업반들의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1997년에 출범한 아세안+3 협력은 그동안 확대·심화되어 왔다. 앞에서 지적된 동아시아 공동체나 EAFTA 설립과 관련 논의 및 금융협력 외에도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무역원활화, 발전격차 해소, 인력이동, 환경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아세안+3 협력의 다양화는 아세안+3 협력체제가 정상회의 외에도 17개 장관회의와 23개 고위관리회의 등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는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3 회원국 외에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따르면, EAS는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경제번영의 진전을 목적으로 폭넓은 전략적·정치적·경제적 공동이해 및 관심사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포럼이다. 또한 EAS는 개방적·포용적(inclusive)이고 투명하며 외향적(outward-looking)인 포럼이다.

EAS는 정치·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금융, 교육, 에너지, 재난관리 및 조류독감 예방 등이 우선관심 분야이다. 2007년 1월 세부에서 열린 제2차 EAS에서 동아시아 에너지안보 선언(Cebu Declaration on East Asian Energy Security)이 서명되었으며,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EAS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Energy and the Environment)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9년 차암후아헌에서 열린 제4차 EAS에서는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에 관한 공동언론성명이 발표되었고, EAS 재난관리에 관한 차암후아헌 성명이 채택되었다.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2007년 세부 정상회의에서는 EAS 16개 회원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연구(CEPEA: Track Two Study on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9년 차암후아헌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CEPEA Phase II 최종보고에 주목하고 고위경제관리들로 하여금 CEPEA 제1차 및 제2차 연구의 건의를

논의하고 고려할 것을 지시한 회원국 장관들의 결정(2009년 8월, 방콕)을 환영하면서 EAFTA와 CEPEA가 병행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sup>47)</sup>

2011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EAS에서 정상들은 경제통합 관련 지식, 혁신 및 개발전략 관련 경제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역내 개발격차의 축소를 위한 노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실무작업반회의 작업을 격려하고, 새로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자는 일본과 중국의 공동제안을 환영하였으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지역차원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의 기본틀」이 채택된 것에 주목하였다.

#### 다) 아세안+3 체제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비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1년에 EAVG가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로 진화시킬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대해 EASG 최종보고서(2002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장기적 목표로 삼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아세안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지도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졌던 듯하다. 다나카 히토시에 의하면, 일부 아세안 지도자들은 공동체 건설은 아세안+3 체제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에 아세

---

47) 이는 앞서 기술한 EAFTA 최종보고에 대한 아세안+3 정상회의 의장 성명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경우 13개국이 정상회의를 순번제로 개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아세안 지도자는 포럼이 확대될 경우 동북아 국가에 비해 약한 아세안 국가의 발언권이 희석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고, 결국 아세안+3 정상회의는 그대로 지속되었다.<sup>48)</sup>

문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아세안 국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아세안+3 정상회의를 지속키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에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문제의 해답은 이 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이름만 같지 실제로는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sup>49)</sup>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회원국의 구성이다. 후자에는 아세안+3국 외에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아세안+3국 그룹과 아세안+6국 그룹이 병존하게 된 것이다. 보다 근본적 차이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진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참여국들이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구인 데 반해, 후자에서는 여전히 아세안과 6국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EAS 창립회의의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도 EAS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아세안 국가가 주최하고(host) 의장국이 되며(chair) 아세안 연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back-to-back) 개최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50)</sup>

---

48) Tanaka(2006).

49) 영문으로는 전자는 East Asian Summit이나 후자는 East Asia Summit이다.

50) 이와 같은 근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EAS가 EASG 장기과제에서 진화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따라서 향후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차이점은 그 성격과 주된 관련 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EAS는 개방적·포용적(inclusive)이고 투명하며 외향적(outward-looking)인 포럼임을 명시한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는 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와 차별화된 면을 보인다. 또한 아세안+3 체제는 현재까지 17개 장관회의와 23개 고위관리회의라는 하부구조를 지니고 있는 협력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반면 EAS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던 CEPEA 공동연구와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결정과 정상회의의 합의 및 승인하에 진행되었던 EAFTA 공동연구는 그 차별성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sup>51)</sup> 그 결과, 이들 공동연구의 후속조치인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4개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을 위한 참여국 범위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작업반 운영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EAS간에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세안+3 정상회의뿐 아니라 EAS 창립회의에서도 아세안+3 체제가 장기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달성하기 주요 수단(main vehicle)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2005년 8월까지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였던 다나카 히토시는 EAS 형성과 관련, ‘일본 관리들은

---

까지 EAS의 의장 성명이나 선언에서는 EASG 장기과제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1)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에서 이들 공동연구에 대해 거의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아세안+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핵이며,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같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확대된 EAS와 같은 지역포럼은 지역통합에 포용적이며 보완적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EAS는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중적 접근방식에 대해 양 정상회의의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았다.<sup>52)</sup>

그러나 EAS 창설과정에서 제시된 이상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과정 중 발생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라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의 이중 접근방식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2011년 11월 제6차 EAS부터 EAS의 정식 회원국이 됨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라는 이중접근 함수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추가적인 변수로 등장하였다.

##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중 많은 FTA가 이미 실행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협상 중인 FTA 및 공동연구나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는 준비단계에 있는 FTA도 상당수에 달한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무역협정은 한국·방글라데시·인도·

---

52) Tanaka(2006).

표 3-5. 동아시아 국가·지역의 FTA 추진 현황

국가	실행 / 서명		협상		제안	합 계
	실행	서명	FTA 서명/ 협상 중	협상 중		
한 국	8(4)	1	2	5(2)	15(10)	31
중 국	12(8)	0	2(1)	4	7(6)	25
일 본	12(9)	1	0	2(1)	7(6)	22
싱가포르	18(13)	3	1	9	4(2)	35
태 국	11(11)	0	4(1)	3	6(3)	24
말레이시아	10(9)	2	1	5(1)	6(3)	24
브루나이	8(8)	0	2	1	4(2)	15
인도네시아	7(7)	1	2	3(1)	6(3)	19
필 리 핀	7(7)	0	0	1	4(2)	12
베 트 남	7(7)	0	1	2	5(3)	15
라 오 스	8(8)	0	0	1	2(2)	11
미 안 마	6(6)	0	1	1	2(2)	10
캄보디아	6(6)	0	0	1	2(2)	9
호 주	8(4)	0	2(1)	8(5)	3(1)	21
뉴질랜드	9(8)	0	1	5(2)	3(2)	18
인 도	13(6)	0	4(1)	8(2)	8(3)	33
홍 콩	2(2)	1	0	0	1	4
대 만	5(1)	0	1	1	1	8
몽 골	0	0	0	0	3(3)	3

주: ( ) 안의 숫자는 역내국가와의 FTA임(2011년 7월 현재).  
 자료: ADB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보완.

라오스·스리랑카 5개국이 1975년에 서명하고 1976년 6월에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다. 2001년 중국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원래 방콕협정으로 불렸던 이 협정은 2005년 11월 개명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태국과 라오스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들 협정은 특혜무역협정으로 허용조항(Enabling Clause) 하에 GATT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2년 1월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 아세안 6개국이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서명하였으며, 그 후 베트남(1995년), 라오스, 미얀마(1997년) 및 캄보디아(1999년) 등이 아세안 회원국이 되면서 이에 추가로 가입하였다.<sup>53)</sup>

21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에서도 본격적으로 GATT 24조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싱가포르-뉴질랜드 간 FTA가 2001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일본-싱가포르 간 FTA는 2002년 1월 서명되고 2002년 11월에 발효되었다.<sup>54)</sup>

[표 3-6]은 동아시아 국가·지역 간의 FTA 추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와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이 체결한 FTA 중 대부분이 역내 국가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1년 7월 현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에 발효된 FTA가 전부 역내 국가와 이루어졌다는 점은 역내 국가간 FTA 집중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세안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 2004년 11월 서명되었고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이 각각 2007년 1월 및 2009년 8월에 서명됨으로써 2010년 1월 아세안-중국 FTA가 완성되었다.<sup>55)</sup> 아세안과 한국 간

---

53) AFTA도 GATT 24조가 아닌 허용조항(Enabling Clause)하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이거나 AFTA는 GATT에 FTA로 보고되었다(<http://rtais.wto.org>).

54) 호주와 뉴질랜드를 동아시아로 간주할 경우 동아시아 최초의 FTA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 1983년에 이루어졌던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ANZCERTA)이다.

55) 아세안 사무국(<http://www.aseansec.org>).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은 각각 2005년 1월 및 2007년 7월에 발효되었다[WTO 자료(<http://www.rtais.wto.org>)].

표 3-6. 동아시아 국가·지역 간 FTA 추진 현황

국가	실행 중	협상 중	제안
한국	AP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한·중·일, EAFTA, CEPEA
중국	APTA, 홍콩, 마카오, 아세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대만	호주	인도, 한국, 몽골, 한·중·일, EAFTA, CEPEA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아세안, 베트남, 인도	호주	한국, 뉴질랜드, 몽골, 한·중·일, EAFTA, CEPEA
싱가포르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뉴질랜드, 호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TPSEPA		EAFTA, CEPEA
태국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일본, 라오스,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한국, EAFTA, CEPEA
말레이시아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한국, EAFTA, CEPEA
브루나이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일본, TPSEPA		EAFTA, CEPEA
인도네시아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일본	호주	인도, EAFTA, CEPEA
필리핀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일본		EAFTA, CEPEA
베트남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일본		한국, EAFTA, CEPEA
라오스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AFTA, 태국		EAFTA, CEPEA
미얀마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EAFTA, CEPEA
캄보디아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EAFTA, CEPEA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CEPEA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태국, 중국, 아세안, 말레이시아, TPSEPA, 홍콩	한국, 인도	일본, CEPEA
인도	APTA, 아세안,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CEPEA
홍콩	중국, 뉴질랜드		
대만	중국		
몽골			한국, 중국, 일본

주: 2011년 7월 현재. 밑줄 친 국가는 아세안 차원에서 체결한 것임.  
 자료: ADB 자료를 토대로 저자 보완.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은 각각 2006년 8월과 2007년 11월에 서명되어 2007년 6월 및 2009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서명된 후 2009년 9월에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한국 FTA도 2010년 1월 완결되었다.<sup>56)</sup> 일본과는 2008년 4월 아세안-일본 CEP(ASEAN- 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하였으며, 이 협정은 2008년 12월 발효되었다.<sup>57)</sup> 아세안과 인도 간 상품무역협정은 2009년 8월 서명된 후 2010년 1월 발효되었으며,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아세안과 호주-뉴질랜드 간 FTA는 2009년 2월 서명되었다.<sup>58)</sup> 따라서 아세안은 한·중·일 3국을 비롯한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등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들과 거의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더욱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차원의 FTA 외에도 이들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뉴질랜드,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및 중국과 아세안보다 앞서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sup>59)</sup> 또한 일본은 싱가포르 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sup>60)</sup> 중국도 싱가포르 외에 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

56)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의 경우 초기 태국이 제외된 아세안 9국만이 참여했으며, 태국은 2009년 2월에 이들 협정에 가입하였다[아세안 사무국(<http://www.aseansec.org>)].

57) ASEAN-Japan CEP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 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무역과 투자의 경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상품무역협정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58) 현재 모든 당사국이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의 비준을 마친 상태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2011년 1월에 발효되었고, 인도네시아는 2011년 5월 비준을 마친 후 관련법을 정비 중이다[아세안 사무국(<http://www.aseansec.org>)].

59) 싱가포르 정부(<http://www.fta.gov.sg>).

60) 베트남과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만 아세안-일본 CEP 이후에 체결되었다[일본 외무성(<http://mofa.go.jp>)].

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양자간 FTA 추진을 시도 중이다. 또한 호주는 태국과의 FTA 체결 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FTA 협상 중이고, 뉴질랜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각각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는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태국과 FTA를 협상 중이고 인도네시아와의 FTA를 준비 중이다.

한편 아세안 대화상대국 간에도 양자간 FTA가 추진되고 있다. 인도는 한국·일본과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뉴질랜드와는 FTA 협상 중이며, 중국과의 FTA는 준비단계이다. 호주는 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한국 및 인도와 FTA 협상 중이고 일본과의 FTA는 준비단계이다.

한국은 인도와의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과는 FTA 준비 중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와 FTA 협상 중이며, 인도 및 한국과는 FTA 준비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인도와 FTA 체결 후 호주와 FTA 협상 중이며, 한국 및 뉴질랜드와는 FTA 준비하고 있다.

아세안 대화상대국 간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볼 때, 양자간 FTA의 진척이 늦은 준비단계는 한·중 FTA, 한·일 FTA, 중·인도 FTA 및 일·뉴질랜드 FTA이며, 유일하게 중·일 FTA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FTA 외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수 포함된 FTA가 존재한다. 그 중 TPSEPA(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및 칠레 간에 2005년 6월 서명되었고, 2006년 5월에 발효되었다. 그 후 호주·말레이시아·페루·미국·베트

남 5개국이 여기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sup>61)</sup> 그리고 한·중·일 FTA, 아세안+3국간 EAFTA(East Asia FTA) 및 아세안+6국간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등이 준비단계에 있다.<sup>62)</sup>

여타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 각각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에 2003년 6월 및 10월 서명한 후 대만과는 2010년 6월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홍콩과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한·중·일 3국은 각각 몽골과 FTA가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2011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및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sup>63)</sup> 태국과 말레이시아와는 FTA 협상 중이며, 대만과는 FTA 제안단계에 있는 데 반해, 러시아는 한국과 인도와 FTA도 제안단계에 있을 뿐이다.

2011년 11월 4일 현재 WTO에 신고되었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211건이다. 그 중 60개에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를 포함한 광의의 동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역내 국가·지역간 FTA는 31건으로 집계된다.<sup>64)</sup>

---

61)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에서 TPSEPA는 동아시아 역내 FTA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개국이 가입 신청 중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동아시아 역내 FTA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2) 이 FTA는 다음 절과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63) 그 중 한국과 체결한 FTA만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64) WTO(<http://www.rtais.wto.org>)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산출한 수치이다.

## 다. 동아시아 FTA 논의

### 1) 배경 및 개요

1990년대 이미 지역주의가 세계적 추세가 되었고, 지역주의의 본산인 유럽에 이어 북미에서도 NA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세계 주요 경제지역 중 동아시아만 지역차원의 FTA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21세기 초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 FTA 조류에 합류하기 시작할 즈음, 2001년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EAFTA) 형성과 동아시아 투자지역 형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2년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은 EAFTA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AEM+3: ASEAN Plus Three Economic Ministers' Meeting)의 결정과 아세안+3 정상회의의 승인에 따라 EA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그룹(joint expert group)이 구성되었으며, 중국이 제안한 이 공동연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간 네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친 후 그 결과가 2006년 8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EM+3에서 보고되었다.<sup>65)</sup> 아울러 AEM+3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제2차 EAFTA 공동연구(EAFTA Phase II Study)를 추진키로 결정하였고, 아세안+3 정상들은 2007년 1월 세부에서 이를 환영하였다. 제2차 EAFTA 공동연구는 2007년 5월에서 2009년 6월간 다섯 차례의 전문가

---

65) 제1차 회의와 제4차 회의는 베이징, 제2차와 제3차 회의는 각각 자카르타와 도쿄에서 열렸다.

회의를 가졌으며,<sup>66)</sup> 2008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EM+3에서 중간보고(progress report) 후, 최종결과는 2009년 8월 방콕에서 열린 AEM+3에서 보고되었다.<sup>67)</sup>

한편 아세안+6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공동연구가 일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1월 세부에서 개최된 제2차 EAS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16개 회원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연구(CEPEA: Track Two Study on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가 출범하였다. 2007년 6월 도쿄에서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8년 6월까지 여섯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친 후 일차적으로 2008년 11월 제3차 EAS에서 그 진척상황이 보고되었다. 2008년 11월 도쿄회의에 이어 2009년 7월 자카르타 회의까지 네 차례의 추가 전문가회의 후 최종결과는 2009년 8월 아세안+6 장관 오찬회의에 이어 2009년 10월 제4차 EAS 정상회의에서 보고되었다.

## 2) 논의의 내용

### 가) EAFTA 공동연구<sup>68)</sup>

EAFTA 타당성 연구는 13개국 22명의 전문가그룹(joint expert group)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① EAFTA의 필요성, ② EAFTA의 경제적 효과, ③

---

66) EAFTA Phase II Study 전문가 그룹은 제1차 공동연구에 비해 일부 변경되었다. 제1차 회의와 제5차 회의는 서울, 제2차, 제3차 및 제4차 회의는 각각 베이징, 하노이 및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67) 그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보고되었다.

68) 이 부분은 관련 공동연구 결과보고서인 Report by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2006) 및 Final Report on EAFTA Phase II Study(2009) 외에도 필자가 이들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경험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EAFTA의 방식과 범위, ④ EAFTA 추진 로드맵, ⑤ 주요 정책 건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동연구는 네 명의 전문가가 각각 장별 내용의 작성하고 전 연구진이 토론을 거치면 주최측인 중국이 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한 후, 이 초안을 다시 전 연구진이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정책 건의는 다음과 같다.

EAFTA의 필요성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정치적 이해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다. EAFTA의 경제적 효과는 AFTA, 아세안+1 FTA 및 어떤 양자간 혹은 소지역 내 지역무역협정보다도 크다. 아울러 EAFTA는 동아시아 국가간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제고하고 대화와 접촉을 제도화하며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EAFTA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생산 및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AFTA는 최소한 동아시아 국가 전체의 GDP를 1.2% 증가시키고 경제적 후생을 1조 460만 달러만큼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표 3-7 참고).

동아시아는 범위의 포괄성 및 무역과 투자의 개방도 면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해야 한다. 즉 모든 부문에서 대폭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무역·투자 원활화와 개발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EAFTA는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고 생산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동아시아 국가간 발전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모든 회원국이 편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협상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택해 기존의 동아시아 역내 FTA보다 앞서 나가야 하며, 이러한 조건하에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표 3-7. EAFTA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

국가	GDP 증가(%)	후생 증대(백만 달러)
중 국	1.66	18,230
일 본	0.44	29,844
한 국	3.54	18,845
인도네시아	1.74	4,498
말레이시아	5.83	10,420
필 리 핀	4.02	3,410
싱 가 포 르	4.21	7,509
태 국	4.50	8,798
베 트 남	2.83	3,029
아 세 안	3.64	37,663
한 중 일	0.92	66,919
아 세 안+3	1.18	104,582

자료: Report by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2006), p. 12.

EAFTA는 아세안+3국간 먼저 협상되어야 하며, 회원국 자격은 여타 동아시아 경제 및 EAS 회원국에 개방될 것이다. 그리고 저개발국을 돕기 위해 EAFTA에 개발협력 관련 특별행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EAFTA 공동연구진은 2006년 개최되는 제 10차 아세안+3 정상회의의 경제협력 어젠다에 EAFTA를 포함시킴으로써, 2007년 제2 동아시아 협력 공동성명의 주요 과제로 EAFTA 형성을 위한 조치(independent process)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정상들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아세안+1 FTAs 협상이 아직 추진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야심찬 제안은 아세안+3 장관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책건의는 수용되지 못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EAFTA에 관한 심층연구인 제2차 EAFTA 공동연구(EAFTA Phase II Study)가 시작하게 된다.

제2차 EAFTA 공동연구는 13개국 18명의 전문가 및 아세안 사무국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① EAFTA의 필요성, 장애요인 및 유형(options), ② 원산지규정, ③ 상품무역, ④ 서비스 및 투자, ⑤ 무역·투자 원활화, ⑥ 협력, ⑦ 주요 정책 건의로 구성되어 있다. EAFTA 타당성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몇몇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전 공동연구에 비해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보다 다수의 연구진이 초고작성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세안+3 장관들을 설득해 EAFTA 형성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최종보고서에는 공동연구의 극히 일부만 포함되었다.

제2차 EAFTA 공동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에서 지적한 EAFTA의 경제적·정치적 필요성 외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새롭게 부각되는 필요성과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지닌 역내 FTA의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역내교역의 거래비용 및 생산네트워크의 생산비용 증가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EAFTA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 무역자유화 시 민감한 부문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다수의 FTA를 체결한 아세안 국가들에 EAFTA라는 동아시아 차원의 거대한 FTA는 정치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과 각기 FTA를 체결한 아세안 입장에서 EAFTA가 과연 어떠한 추가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세안 정치인, 관리 및 일반 국민에게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2차 연구는 제1차 연구에서 상정했던 높은 수준의 최적의 EAFTA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식(gradual and realistic approach)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69)</sup>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에 추가적인 이익을 주고(desirable) 실현 가능하며(feasible) 저개발국 친화적인 EAFTA 초기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1 FTAs, 즉 아세안·중국 FTA, 아세안·한국 FTA 및 아세안·일본 FTA가 체결된 시점에서, 제2차 EAFTA 연구는 이들 아세안+1 FTAs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원산지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상품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세안+1 FTAs의 양허 스케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단지 이들 상품무역협정 내용의 조화시키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비스와 투자의 중요성 및 기존 아세안+1 FTAs에서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결여나 낮은 수준을 감안하여 이들 협정들에서는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역·투자 원활화 및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존 다수의 조치들이 지역차원에서 조율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제2차 연구는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EA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무역·투자 원활화 조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금조달 장치 및 재원이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AFTA Phase II Study는 이러한 구체적인 초기 EAFTA 모형 제시와 함께 동아시아 정상들에게 EAFTA를 2009년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

---

69) 제1차 EAFTA 공동연구 시 높은 수준의 FTA를 주장하였던 필자도 EAFTA Phase II Study의 책임자로서는 보다 현실적인 EAFTA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아세안 시각에서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EAFTA 모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의 주요한 경제 어젠다로 채택할 것과 구체적으로는 EAFTA 형성을 위한 준비를 위해 원산지규정 단일화 및 관세분류체계(tariff nomenclature)와 통관 이슈 관련 두 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 나) CEPEA 공동연구<sup>70)</sup>

일본 측 제안으로 시작된 CEPEA 공동연구는 제2차 EAFTA 공동연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sup>71)</sup> 16개국 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행된 본 연구에서 제1차 연구는 ① 동아시아 경제통합, ② CEPEA의 목적, ③ CEPEA의 경제적 효과, ④ CEPEA의 구성요소(elements), ⑤ CEPEA의 체계와 로드맵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연구의 경우 ① 서론, ② 2008년 8월 보고 이후의 전개, ③ 경제협력, ④ 원활화, ⑤ 자유화, ⑥ 제도적 발전, ⑦ 결론 및 향후 단계로 구성되었다.

CEPE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심화, 역내 발전격차 축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CEPEA의 경제적 효과는 자유화와 원활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아세안+6국 전체의 GDP가 1.30% 증가하며, 경제협력까지 포함될 경우 GDP가 2.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PEA는 경제협력, 무역·투자 원활화 및 무역·투자 자유화를 세 기둥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환경과 에너지 및 ICT도 포함하고 있

---

70) 이 소절은 관련 공동연구 결과보고서인 Report of the Track Two Study Group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CEPEA)(2008) 및 Phase II Report of the Track Two Study Group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CEPEA)(2009) 외에 필자가 이들 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71) CEPEA 공동연구 역시 제2차 EAFTA 공동연구가 제안되었던 2006년 8월 AEM+3에서 제안되었으나, 반대에 부딪쳐 EAS하에서 추진되었다.

다. 특히 이와 같이 포괄적인 CEPEA의 대상이 CEPEA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야기하고 있다.

CEPEA 공동연구에서는 EAFTA 공동연구와 달리, 연구진들이 CEPEA의 성격규명을 위해 상당 시간을 소요하였다. 다수 연구자가 EAFTA 제1차 연구에 참여하였거나 EAFTA 제2차 연구에 참여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양 공동연구 간의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당수 연구진은 CEPEA에서 자유화보다 경제협력과 원활화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FTA와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CEPEA 세 기둥의 우선순위를 경제협력, 원활화, 자유화 순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초기 자유화, 원활화, 경제협력 순으로 되어있던 것을 보고서 서술 시에는 경제협력, 원활화 및 자유화 순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세 기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견해는 번복하지 않아 결국 CEPEA가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로 FTA 대신 사용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같이 일종의 FTA라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정책 건의에서는 CEPEA 목적과 체계에 대해 동아시아 정상차원에서 재차 단언하고, CEPEA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논의를 관련 정부간 시작하며, 그 외에도 경제협력 조치의 현황, 아세안+1 FTAs 이행상황, 원산지규정의 개선 및 조화, 경제협력, 원활화 및 자유화 관련 향후 정부간 협상 및 이행 일정표 등에 대한 정부간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건의하였다.

### 3) 논의의 진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차 EAFTA 공동연구와 CEPEA 공동연구의 결과보고가 2009년 8월 AEM+3에서 동시에 행해졌다.<sup>72)</sup> 이 회의에서 아세안+3 장관들은 제2차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에 따라 ① 원산지규정, ② 관세분류체계(tariff nomenclature), ③ 통관 이슈, ④ 경제협력 관련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고위관리회의(SEOM+3: ASEAN+3 Economic 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합의하도록 하였다.

2009년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공식 SEOM+3에서 실무작업반에 참여하는 국가를 중국과 일본이 각각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으로 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함에 따라 결국 실무작업반 참여범위를 정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작업반은 아세안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 차원의 FTA 논의는 전문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 논의로 격상되었지만, 참여국 범위를 둘러싼 대립, 즉 EAFTA를 선호하는 중국과 CEPEA를 선호하는 일본 간의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2011년 8월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개최된 아세안+3 및 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2년간 실무작업반에서 진행되어 온 정부간 논의결과를 2011년 11월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세안이 한·중·일 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각각 체결한 FTA 협정문을 분석, 공통

---

72) 실제 제2차 EAFTA 공동연구 결과는 AEM+3 회의에서 보고되었고, EAS 경제장관회의가 없는 상태에서 CEPEA 결과보고는 같은 날 아세안+6 경제장관이 참여하는 오찬 회의(working luncheon)에서 이루어졌다.

점을 기준으로 표준문안(template)을 작성하여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실무작업반 논의결과를 평가한 후, 향후 작업 방향을 건의할 예정이었다.<sup>73)</sup>

그러나 2011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표준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아세안 입장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지역차원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의 기본틀』만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 기본틀에서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 정상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및 투자 부문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의 의장 성명에 따르면, 정상들은 아세안이 일본과 중국의 공동건의를 고려하여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및 투자 부문의 아세안 플러스 실무작업반(APWGs: ASEAN Plus Working Groups)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2012년 초 구성될 상품교역 실무작업반은 기존 원산지규정, 관세분류체계 및 통관절차 관련 실무작업반의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직까지 실무작업반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세안이 그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1년 8월 14일).

##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2. 동아시아 FTA
3. 한·중·일 FTA



20세기 후반부터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의 공장이 된 동아시아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1세기에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능적 경제통합이 심화될 뿐 아니라 제도적 경제통합도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지역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가늠해 본 후,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동아시아 FTA 및 한·중·일 FTA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시에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FTA의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이 절에서는 동아시아 시대 도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였던 위상을 되돌아보고, 최근 발표된 동아시아의 장기적 경제전망을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가능성과 변수 및 동아시아 FTA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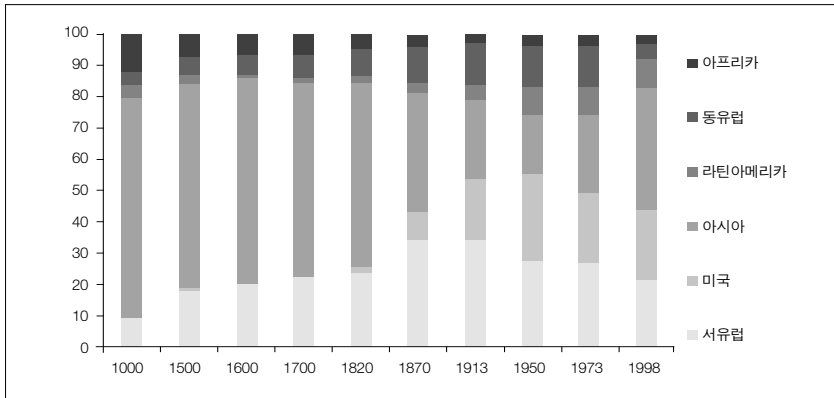
###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매디슨(Maddison)에 따르면, 1000년에 전 세계 경제의 70.3%에 달했

던 아시아 경제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 1700년과 1820년에 각각 61.7% 및 59.2%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아시아 경제 비중은 급감하여 1950년에는 18.5%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 후 20세기 후반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아시아는 20세기 말(1998년) 전 세계 GDP의 37.2%를 점유하였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전 세계 GDP의 지역별 점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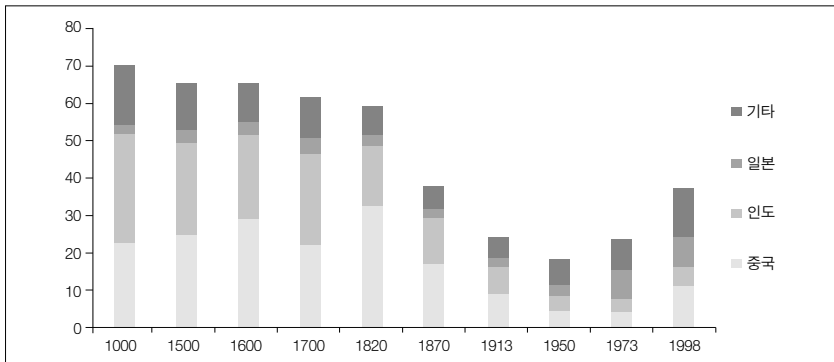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부표 21].

그림 4-2. 아시아 주요국의 세계 GDP 점유 비중

(단위: %)



자료: [부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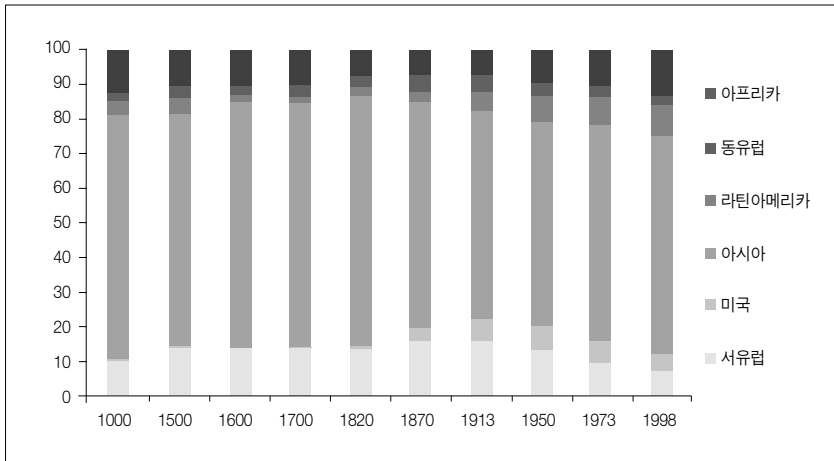
중국과 인도, 일본만을 별도로 살펴볼 경우, 1820년까지는 이들 3국 경제의 비중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으나,<sup>74)</sup> 그 후 역시 급락세를 보여 1950년에는 11.7%로 축소되었으며, 20세기 후반 다시 반등하여 1998년에는 24.2%를 기록하였다.

반면 1000년 전,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했던 서유럽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였으며, 20세기 말에는 그 비중이 1/5로 감소했다. 그리고 1820년, 전 세계 경제의 1.8%를 점유하였던 미국은 1950년에는 그 비중이 27.3%로 증가해 서유럽(26.3%)을 추월하였으며, 1998년에는 21.9%에 달했다.

한편 전 세계 인구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0년 68.2%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1820년에 다시 100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 후 하락

그림 4-3. 전 세계 인구의 지역별 점유 비중

(단위: %)



자료: [부표 23] 참고.

74) 중국의 경제가 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20년경 이후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Ferguson(2011), p. 322.

하여 1913년에 54.5%까지 축소되었으며, 20세기 후반 다시 상승세를 보여 1998년에는 59.5%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상당부분 아시아의 높은 인구비중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0년과 1500년에는 아시아 경제비중이 인구비중을 다소 상회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시아 인구비중에 비해 아시아 경제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950년에는 아시아 인구비중이 54.7%에 달했으나, 경제비중은 그 1/3 수준인 18.5%에 불과하였다. 20세기 후반 아시아 경제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 현재 아시아 경제비중(37.2%)은 인구비중(59.5%)의 2/3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ADB는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에서 아시아가 최근에 기록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2050년에는 세계 GDP의 52%를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그림 4-4 참고). 이 경우 아시아는 300년 전 산업혁명 이전에 누렸던 강력한 경제적 위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아시아 GDP는 환율기준으로 2010년 17조 달러에서 2050년 174조 달러에 달해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비중이 세계 인구에서의 비율과 비슷해진다.<sup>7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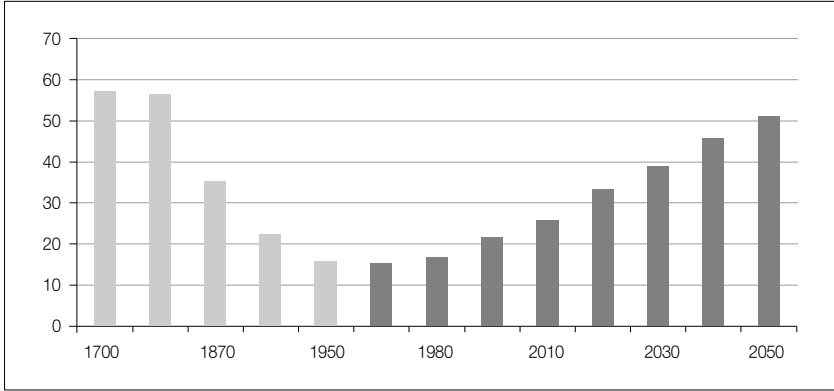
그리고 ADB는 아시아의 이와 같은 번영을 위한 행진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 7개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

---

75) ADB(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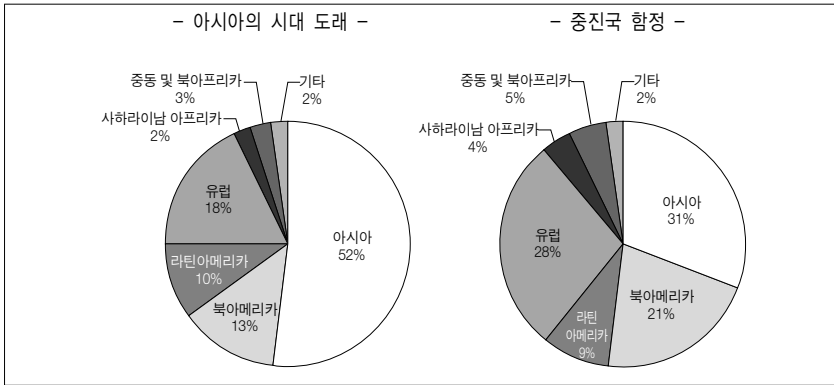
그림 4-4. 아시아 지역의 세계 GDP 비중 전망(1700~2050년)

(단위: %)



자료: ADB(2011).

그림 4-5. 아시아 성장 시나리오별 성장 전망



자료: ADB(2011).

고 밝히고 있다. 2010년 이 7개국의 인구는 31억 명(아시아의 78%), GDP는 15.1조 달러(아시아의 87%)에 달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는 이 7개국이 아시아 인구와 GDP의 각각 75% 및 90%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

표 4-1. 주요국의 경제규모 전망

	GDP 점유 비중(%)					1인당 GDP(달러, 2005 PPP 불변)				
	2010	2020	2030	2040	2050	2010	2020	2030	2040	2050
OECD	73.4	64.0	52.6	42.4	34.0	29,749	35,741	40,955	46,110	51,744
EU-27	28.1	23.6	18.5	14.2	10.9	27,427	32,985	37,254	41,247	45,532
미국	25.4	22.7	19.7	17.0	14.5	40,566	47,399	53,784	60,925	68,564
중국	8.8	15.9	23.8	28.5	28.0	6,400	14,196	27,329	44,589	63,521
인도	2.8	4.3	6.6	9.3	11.7	2,917	5,109	9,054	15,321	23,913
일본	9.3	8.0	6.2	4.5	3.3	30,394	36,532	42,564	46,727	51,275
소계	21.0	28.2	36.5	42.3	43.0	13,237	18,612	26,316	35,546	46,236
세계	100	100	100	100	100	10,197	13,968	19,250	26,060	34,158

자료: Fouré, Jean, Agnès Bénassy-Quéré and Lionel Fontagné(2010).

며, 일인당 소득은 4만 5,800달러(PPP)로 세계 일인당 평균소득(3만 7,300달러)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DB는 아시아 중소득국이 저임금 노동과 자원에 기초한 성장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여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경우, 2050년 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ADB의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아시아 세기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2050년에는 세계경제의 45% 이상을 점유하고 일인당 평균소득도 세계 일인당 평균소득 수준을 상회하게 될 전망이다.

[표 4-1]은 프랑스 CEPII가 예측한 세계경제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CEPII는 중국·인도·일본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50년에는 43.0%에 달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미국 및 EU(27개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하고, 2050년에는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도 큰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리고 CEPII는 2050년에 아세안+6+HMT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76)</sup> 반면 미국과 EU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아시아는 1870년까지 경제규모 면에서 서유럽을 능가하였으나, 19세기 말경 산업혁명에 힘입은 유럽은 경제규모 면에서 아시아를 추월한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추월되기 이전까지 경제규모 면에서 최대 지역이었다(그림 4-1 참고). 따라서 경제규모 면에서 볼 때 19세기 및 20세기 전반까지는 서유럽의 시대라 부를 수 있고, 20세기부터 후반부터는 미국의 시대라고 하겠다.

1998년 아시아는 경제규모 면에서 다시 미국과 서유럽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아시아 인구가 미국과 서유럽 인구의 각각 12배 및 9배에 달하기 때문이며, 일인당 평균소득 수준은 세계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점부터 동아시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DB는 아시아 시대의 실현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2050년 아시아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해 300년 전 아시아가 보유하였던 경제적 위상을 회복할 경우를 상정한 듯하다.

이 연구의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은 보다 소박하다. 동아시아 경제가 급

---

76) 48.3%는 ASEAN+6+HMT에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대만 및 마카오가 제외된 수치이다.

락하기 이전인 1820년에 가졌던 위상을 회복하는 시점을 목표로 삼되 인구의 변화를 감안하고자 한다. 즉 1820년 동아시아 사람들이 향유하던 상대적 소득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개막의 1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경제규모라는 1차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차 기준으로 평균소득 수준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약 200년 전 경제추정치의 한계, 아시아에서 국별 통계는 중국, 일본 및 인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제약 및 구매력 기준의 통계와 환율기준 통계를 혼합하여 산출해야 하는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을 추산해 보려는 것은 이 기준점이 동아시아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를 크게 아세안+3+HMT 혹은 아세안+6+HMT로 상정하는데, 후자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아세안+3+HMT를 동아시아로 간주하기로 한다.

아시아 경제는 1820년 세계경제의 59.2%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37.2%에 달했으며, 동아시아 2국(중국·일본)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9%에서 19.2%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1820~1998년 동안 아시아 및 동아시아 2국이 전 세계에서 점유하는 인구의 비중은 각각 68.3% 및 39.6%에서 59.5% 및 23.1%로 감소하였다(부표 21~24 참고).

여기서 향후 아시아 및 동아시아 2국의 인구가 세계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1998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아울러 이 지역의 일인당 GDP의 세계 일인당 GDP 대비 상대적 수준이 1820년의 상대적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아시아 및 아시아 2국의 경제의 비중은 각

각 51.5% 및 20.9%에 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규모 면에서 아시아 시대 기준점은 51.5%가 될 것이고, 동아시아 시대 기준점은 28.7%가 될 것이다.<sup>77)</sup>

동아시아 시대의 추가 기준인 일인당 평균소득 수준과 관련,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 수준이 세계 일인당 평균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동아시아가 경제규모 면에서 상당한 위상을 보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평균소득 면에서 세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경우 2010년 아세안+3+HMT 지역의 경제규모는 환율기준으로 세계경제의 23.7%를 차지해 미국(23.1%)을 추월하고 EU(23.8%) 수준에 접근하였다(표 3-1 참고). 그러나 2010년 동아시아(아세안+3+HMT)의 일인당 GDP는 미국과 EU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치의 7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경제에서 2010년 현재 동아시아가 점유하는 23.7%의 비중이 28.7% 이상으로 상승하고, 아울러 2010년 세계 일인당 평균소득 수준의 75%에 머문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 수준이 100%를 돌파하는 순간이 동아시아(아세안+3+HMT)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ADB의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어 2050년 아시아 경제의 비중이 52%에 달하고 아시아 인구의 비중도 이와 비슷할 경우 2050년경에 아시아 시대로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B의 낙관적 시나

---

77) 이는 중국과 일본이 2010년 아세안+3+HMT에서 점유하는 비중(IMF 2011b)을 감안하여 산출되었다.

리오와 같이 2050년 동아시아 7개국이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고 일인당 평균소득은 4만 5,800달러(PPP)로 세계 일인당 평균소득(3만 7,300달러)을 능가할 경우, 동아시아 시대는 2050년 이전에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DB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2050년 아시아 경제의 비중이 31%에 그칠 경우 21세기 전반에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CEPII의 예측(표 4-1)대로 2030년 중국과 일본 경제의 합이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중국의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를 추월할 경우 동아시아 시대는 2030년 이전에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 1)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

동아시아는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한·중·일 3국은 세계적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전자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가 되었다. 2005년에 동아시아는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7% 및 세계 휴대전화의 79%를 생산했으며, 2004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의 67%를 생산하였다.<sup>78)</sup>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경쟁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품무역 수지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 4-6]과 [그림 4-7]은 지난 20년간 동아시아가 미국 및 EU에 대해 무역흑자를 실현해 왔고 그 폭이 대체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동아시아의 무

78) Hiratsuka, Daisuke and Fukunari Kimura(2008), p. 3.

역폭자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의 경우 2008년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동아시아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같은 기간 꾸준히 대EU 무역흑자의 수준을 상회하였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아세안+3국에 대한 무역흑자의 폭이 아세안+6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sup>79)</sup> 그리고 아세안+3+HMT가 가장 높은 무역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아시아의 미국과 EU에 대한 무역흑자가 제조업 생산기지인 아세안+3+HMT의 상품수출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들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단순한 세계경제의 공장에서 나아가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아세안+6+HMT)는 무역흑자에 힘입어 2010년에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3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표 3-1 참고), 2011년 9월 말 현재 세계 10대 외환보유국(지역) 중 7개 지역이 동아시아에 위치한다.<sup>8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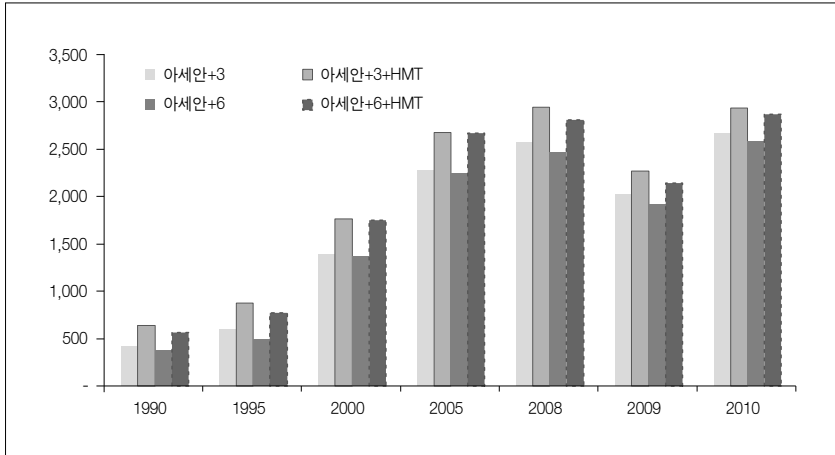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가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식민통치 및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났음을 상기할 때, 동아시아가 단기간 내에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21세기 중

79) 같은 기간 중 호주·뉴질랜드·인도 그룹은 이들 지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80) 외환보유고 규모는 중국, 일본, 대만, 인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역외국은 러시아, 스위스 및 브라질이다. 한국은행(2011).

그림 4-6. 동아시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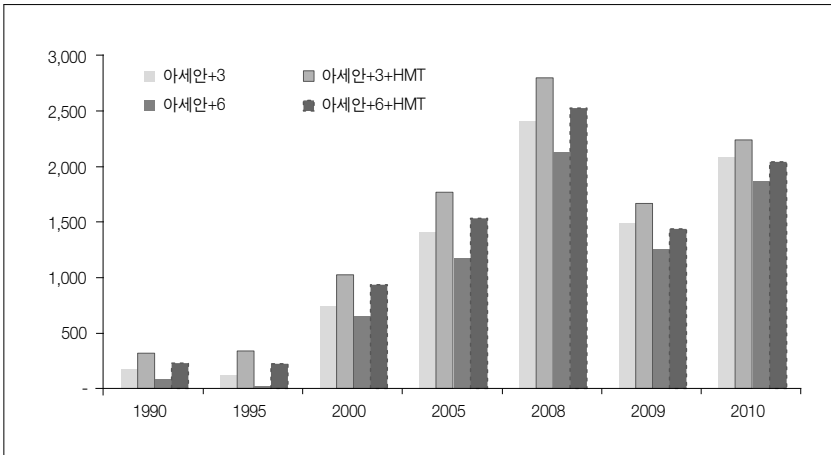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부표 25].

그림 4-7. 동아시아 국가의 EU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부표 26].

어느 시점에 동아시아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 2)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변수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첫째,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이다.<sup>81)</sup> ADB가 우려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저임금이나 자원에 의존한 성장에서 점차 생산성 제고에 따른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교육과 기술혁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격차 해소와 부패척결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서 동아시아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역내시장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림 4-6]과 [그림 4-7]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아세안+3+HMT)는 지난 20년간 미국과 EU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폭도 대체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대미 및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글로벌 불균형 현상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국가는 역내시장을 확대하고 동시에 내수

---

81) 필자는 ADB가 제시한 7개국 외에도 베트남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시장 확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아세안+3 체제에서 추진되어 온 아시아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ABMI)이 배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및 전 세계 차원에서 안정된 국제정치·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부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국제정치·안보적 갈등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3) 동아시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동아시아 FTA

동아시아 차원의 FTA는 동아시아 시대 도래 관련 세 가지 변수 중 둘째 변수와 직결된다. 역내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이미 상당수 역내 국가간에 양자간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관세장벽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스파게티볼 현상(Spaghetti bowl phenomenon)이라고 일컬어지는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다수의 FTA가 혼재하는 상태는 역내교역 증대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이는 역내교역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는 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생산 네트워크의 생산비용의 저하를 초래하여 동아시아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통해 동아시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으로써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첫째 변수였던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정치·안보적 안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FTA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 무역·투자자의 자유화 외에도 역내 빈곤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와 같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같은 문제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라는 새로운 차원의 다자간 관계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는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셋째 변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동아시아 FTA

###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앞 장에서 보았듯이 현재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은 초기 회원국을 아세안+3국 혹은 아세안+6국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그 배후에는 EAFTA를 선호하는 중국과 CEPEA를 선호하는 일본 간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양대 경제대국의 갈등을 해결할 열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작업반은 아세안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2011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일련의 정상회의에서도 새로이 출발하는 실무작업반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무작업반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작업반에 참석하는 국가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과제는 동아시아 국가간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한 양자간 FTA를 추진, 성사시키는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간 양자간 FTA의 확산은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원산지규정과 관세 양허 일정이 다른 다수의 FTA의 범람은 자칫 역내교역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커녕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기 체결 양자간 FTA가 존재할 경우 이들 FTA들을 토대로 지역 차원의 FTA를 보다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미체결 양자간 FTA의 체결이 바람직하다.

아세안+3국간 FTA를 상정할 때, [표 4-2]와 같이 아세안은 이미 한·중·일 3국과 각기 FTA를 체결하였고, 한·중 FTA와 한·일 FTA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 간에는 아직까지 양자간 FTA에 대한 어떠한 공식 제안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양자간 FTA가 체결되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아세안+3국간의 FTA 형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2. 아세안+3국간 FTA 현황

한국	●		
중국	●	○	
일본	●	○	
	아세안	한국	중국

주: ●:체결, ◎:협상, ○: 준비단계.  
자료: [표 3-6].

표 4-3. 아세안+6국간 FTA 현황

한국	●					
중국	●	○				
일본	●	○				
인도	●	●	○	●		
호주	●	◎	◎	◎	◎	
뉴질랜드	●	◎	●	○	◎	●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주: ●:체결, ◎:협상, ○: 준비단계.  
 자료: [표 3-6].

그리고 아세안+6국간 FTA를 상정하면 아세안+3국간 FTA 상정 시 보다 훨씬 많은 양자간 FTA 체결이 필요하다. [표 4-3]에서 보듯이 아세안+6국간 21개의 양자간 FTA 중 10개의 FTA는 체결되었고, 6개의 FTA는 추진 중이며, 4개의 FTA는 준비단계이다. 그리고 중국·일본 FTA는 빈 칸으로 남아 있다. 아세안+3국간 FTA 상정 시에 비해 협상 중인 한국·호주 FTA, 한국·뉴질랜드 FTA, 중국·호주 FTA, 일본·호주 FTA, 인도·호주 FTA, 인도·뉴질랜드 FTA 및 준비단계에 있는 중국·인도 FTA, 일본·뉴질랜드 FTA 등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첫째 기회요인은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FTA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역내 양자간 FTA의 확산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역내 양자간 FTA의 증대는 스파게티볼 현상(spaghetti bowl phenomenon)을 야기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FTA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제

공한다. 둘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과의 FTA의 체결 및 대화상대국간 체결된 FTA의 수 증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던 미국과 EU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저성장이 예견되고 있으며, 특히 유로지역이 경제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표 4-4]에서 보듯이 2012년 세계경제는 전망기관에 따라 2.1~4.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진경제의 성장률은 0.9~2.7%에 머물고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도 -0.3~1.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제의 상대적 부진에 따라 선진경제와 교역 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역내수출의 비중이 높은 부품과 반제품 등 중간재 및 자본재와는 달리, 선진시장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재의 경우 선진경

표 4-4.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국가/경제권	IMF	World Bank	Global Insight	OECD	Oxford Economics	EIU
세계	4.0	3.6	3.0	3.8(G20)	3.7	2.1
선진국	1.9	2.7	1.4	1.5 (선진 G20)	1.74	0.9 (OECD)
미국	1.8	2.9	1.4	1.8	2.1	1.3
유로지역	1.1	1.8	0.3	0.3	1.5	-0.3
개도국	6.1	6.2	5.6	6.7 (신흥 G20)	5.96	5.9 (Non-OECD)
중국	9.0	8.7	8.1	8.6	8.2	8.2

주 : IMF와 EIU의 선진국, 개도국 통계는 PPP 기준.

자료: IMF(2011b); World Bank(2011); Global Insight(2011); OECD(2011); Oxford Economics(2011); EIU(2011).

제의 위축에 따른 영향이 특히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82)</sup> 따라서 소비재 수출시장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내시장 확대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역내시장 확대를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또 다른 기회요인은 동아시아의 교역이 그 규모 및 역내교역 비중 면에서 이미 NAFTA나 EU에 비견될 정도로 신장했다는 점이다. 2010년 아세안+3국과 아세안+6국이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의 비중은 각각 25.8%, 22.6% 및 28.8%, 26.4%에 달해 미국(8.5%, 12.7%)을 능가하였고 EU의 비중(29.3%, 29.2%)에 다가서고 있다.<sup>83)</sup> 또한 2010년 아세안+3국 역내교역의 비중(39.7%)과 아세안+6국 역내교역 비중(45.1%)은 NAFTA(40.5%)는 물론이고 EU(56.3%)와 비교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하였다.<sup>84)</sup>

####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중·일 FTA의 필요성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실현이라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의 새로운 목표가 추가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첫째, 동아시아 차원의 FTA 관련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다. EAFTA를 지지해 온 중국과 달리 일본은 CEPEA를 선호함으로써 표면화된 양국

---

82) 2009년 아세안 3국의 소비재 수출에서 미국과 EU 시장의 비율은 각각 25.1% 및 18.7%를 차지하였다(표 3-4 참고).

83) 2010년 아세안+6+HMT의 수출과 수입의 비중은 각각 33.2% 및 30.9%에 달해 EU 수준을 추월하였다(표 3-1 참고).

84) 2010년 아세안+3+HMT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각각 51.9% 및 56.2%를 기록하였다(부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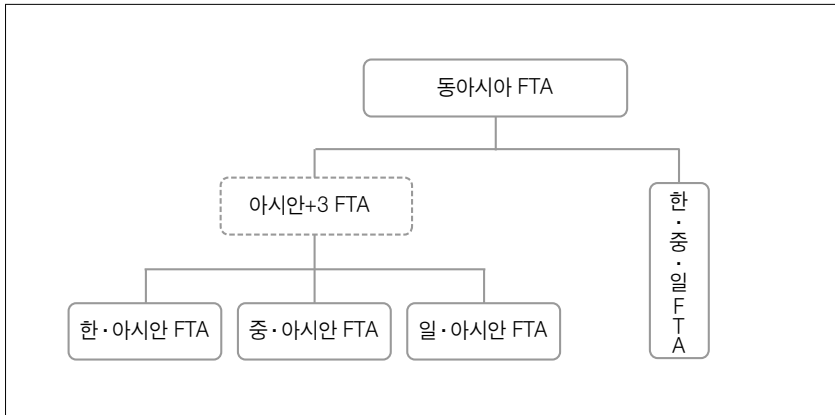
간의 갈등은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둘째, 동아시아 차원의 FTA 및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이 또 다른 변수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했을 때 일부 아세안 지도자는 아세안의 발언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이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아세안 입장에서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지역차원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의 기본틀」이 채택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참여국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수할 경우, 아세안이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2015년을 목표로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일본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추진하면서 TPP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에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및 뉴질랜드가 TPSEPA(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회원국이고 이에 호주,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이 TPP 가입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일본이 추가로 참가할 경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PP라는 ‘경쟁자’의 출현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하에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2012년부터

그림 4-8. 동아시아 FTA 추진 개념도



자료: 이창재 외(2009), p. 120.

새로이 출범할 실무작업반의 참여국 범위 및 운영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준비작업과 별도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들은 미타결된 양자간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sup>85)</sup> 그 중 특히 EAFTA 및 CEPEA 모두에 필요하며 진척도면에서도 뒤쳐져 있는 한·중·일 3국간 양자간 혹은 3자간 FTA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4-8]에서 보듯이 아세안+3국간 동아시아 FTA를 상정할 경우 3개의 아세안+1 FTAs가 체결된 상태에서 일차적으로 이를 통합한 ‘아세안+3 FTA’라는 개념적 FTA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3개의 아세안+1 FTAs보다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거나 동아시아 FTA

85) [표 4-1]과 [표 4-2] 참고.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준문안(template)을 작성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한·중·일 3국간 어떠한 형태의 FTA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기체결 FTA에 기초한 동아시아 FTA 형성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반의 논의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이 이미 대화상대국과의 FTA를 모두 체결한 상황에서, 이제는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

### **3. 한·중·일 FTA**

#### **가. 한·중·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한·중·일 3국은 각기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으나, 정작 3국간에는 현재 어떠한 FTA도 없는 실정이다. 한·일 FTA는 2003년 12월에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2004년 11월 이래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한·일 양국간 국장급 협의만 진행 중이다. 한·중 FTA의 경우 산관학 공동연구가 2007년 3월에 시작하여 2010년 5월에 종결되었으나, 아직까지 FTA 협상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간 양자간 FTA 추진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한·중·일 FTA 관련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

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한·중·일 FTA 산  
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공동연구는 2011년 내 종결되고 그 결과  
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고될 예  
정이다. 따라서 회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1) 한·중·일 FTA의 필요성

앞 절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일 3국  
간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물론 3국간 양자간 FTA  
도 가능할 것이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아직 양자간 FTA는 준비단계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한·중  
·일 FTA가 보다 나은 대안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중·일 3국간 양  
자간 FTA와는 달리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FTA 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북아 3국간  
FTA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아세안 내 동아시아 FTA를 통해 3국  
경제간 통합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입장이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 아세  
안의 영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소극적이던 입장보다 더 강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일 FTA는 3국 모두에 거시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3국간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고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3국간 FTA는 기업간 협력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3국 경제의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3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협력과 경쟁관계가 심

확됨으로써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3국간 상품과 서비스 장벽의 저하는 3국 소비자의 후생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 외에도 한·중·일 FTA는 중·일 간의 갈등해소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 전체의 관계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 국민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3국간 갈등관계를 해소시키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중·일 FTA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협력의 분위기가 정착되기 시작할 경우, 이는 고립상태에 있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도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지역 내 외교안보적 긴장완화를 가져오고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점에서 60년 전 시작된 유럽의 경제통합의 주된 목적이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전쟁예방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는 유럽 경제통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아직 분쟁의 과거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동북아에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FTA는 특히 경제 외적인 면에서 3국간 양자간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가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점에서 단순한 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한·중·일 3국간 FTA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장애요인은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 중 다수에서 FTA가 체결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양국 간에는 아직 FTA가 준비단계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EAFTA와 CEPEA 간의 대립에서도 드러나듯이 동아시아 양대 경제대국간 라이벌 의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3국간에는 아직 과거사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영토분쟁 문제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제 외적 요인 때문에 지난 20년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간의 제도적 경제통합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외적 요인 외에 여타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민감 산업 및 품목 때문에 초래되는 국내 정치적 어려움도 있다. 3국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대체로 기술면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순이나 기술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다수의 분야에서 3국은 경쟁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이 농업 및 일부 중소기업 업종인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중소기업 업종을 포함한 다수의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부문을 지닌 상황에서, 3국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및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이들 취약산업에 대한 민감성은 더욱 부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 양자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3자간 FTA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일 FTA와

한·중 FTA가 미체결된 상황에서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한·중·일 FTA의 실현을 위한 기회요인

한·중·일 FTA의 실현을 위한 첫째 기회요인은 최근 이루어진 한·중·일 3국간 협력 관련 제도적 차원에서의 진전이다. 2011년에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유럽의 경험에서 보듯이 경제통합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에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의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sup>86)</sup>

시기적으로는 동아시아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역내 무역증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한·중·일 FTA 실현의 필요성은 더욱 긴박해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동아시아 FTA 추진의 상대적 부진도 역설적으로 한·중·일 FTA 실현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

86) 2011년 9월에 출범한 한·중·일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도 이 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EAFTA와 CEPEA 공동연구의 정책건의에 따라 아세안+3 경제장관 회의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관련 정부차원에서의 실무작업반 회의로의 격상을 결정하였고, 이는 한·중·일 공동연구에서 7년간 추진되어 온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를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산관학 연구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무작업반 참여국의 범위를 놓고 중국과 일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데 반해, 이보다 뒤늦게 시작한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는 2011년에 종결하게 된다. 결국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보다 추진 과정상 뒤쳐져 있던 한·중·일 FTA가 이제 동아시아 FTA를 추월한 것이다. 실무작업반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무작업반 회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아세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형성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FTA에 앞서 한·중·일 FTA를 체결할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한·중·일 FTA를 체결할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FTA 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동아시아 FTA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은 한·중·일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 및 엔고 현상 등으로 경제적 도전을 받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농업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개방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국내적 저항이 예상되는 TPP에 일본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당면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TPP 가입 추진은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FTA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본의 TPP 가입 시도가 결과적으로 한·중·일 FTA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2장에서 일본의 동북아 역내국인 중국과 한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미국 및 여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87)</sup> 따라서 일본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본 정부는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88)</sup>

한편 TPP가 일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부문에서 한·중·일 FTA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가 TPP에 비해 국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FTA에서와 같이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는 한·중·일 FTA의 새로운 당위성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핵심 변수인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 역내시장의 확대 및 역내 및 세계적 국제정치·안보적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경제 외적 이유로 갈등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이 과거사에서 오는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3국이 협력할 미

---

87) [그림 2-11]과 [그림 2-12] 참고.

88)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의 민감성 때문에 소극적이던 점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래지향적 구심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나. 한·중·일 FTA 실현방안

현 시점에서 한·중·일 FTA 실현 관련 과제는 한·중·일 FTA와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한·중 FTA 및 한·일 FTA의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의 설정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 FTA의 기회요인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한·중·일 FTA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열릴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되는 기회를 활용해 3국 정상간 한·중·일 FTA 협상을 2012년 내 시작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 협상 시작이 지연되거나 협상 시작 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양자간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정부는 3자간 FTA에 소극적인 국가를 제외하고 적극적인 국가와 양자간 FTA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정부는 3자간 FTA에 비교적 소극적인 국가도 한·중·일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것보다 한·중·일 3국이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중국과 일본에 확연히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년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양자간 FTA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FTA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FTA에 앞서 한·중 FTA나 한·일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그것이 한·중·일 FTA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한·중·일 FTA에 비교적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한·중·일 FTA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이므로, 한·중 FTA가 먼저 추진되어도 한·중·일 FTA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결 론



2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의 60% 가량을 점유하였던 아시아 경제는 20세기 전반까지 급속히 하락하여 그 비중이 전 세계 경제의 20%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아시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20세기 말에는 그 비중이 최저점이던 1950년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이와 같은 아시아 경제의 상승세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들의 기능적 경제통합 과정을 역내교역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가늠해 보고, 아울러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추진되어 온 제도적 경제통합 논의 및 그 성과를 살펴 보았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여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기능적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핵심국인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중·일+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 동아시아(아세안+3)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광역의 동아시아(아세안+6+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56.2%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도적 경제통합의 경우 1997년 아세안+3국 체제가 출범하고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등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제도적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2008년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된 후 정례화되었고, 2009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등 동북아에서도 최근 제도적 경제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의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아울러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또한 EAFTA 및 CEPEA 공동연구의 건의에 따라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도 구상되었다. 그러나 실무작업반 참여국의 범위를 놓고 아세안+3국을 주장해 온 중국과 아세안+6국을 선호하는 일본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실무작업반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단기적 과제는 실무작업반의 참여국 범위에 대한 합의의 도출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중·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중·일 3

국간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 동시에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FTA의 추진을 촉진 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간에는 아직 어떠한 양자간 FTA도 없는 상태이다.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이래 중단된 상태이고,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에 종결된 후 아직 FTA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최근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10월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2010년 5월에 시작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1년 말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고될 계획이다.

한·중·일 FTA는 3국 모두에게 거시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3국간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고 강한 경쟁력을 지닌 3국간 FTA는 기업간 협력증대와 경쟁심화를 초래함으로써 3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후생 증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 외에도 한·중·일 FTA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하다. 한·중·일 FTA는 경제 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하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 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간 FTA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각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과 품목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있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이들 취약산업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중·일 FTA 형성을 어렵게 하는 걸림들은 비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 과거사의 잔재, 영토분쟁, 특히 중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가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 양자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3자간 FTA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중·일 FTA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회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2011년에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한·중·일 FTA 실현에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존재한다. 둘째,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한·중·일 FTA 실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셋째, 최근 실무작업반 구성문제로 인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FTA에 비해 조기 실현되고 동아시아 FTA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넷째, 한·중·일 FTA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일본의 TPP 가입 시도는 일본이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려는 정책전환이란 점에서, 일

본이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중국과 한국과의 FTA인 한·중·일 FTA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오래 전부터 중국은 한·중·일 FTA에 관심을 표명해 온 데 반해 일본은 한·중·일 투자협정을 중시해 온 바, 2011년 11월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한·중·일 FTA의 조기 실현을 위해 연내 한·중·일 투자협정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과거사에서 오는 한·중·일 3국간의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향후 3국이 협력할 기반인 한·중·일 FTA 실현에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중·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중·일 FTA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중·일 FTA 실현의 중요성과 기회요인을 감안할 때,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중·일 FTA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한·중·일 FTA는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경제 외적인 면에서 3국간 양자간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익을 가져와 동아시아 시대 도래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도 한·중·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태도는 중국이 적극적이고 일본이 비교적 소극적이며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한·중·일 FTA 협상 시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이후 지연되어 온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사전에 명백히 함으로써 일본정부도 한·중·일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상식에 반하나,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중 FTA와 한·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중·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정부가 3자간 FTA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한국이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전반적 관계개선에 기여하겠고, 나아가 한·중·일 FTA를 통해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실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손병해. 1992.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충영 · 이창재 편. 2003.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 오용석. 1996. 『동북아 경제협력의 ‘물결’ 모형』. 『북방경제연구』, 제7호, pp. 27~47.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이창재 · 김성철 · 백 훈 · 한택환 · 이재영 · 방호경.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 김한성 · 방호경 · 노유연. 2009.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행. 2011. 『2011년 10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11월 1일).
- 한국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데이터베이스 [online].
- 홍익표. 2001.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영문자료]

- ADB. 2011.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1999-2004. 2005. Jakarta: ASEAN Secretariat.
-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 2001. *Towards and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 EIU. 2011. *Global Outlook 2011*.
-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2002.
- Final Report on EAFTA Phase II Study. 2009. *Desirable and Feasible Option for an East Asia FTA*.

- Ferguson, Niall. 2011. *Civilization - The West and the Rest*. New York: The Penguin Press.
- Fouré, Jean, Agnès Bénassy-Quéré and Lionel Fontagné. 2010. *The World Economy in 2050: A tentative Picture*. 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CEPII).
- Global Insight. 2011. *Global Insight's World Overview*.
- Hiratsuka, Daisuke and Fukunari Kimura. 2008. "From De Facto to De Jure Economic Integration." *East Asia's Economic Integration: Progress and Benefit*. In Daisuke Hiratsuka and Fukunari Kimura eds. Plagrave Macmillan.
- IMF. 2011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_\_\_\_\_. 2011b.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 Khanna, Jane. 1996. "Political and Security Backdrop to Increasing Economic Interaction in the Yellow Sea Rim: Opportunities and Hindrances." In Jane Khanna and Chang Jae Lee ed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pp. 7-21.
- Lee, Chang Jae, Hyung-Gon Jeong, HanSung Kim and Ho Kyung Bang. 2006.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Maddison, Angus. 2001. *The World Economy*. OECD.
- OECD. 2011. *Press Briefing on the Economic Outlook and Policy Requirements for G20 Economies*.
- Oxford Economics*. 2011.
- Phase II Report of the Track Two Study Group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 2009.

Report by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 2006. *Towards an East Asia FTA: Modality and Road Map*.

Report of the Track Two Study Group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 2008.

Tanaka, Hitoshi. 2006. "The ASEAN+3 and East Asia Summit: A Two-Tiered Approach to Community Building." *East Asia Insights*, No. 1.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January)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DRC) of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NIRA) of Japan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of Korea. 2003.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_\_\_\_\_. 2004.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ectoral Implications of a China-Japan-Korea FTA.

\_\_\_\_\_. 2005.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owards a CJKFTA: Visions and Tasks.

\_\_\_\_\_. 2006.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concerning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_\_\_\_\_. 2007.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a China-Japan-Korea FTA.

\_\_\_\_\_. 2008.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Possible Roadmaps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DRC), Institute Developing Economies (IDE) -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2009.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Phase II: Road to Recovery of Reg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CJKFTA.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IDE-JETRO and KIEP. 2010.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New Vision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_\_\_\_\_. 2011.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World Bank. 2011. *Global Economic Prospects*.

### [웹 사이트]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 프로그램 [<http://www.tumenprogramme.org>]

싱가포르 정부 [<http://www.fta.gov.sg>]

아세안사무국 [<http://www.aseansec.org>]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직접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keri.koreaexim.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중·일 협력 사이버 사무국 [<http://www.tcs-asia.org>]

CEIC 데이터베이스 [<http://www.ceicdata.com>]

CIA World Factbook 데이터베이스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Global Insight 데이터베이스 [<http://www.ihs.com/products/global-insight>]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http://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http://cus93.trade.gov.tw/ENGLISH/FSCE>]

Trilateral Cooperation Cyber Secretariat 데이터베이스 [<http://www.tcs-asia.org>]

UNCTAD FDI 데이터베이스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

WTO [<http://www.rtais.wto.org>]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부 표



부표 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단위: %)

연도	한·중·일	한·중·일 +HMT	아세안+3	아세안+3 +HMT	아세안+ 6	아세안+ 6+HMT	NAFTA	EU(15)
1990	12,3	28,9	28,6	41,3	33,0	44,6	37,2	64,5
1991	13,9	32,1	30,9	44,6	35,2	47,8	38,9	64,7
1992	14,0	33,7	31,0	45,8	35,1	48,8	39,7	65,2
1993	16,1	33,6	33,7	46,6	37,7	49,6	41,0	60,6
1994	17,5	34,9	35,4	48,4	39,3	51,3	42,4	61,0
1995	18,6	35,6	36,9	49,6	40,3	52,2	42,0	61,7
1996	19,0	35,4	37,4	49,6	40,9	52,3	43,4	60,9
1997	18,6	35,6	36,4	49,3	39,9	52,1	44,4	54,8
1998	17,4	34,7	33,2	46,7	37,1	49,5	45,7	55,9
1999	19,2	35,7	35,4	48,5	39,0	51,1	46,8	62,0
2000	20,3	36,8	37,4	50,5	40,6	52,9	46,8	60,0
2001	21,2	37,1	37,3	50,1	40,7	52,6	46,6	59,5
2002	22,4	39,1	38,3	52,0	41,6	54,3	46,0	59,9
2003	23,7	40,3	39,4	53,1	42,7	55,4	44,8	60,6
2004	24,1	40,7	39,5	53,3	43,1	55,8	43,7	59,9
2005	23,7	40,0	39,1	52,7	43,0	55,5	43,0	58,4
2006	22,8	39,0	38,2	51,7	42,3	54,7	42,0	58,2
2007	22,2	37,8	37,8	51,0	42,2	54,2	41,0	58,1
2008	21,5	35,6	37,5	49,3	42,6	53,3	40,0	56,7
2009	22,3	36,9	38,3	50,6	43,5	54,6	39,4	56,7
2010	22,5	37,3	39,7	51,9	45,1	56,2	40,5	56,3

주: HMT는 홍콩·마카오·대만을 가리킴.

자료: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부표 2.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연도	한·중·일	한·중·일 +HMT	아세안+ 3	아세안+ 3+HMT	아세안+ 6	아세안+ 6+HMT	NAFTA	EU(15)
1990	1,09	1,86	1,81	2,07	1,85	2,02	1,07	1,47
1991	1,17	1,93	1,85	2,07	1,88	2,03	1,10	1,51
1992	1,19	1,98	1,84	2,07	1,87	2,03	1,12	1,55
1993	1,25	1,79	1,78	1,88	1,80	1,86	1,05	1,61
1994	1,35	1,87	1,83	1,93	1,84	1,89	1,09	1,61
1995	1,43	1,90	1,87	1,95	1,85	1,90	1,15	1,61
1996	1,52	1,95	1,94	1,99	1,91	1,93	1,16	1,62
1997	1,50	1,97	1,92	2,00	1,90	1,94	1,11	1,50
1998	1,56	2,11	1,98	2,12	1,97	2,06	1,09	1,45
1999	1,62	2,11	2,02	2,14	1,99	2,07	1,09	1,63
2000	1,58	2,01	1,97	2,07	1,94	2,00	1,06	1,70
2001	1,70	2,12	2,05	2,15	2,00	2,07	1,07	1,63
2002	1,73	2,17	2,04	2,18	1,99	2,09	1,11	1,64
2003	1,74	2,18	2,04	2,20	1,98	2,10	1,19	1,61
2004	1,69	2,14	1,97	2,15	1,93	2,06	1,23	1,63
2005	1,62	2,08	1,92	2,10	1,88	2,02	1,21	1,66
2006	1,53	2,02	1,84	2,05	1,81	1,97	1,21	1,70
2007	1,48	1,96	1,82	2,04	1,80	1,96	1,28	1,69
2008	1,41	1,86	1,77	1,97	1,77	1,91	1,32	1,72
2009	1,38	1,82	1,72	1,91	1,71	1,84	1,31	1,74
2010	1,30	1,71	1,64	1,81	1,63	1,75	1,32	1,92

자료: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부표 3. 한·중·일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단위: %)

연도	한국	중국	일본
1990	21.9	15.0	9.1
1991	24.6	17.3	10.0
1992	23.4	18.2	10.2
1993	23.6	24.2	11.4
1994	24.8	25.2	12.6
1995	24.8	26.5	13.7
1996	23.3	27.6	14.1
1997	22.9	26.1	13.7
1998	21.0	24.5	12.7
1999	23.7	25.3	14.5
2000	25.1	24.8	15.9
2001	25.5	24.3	17.4
2002	27.3	23.5	19.3
2003	29.6	23.1	21.7
2004	30.7	22.3	23.0
2005	31.6	20.8	23.4
2006	30.9	19.4	23.6
2007	31.2	18.2	23.8
2008	29.9	17.7	23.1
2009	30.5	17.4	26.6
2010	34.5	16.9	26.9

자료: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부표 4. 한국의 대중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단위: %)

연도	수출		수입	
	중국	일본	중국	일본
1990	0	18,6	0	25,0
1991	1,4	17,1	4,2	25,8
1992	3,4	15,0	4,5	23,5
1993	6,0	13,5	4,5	23,1
1994	6,1	13,3	5,3	24,8
1995	7,0	13,0	5,5	24,1
1996	8,2	11,4	5,7	20,9
1997	9,4	10,2	6,9	19,2
1998	9,0	9,2	6,9	18,0
1999	9,5	11,0	7,4	20,2
2000	10,7	11,9	8,0	19,8
2001	12,0	10,9	9,4	18,9
2002	14,6	9,3	11,4	19,6
2003	18,0	8,9	12,3	20,3
2004	19,6	8,5	13,2	20,6
2005	21,7	8,4	14,8	18,5
2006	21,3	8,1	15,7	16,8
2007	21,9	7,1	17,7	15,8
2008	21,4	6,6	17,7	14,0
2009	23,2	5,8	16,8	15,3
2010	28,4	5,9	18,2	16,5

자료: IMF(2011a).

부표 5. 중국의 대한국 및 일본 수출입 의존도

(단위: %)

연도	수출		수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90	0.7	14.7	0.4	14.2
1991	3.0	14.2	1.7	15.7
1992	2.8	13.7	3.2	16.7
1993	3.1	17.2	5.2	22.5
1994	3.6	17.8	6.3	22.7
1995	4.5	19.1	7.8	21.9
1996	5.0	20.4	9.0	21.0
1997	5.0	17.4	10.5	20.4
1998	3.4	16.2	10.7	20.2
1999	4.0	16.6	10.4	20.4
2000	4.5	16.7	10.3	18.4
2001	4.7	16.9	9.6	17.6
2002	4.8	14.9	9.7	18.1
2003	4.6	13.6	10.4	18.0
2004	4.7	12.4	11.1	16.8
2005	4.6	11.0	11.6	15.2
2006	4.6	9.5	11.3	14.6
2007	4.6	8.4	10.9	14.0
2008	5.2	8.1	9.9	13.3
2009	4.5	8.1	10.2	13.0
2010	4.4	7.6	9.9	12.6

자료: IMF(2011a).

부표 6. 일본의 대한국 및 중국 수출입 의존도

(단위: %)

연도	수출		수입	
	한국	중국	한국	중국
1990	6.1	2.1	5.0	5.1
1991	6.4	2.7	5.2	6.0
1992	5.2	3.5	5.0	7.3
1993	5.3	4.8	4.9	8.5
1994	6.2	4.7	4.9	10.0
1995	7.1	4.9	5.2	10.7
1996	7.1	5.3	4.6	11.6
1997	6.2	5.1	4.3	12.3
1998	4.0	5.2	4.3	13.2
1999	5.5	5.6	5.2	13.9
2000	6.4	6.3	5.4	14.5
2001	6.3	7.7	4.9	16.6
2002	6.9	9.6	4.6	18.3
2003	7.4	12.2	4.7	19.7
2004	7.8	13.1	4.9	20.7
2005	7.8	13.4	4.7	21.0
2006	7.8	14.3	4.7	20.5
2007	7.6	15.3	4.4	20.5
2008	7.6	16.0	3.9	18.8
2009	8.1	18.9	4.0	22.2
2010	8.1	19.4	4.1	22.1

자료: IMF(2011a).

부표 7. 한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단위: %)

연도	역내	동북아	ASEAN	USA	EU
1990	18,6	26,2	7,5	28,6	14,8
1991	18,5	27,5	10,1	25,7	14,6
1992	18,4	29,1	11,7	23,5	12,7
1993	19,5	30,0	11,8	21,2	11,6
1994	19,5	30,4	12,3	20,4	11,1
1995	19,9	31,4	13,7	18,5	12,4
1996	19,7	30,8	14,7	15,9	11,1
1997	19,7	31,3	14,1	15,2	11,7
1998	18,2	29,5	11,6	17,4	13,8
1999	20,5	31,8	12,3	20,5	14,1
2000	22,5	34,0	11,7	21,9	13,6
2001	23,0	33,7	10,9	20,8	13,0
2002	23,8	34,8	11,3	20,2	13,3
2003	26,9	38,9	10,4	17,7	12,8
2004	28,1	39,8	9,4	16,9	13,3
2005	30,1	40,2	9,6	14,5	13,6
2006	29,4	39,8	9,8	13,3	12,5
2007	29,0	38,0	10,4	12,3	11,7
2008	28,0	35,8	11,5	10,9	10,2
2009	29,1	37,2	11,0	10,1	8,9
2010	34,3	41,4	10,9	10,4	7,5

자료: IMF(2011a).

부표 8. 한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단위: %)

연도	역내	동북아	ASEAN	USA	EU
1990	25.0	27.4	6.8	22.8	12.2
1991	30.0	32.5	7.5	23.1	13.1
1992	27.9	30.3	8.6	22.1	12.6
1993	27.6	30.2	8.4	20.7	12.8
1994	30.1	32.5	7.7	21.1	14.2
1995	29.6	32.1	7.5	22.5	13.5
1996	26.6	29.2	8.0	22.2	14.1
1997	26.1	28.4	8.6	20.7	13.1
1998	25.0	27.2	9.8	21.9	11.7
1999	27.6	30.5	10.2	20.8	10.5
2000	27.8	31.0	11.3	18.2	9.8
2001	28.3	31.6	11.3	15.9	10.6
2002	31.1	34.8	11.0	15.2	11.3
2003	32.6	36.7	10.3	13.9	10.8
2004	33.7	37.7	10.0	12.9	10.5
2005	33.3	36.4	10.0	11.8	10.2
2006	32.5	35.5	9.6	10.9	9.4
2007	33.4	36.2	9.3	10.5	9.9
2008	31.7	34.2	9.4	8.9	8.8
2009	32.1	34.8	10.5	9.0	9.5
2010	34.7	39.1	11.5	10.3	8.3

자료: IMF(2011a).

부표 9. 중국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단위: %)

연도	역내	동북아	ASEAN	USA	EU
1990	15.4	60.0	6.6	8.5	10.0
1991	17.3	63.5	6.2	8.6	9.9
1992	16.5	61.8	5.5	10.0	9.3
1993	20.3	46.1	5.8	18.5	13.4
1994	21.4	50.3	5.9	17.7	12.8
1995	23.6	50.4	7.0	16.6	12.9
1996	25.4	49.6	6.8	17.7	13.1
1997	22.4	48.8	6.9	17.9	13.0
1998	19.6	43.3	6.0	20.7	15.3
1999	20.6	42.2	6.3	21.5	15.5
2000	21.2	41.9	7.0	20.9	15.3
2001	21.6	41.5	7.0	20.4	15.4
2002	19.6	40.3	7.2	21.5	14.8
2003	18.1	38.3	7.1	21.1	16.5
2004	17.1	37.2	7.2	21.1	16.8
2005	15.6	34.8	7.3	21.4	17.7
2006	14.1	32.9	7.4	21.0	17.4
2007	13.0	30.6	7.7	19.1	18.2
2008	13.3	29.0	8.0	17.7	18.3
2009	12.6	28.6	8.8	18.4	17.4
2010	12.0	28.2	8.7	17.9	17.4

자료: IMF(2011a).

부표 10. 중국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단위: %)

연도	역내	동북아	ASEAN	USA	EU
1990	14,7	42,0	5,8	12,2	17,0
1991	17,4	45,1	6,2	12,5	14,6
1992	19,9	45,2	5,4	10,9	13,3
1993	27,7	38,0	6,1	10,3	15,2
1994	29,1	37,5	6,2	12,1	16,1
1995	29,7	36,6	7,5	12,2	16,1
1996	30,0	36,2	7,8	11,6	14,3
1997	30,9	36,3	8,7	11,5	13,5
1998	30,9	36,3	9,0	12,1	14,8
1999	30,8	36,5	9,0	11,8	15,4
2000	28,7	34,8	9,9	9,9	13,5
2001	27,2	33,1	9,5	10,8	14,7
2002	27,8	35,0	10,6	9,2	13,1
2003	28,4	36,7	11,5	8,2	12,9
2004	27,9	36,5	11,2	8,0	12,1
2005	26,9	35,4	11,4	7,4	10,9
2006	26,0	33,9	11,3	7,5	11,0
2007	24,9	32,8	11,3	7,3	11,1
2008	23,2	30,3	10,3	7,2	11,2
2009	23,3	29,5	10,6	7,7	12,1
2010	22,5	28,8	11,1	7,3	11,4

자료: IMF(2011a).

부표 11. 일본의 주요 지역 수출의존도

(단위: %)

연도	역내	동북아	ASEAN	USA	EU
1990	8,2	26,2	11,6	31,6	20,4
1991	9,1	27,5	12,1	29,3	20,3
1992	8,7	29,1	12,2	28,4	19,7
1993	10,1	30,0	13,9	29,4	16,6
1994	10,9	30,4	15,5	30,0	15,5
1995	12,0	31,4	17,6	27,5	15,9
1996	12,4	30,8	17,8	27,5	15,3
1997	11,3	31,3	16,6	28,1	15,6
1998	9,2	29,5	12,0	30,8	18,5
1999	11,1	31,8	13,0	31,0	17,8
2000	12,8	34,0	14,3	30,1	16,4
2001	13,9	33,7	13,4	30,4	16,0
2002	16,4	34,8	13,4	28,8	14,7
2003	19,6	38,9	13,0	24,9	15,3
2004	20,9	39,8	12,9	22,7	15,0
2005	21,3	40,2	12,8	22,9	13,7
2006	22,1	39,8	11,8	22,7	13,5
2007	22,9	38,0	12,2	20,4	13,5
2008	23,6	35,8	13,2	17,7	12,8
2009	27,0	37,2	13,8	16,4	11,4
2010	27,5	41,4	14,6	15,6	10,3

자료: IMF(2011a).

부표 12. 일본의 주요 지역 수입의존도

(단위: %)

연도	역내	동북아	ASEAN	USA	EU
1990	10.1	27.4	12.7	22.5	16.1
1991	11.3	32.5	13.7	22.7	14.5
1992	12.3	30.3	13.9	22.6	14.5
1993	13.4	30.2	14.7	23.1	13.7
1994	15.0	32.5	14.3	23.0	14.1
1995	15.8	32.1	14.4	22.6	14.5
1996	16.1	29.2	15.1	22.8	14.1
1997	16.7	28.4	14.8	22.4	13.4
1998	17.5	27.2	14.1	24.0	14.0
1999	19.0	30.5	14.9	21.7	13.8
2000	19.9	31.0	15.7	19.1	12.3
2001	21.5	31.6	15.6	18.3	12.8
2002	22.9	34.8	15.3	17.4	13.0
2003	24.4	36.7	15.3	15.6	12.8
2004	25.6	37.7	14.8	14.0	12.4
2005	25.8	36.4	14.1	12.7	11.1
2006	25.2	35.5	13.9	12.0	10.0
2007	24.9	36.2	13.9	11.6	10.1
2008	22.7	34.2	14.0	10.4	8.9
2009	26.2	34.8	14.1	11.0	10.3
2010	26.2	39.1	14.6	9.9	9.2

자료: IMF(2011a).

부표 1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		일본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990	0,1	0,0	235,5	29,3
1991	0,7	0,0	225,9	16,2
1992	1,1	0,1	155,2	17,3
1993	6,9	0,7	286,0	27,4
1994	6,1	0,5	428,4	32,5
1995	10,9	0,6	424,7	21,6
1996	5,6	0,2	257,0	8,0
1997	6,5	0,1	265,6	3,8
1998	8,4	0,1	509,6	5,8
1999	26,6	0,2	1762,4	11,3
2000	76,3	0,5	2451,9	16,1
2001	69,7	0,6	776,3	6,9
2002	249,4	2,7	1404,3	15,4
2003	50,2	0,8	542,6	8,4
2004	1164,8	9,1	2262,6	17,7
2005	68,4	0,6	1880,8	16,3
2006	37,9	0,3	2111,0	18,8
2007	384,1	3,7	990,3	9,4
2008	335,6	2,9	1423,9	12,2
2009	159,6	1,4	1934,3	16,8
2010	414,2	3,2	2083,2	15,9

자료: 한국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데이터베이스 [online].

부표 1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한국		일본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995	1042,9	2,8	3108,5	8,3
1996	1357,5	3,3	3679,4	8,8
1997	2142,4	4,7	4326,5	9,6
1998	1803,2	4,0	3400,4	7,5
1999	1274,7	3,2	2973,1	7,4
2000	1489,6	3,7	2915,9	7,2
2001	2151,8	4,6	4348,4	9,3
2002	2720,7	5,2	4190,1	7,9
2003	4488,5	8,4	5054,2	9,4
2004	6247,9	10,3	5451,6	9,0
2005	5168,3	7,1	6529,8	9,0
2006	3894,9	5,4	4598,1	6,3
2007	3678,3	4,4	3589,2	4,3
2008	3135,3	2,9	3652,4	3,4
2009	2700,1	2,9	4105,0	4,4
2010	2692,2	2,5	4083,7	3,9

자료: CEIC 통계 데이터베이스 [online].

부표 1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		일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0	16.2	0.7	6.8	0.3
1991	42.5	2.1	12.1	0.6
1992	141.1	6.6	26.7	1.2
1993	264.0	11.9	6.1	0.3
1994	640.9	17.4	58.0	1.6
1995	842.2	15.8	96.3	1.8
1996	940.2	13.2	80.4	1.1
1997	776.7	12.8	59.9	1.0
1998	682.4	11.7	22.7	0.4
1999	348.7	7.4	31.2	0.7
2000	756.4	12.2	96.6	1.6
2001	645.8	10.0	91.3	1.4
2002	1,076.1	16.2	74.8	1.1
2003	1,780.6	27.5	52.0	0.8
2004	2,362.5	26.4	289.0	3.2
2005	2,811.6	29.1	156.0	1.6
2006	3,430.1	17.7	247.6	1.3
2007	5,262.7	17.6	518.0	1.7
2008	3,752.3	10.2	427.6	1.2
2009	2,117.4	7.1	374.7	1.3
2010	3,164.9	9.6	303.9	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부표 1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한국		중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5	347.2	1.5	3,183.5	14.1
1996	404.8	1.7	2,317.4	9.9
1997	171.6	0.7	1,862.3	7.1
1998	420.8	1.7	1,300.8	5.3
1999	382.8	1.7	360.2	1.6
2000	1073.9	3.4	933.5	3.0
2001	650.5	1.7	2,157.7	5.6
2002	437.2	1.4	2,621.6	8.2
2003	332.5	1.2	3,980.0	13.8
2004	770.6	2.5	5,862.6	18.9
2005	1,735.6	3.8	6,575.1	14.5
2006	1,517.5	3.0	6,169.1	12.3
2007	1,301.6	1.8	6,218.2	8.5
2008	2,369.3	1.8	6,496.0	5.0
2009	1,076.9	1.4	6,898.9	9.2
2010	1,084.7	1.9	7,251.7	12.7

자료: 일본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online].

부표 17.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존도

- 한국 -

(단위: %)

연도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1990	29.1	34.0	32.5	37.4
1991	33.3	38.9	36.9	42.5
1992	33.4	39.8	37.0	43.4
1993	33.7	40.2	38.1	44.6
1994	34.8	41.4	38.5	45.1
1995	35.4	42.3	38.9	45.9
1996	34.5	41.2	38.5	45.1
1997	34.3	41.2	38.1	45.1
1998	31.8	39.4	36.5	44.0
1999	35.1	42.5	38.9	46.4
2000	36.6	44.1	40.1	47.6
2001	36.6	43.8	40.5	47.6
2002	38.5	46.0	42.3	49.8
2003	40.0	48.2	43.8	52.1
2004	40.4	48.5	44.1	52.2
2005	41.4	48.1	45.4	52.2
2006	40.6	47.4	44.8	51.7
2007	41.0	47.0	45.2	51.2
2008	40.3	45.4	45.1	50.1
2009	41.2	46.8	46.1	51.7
2010	45.7	51.5	50.5	56.4

부표 17. 계속

- 중 국 -

(단위: %)

연도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1990	21,3	58,0	23,2	59,9
1991	23,5	61,0	25,4	62,9
1992	23,6	59,1	25,4	60,9
1993	30,2	47,7	32,3	49,8
1994	31,2	50,1	33,5	52,3
1995	33,7	51,2	35,8	53,3
1996	34,9	50,5	37,4	52,9
1997	33,8	51,1	36,2	53,4
1998	31,8	47,6	34,1	49,9
1999	32,8	47,1	35,4	49,7
2000	33,1	46,9	35,8	49,5
2001	32,5	45,7	35,2	48,4
2002	32,3	46,6	35,0	49,3
2003	32,3	46,7	35,0	49,4
2004	31,5	46,0	34,6	49,2
2005	30,0	44,2	33,4	47,7
2006	28,5	42,5	32,0	45,9
2007	27,5	40,9	31,5	44,8
2008	26,7	38,6	31,2	43,1
2009	27,1	38,7	32,0	43,6
2010	26,8	38,3	32,0	43,5

부표 17. 계속

- 일본 -

(단위: %)

연도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1990	21,2	28,8	26,1	33,7
1991	22,8	31,3	27,5	36,0
1992	23,1	32,4	27,6	37,0
1993	25,6	35,1	30,0	39,5
1994	27,6	37,0	32,1	41,5
1995	29,9	39,4	34,0	43,5
1996	30,7	39,8	34,8	43,9
1997	29,5	38,7	33,6	42,8
1998	25,6	34,6	29,9	38,9
1999	28,3	37,4	32,3	41,4
2000	30,8	40,7	34,6	44,4
2001	31,9	40,3	35,8	44,2
2002	33,6	42,4	37,5	46,3
2003	35,7	44,7	39,6	48,6
2004	36,7	46,0	40,8	50,1
2005	36,8	45,7	41,1	50,0
2006	36,3	44,6	40,7	48,9
2007	36,8	44,5	41,4	49,1
2008	36,8	43,6	42,2	49,1
2009	40,6	48,0	45,9	53,3
2010	41,5	49,2	47,0	54,7

자료: IMF(2011),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부표 18. 한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아세안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0	258.7	10.9	281.7	11.8	344.0	14.5	297.5	12.5	359.8	15.1
1991	329.1	16.3	383.7	19.0	527.5	26.1	395.2	19.5	538.9	26.7
1992	320.9	14.9	488.7	22.7	537.6	25.0	512.1	23.8	561.0	26.1
1993	177.7	8.0	447.8	20.3	630.1	28.5	481.8	21.8	664.1	30.1
1994	257.6	7.0	956.5	25.9	1,038.4	28.1	1,017.9	27.6	1,099.8	29.8
1995	610.4	11.5	1,548.9	29.1	1,662.2	31.2	1,595.7	30.0	1,709.0	32.1
1996	484.2	6.8	1,504.8	21.1	1,669.2	23.4	1,714.0	24.0	1,878.4	26.3
1997	637.8	10.5	1,474.4	24.2	1,542.6	25.4	1,697.6	27.9	1,765.8	29.0
1998	537.9	9.2	1,243	21.4	1,650.7	28.4	1,658.8	28.5	2,066.6	35.5
1999	502.5	10.7	882.4	18.8	1,238.4	26.4	956.9	20.4	1,312.9	28.0
2000	499.7	8.1	1,352.7	21.8	1,633.5	26.3	1,430.7	23.1	1,711.5	27.6
2001	417.0	6.4	1,154.1	17.8	1,274.7	19.7	1,203.0	18.6	1,323.6	20.4
2002	418.5	6.3	1,569.4	23.6	1,808.2	27.1	1,690.6	25.4	1,929.3	29.0
2003	636.1	9.8	2,468.7	38.2	2,592.6	40.1	2,569.4	39.7	2,693.4	41.6
2004	548.2	6.1	3,199.7	35.7	3,454.1	38.5	3,311.2	36.9	3,565.6	39.8
2005	722.6	7.5	3,690.2	38.2	4,124.5	42.7	3,912.2	40.5	4,346.5	45.0
2006	1,361.4	7.0	5,039.1	26.0	5,930.5	30.6	5,275.5	27.2	6,166.9	31.8
2007	3,132.7	10.5	8,913.4	29.7	10,852.7	36.2	9,382.4	31.3	11,321.7	37.8
2008	3,674.4	10.0	7,854.3	21.3	10,490.6	28.5	8,635.1	23.4	11,271.4	30.6
2009	2,048.8	6.8	4,540.9	15.2	6,130.7	20.5	5,060.5	16.9	6,650.3	22.2
2010	4,283.2	13.0	7,752	23.4	9,027.6	27.3	8,505.7	25.7	9,781.3	29.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부표 19. 중국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아세안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3	97.4	3.4	258.7	9.1	1,439.4	50.4	292.3	10.2	1,473.0	51.6
2004	162.0	2.9	217.5	4.0	2,872.5	52.2	337.9	6.1	2,992.9	54.4
2005	141.0	1.1	747.0	6.1	4,175.0	34.1	954.7	7.8	4,382.7	35.7
2006	313.3	1.8	380.1	2.2	7,268.5	41.2	476.8	2.7	7,365.2	41.8
2007	811.3	3.1	907.0	3.4	14,686.6	55.4	1,459.0	5.5	15,238.6	57.5
2008	2047.2	3.7	2202.7	3.9	41,486.3	74.2	4,203.2	7.5	43,486.8	77.8
2009	2105.6	3.7	2454.8	4.3	38,511.8	68.1	4,875.4	8.6	40,932.3	72.4
2010	3062.5	4.5	2678.8	3.9	41,297.4	60.0	4,491.9	6.5	43,110.5	62.7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

부표 20. 일본의 대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아세안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5	3,987.1	17.6	7,517.7	33.2	8,266.0	36.5	7,906.7	34.9	8,655.0	38.2
1996	5,238.0	22.3	7,960.2	34.0	9,475.7	40.4	8,991.6	38.4	10,507.2	44.8
1997	7,780.0	29.9	9,813.9	37.7	12,312.0	47.2	10,705.1	41.1	13,203.2	50.7
1998	4,454.4	18.1	6,176.1	25.1	7,320.3	29.7	7,846.4	31.9	8,990.7	36.5
1999	1,031.9	4.6	1,774.9	8.0	1,525.2	6.8	1,700.8	7.6	1,451.0	6.5
2000	207.1	0.7	2,214.5	7.0	1,975.8	6.3	2,637.5	8.4	2,398.8	7.6
2001	4,013.4	10.4	6,821.5	17.7	7,679.0	19.9	7,682.4	20.0	8,539.9	22.2
2002	4,255.7	13.3	7,314.4	22.8	7,995.0	25.0	8,638.7	27.0	9,319.2	29.1
2003	432.4	1.5	4,744.8	16.5	4,900.3	17.0	5,925.7	20.6	6,081.1	21.1
2004	2,799.7	9.0	9,432.9	30.5	10,396.7	33.6	11,373.4	36.7	12,337.1	39.8
2005	5,001.8	11.0	13,312.5	29.3	15,921.7	35.0	14,280.5	31.4	16,889.7	37.2
2006	6,923.4	13.8	14,610.0	29.1	16,610.4	33.1	15,712.9	31.3	17,713.3	35.3
2007	7,789.9	10.6	15,309.7	20.8	17,814.0	24.2	20,933.2	28.5	23,437.5	31.9
2008	6,308.9	4.8	15,174.1	11.6	17,557.9	13.4	26,592.6	20.3	28,976.4	22.2
2009	7,002.3	9.4	14,978.1	20.1	16,927.3	22.7	26,015.7	34.9	27,964.9	37.5
2010	8,929.7	15.6	17,266.1	30.2	19,238.3	33.6	26,440.0	46.2	28,412.2	49.7

주: 마카오의 경우 이용가능한 통계가 없어 제외하였음.

자료: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online].

부표 21. 전 세계 GDP의 지역별 점유 비중

(단위: %)

연도	서유럽	미국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아프리카
1000	8.7	-	70.3	3.9	4.6	11.8
1500	17.9	0.3	65.2	2.9	5.9	7.4
1600	19.9	0.2	65.8	1.1	6.2	6.7
1700	22.5	0.1	61.7	1.7	7.3	6.6
1820	23.6	1.8	59.2	2.0	8.8	4.5
1870	33.6	8.9	38.3	2.5	11.7	3.7
1913	33.5	19.1	24.5	4.5	13.1	2.7
1950	26.3	27.3	18.5	7.9	13.1	3.6
1973	25.7	22.0	24.1	8.7	12.9	3.3
1998	20.6	21.9	37.2	8.7	5.3	3.1

주: \* 구소련 포함.

자료: Maddison(2001).

부표 22. 동아시아 주요국의 세계 GDP 및 아시아 GDP 점유 비중

(단위: %)

구분	1000	1500	1600	1700	1820	1870	1913	1950	1973	1998
중국	22.7	25	29.2	22.3	32.9	17.2	8.9	4.5	4.6	11.5
인도	28.9	24.5	22.6	24.4	16.0	12.2	7.6	4.2	3.1	5.0
일본	2.7	3.1	2.9	4.1	3.0	2.3	2.6	3.0	7.7	7.7
소계	54.3	52.6	54.7	50.8	51.9	31.7	19.1	11.7	15.4	24.2
아시아에서의 비중	77.3	80.6	83.0	82.3	87.7	82.9	77.9	63.2	63.9	65.1

자료: Maddison(2001).

부표 23. 전 세계 인구의 지역별 점유 비중

(단위: %)

연도	서유럽	미국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아프리카
1000	9.5	0.5	68.2	4.2	2.4	12.3
1500	13.1	0.5	64.8	4.0	3.1	10.5
1600	13.3	0.3	68.1	1.5	3.0	9.9
1700	13.5	0.2	66.6	2.0	3.1	10.1
1820	12.8	1.0	68.3	2.0	3.5	7.1
1870	14.8	3.2	60.2	3.1	4.1	7.1
1913	14.6	5.4	54.6	4.5	4.4	7.0
1950	12.1	6.0	54.7	6.6	3.5	9.0
1973	9.2	5.4	57.5	7.9	2.8	9.9
1998	6.6	4.6	59.5	8.6	2.0	12.9

주: \* 구소련 포함.

자료: Maddison(2001).

부표 24. 동아시아 주요국의 세계 인구 및 아시아 인구 점유 비중

(단위: %)

구분	1000	1500	1600	1700	1820	1870	1913	1950	1973	1998
중국	22.0	23.5	28.8	22.9	36.6	28.2	24.4	21.7	22.5	21.0
인도	28.0	25.1	24.3	27.3	20.1	19.9	17.0	14.2	14.8	16.5
일본	2.8	3.5	3.3	4.5	3.0	2.7	2.9	3.3	2.8	2.1
소계	52.8	52.1	56.4	54.7	59.7	50.8	44.3	39.2	40.1	39.6
아시아에서의 비중	77.4	80.4	82.8	82.1	87.4	84.3	81.1	71.6	69.7	66.5

자료: Maddison(2001).

부표 25. 동아시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1990	439	637	374	572
1995	582	873	485	775
2000	1,391	1,773	1,359	1,741
2005	2,286	2,687	2,253	2,653
2008	2,583	2,952	2,450	2,820
2009	2,022	2,260	1,914	2,153
2010	2,655	2,939	2,568	2,852

자료: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부표 26. 동아시아 국가의 EU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아세안+3	아세안+3+HMT	아세안+6	아세안+6+HMT
1990	169	323	77	231
1995	129	338	8	218
2000	748	1,036	650	937
2005	1,397	1,766	1,167	1,536
2008	2,412	2,804	2,123	2,515
2009	1,501	1,677	1,258	1,434
2010	2,076	2,242	1,869	2,035

자료: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 || Executive Summary ||

### From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o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oward an Era of East Asia

Chang-Jae Lee and Ho-Kyung Bang

Over the past twenty years,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progressing rather rapidly among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creased from 12.3 percent in 1990 to 22.5 percent in 2010. When Hong Kong, Macao and Taiwan are added,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of Northeast Asia (CJK+HMT) amounted to 37.3 percent in 2010.

In addition, th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have also been made by the three countries. At the ASEAN+3 Summit Meeting, which was held in Manila in November 1999, the leaders of China, Japan and Korea met for historic gathering, and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has taken place annually since. Then, in Fukuoka in December 2008, the first independent Trilateral Summit Meeting took place outside of the ASEAN+3 framework, and the independent Trilateral Summit Meeting has become an annual event.

Furthermore, although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igned on to the economic regionalism bandwagon belatedly, they have concluded many FTAs, respectively. Yet, there is still no FTA among them.

However, some progress recently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proposed by the Trilateral Joint Research, which was set up following the agreement among three leaders at the Manila Summit in 1999,

the leaders agreed to launch an Official Tripartite Joint Study for a China-Japan-Korea FTA 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Beijing in October 2009. Seven meetings of the Joint Study Committee for a CJK FTA were held between May 2010 and December 2011, and the outcome of this Joint Study Committee is planned to be submitted to the leaders 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2012.

When it comes to 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it bega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Following the first ASEAN+3 Summit Meeting which was held in December 1997, the Summit Meetings as well as Ministerial and Senior Officials Meetings have taken place regularly, constituting a framework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ASEAN+3 countries. Additionally, the East Asia Summit Meeting was launched in 2005.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also been advancing smoothly in East Asia.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ASEAN+3 countries rose from 28.6 percent to 39.7 percent. In 2010,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ASEAN+3+HMT, ASEAN+6, and ASEAN+6+HMT represented 51.9 percent, 45.1 percent and 56.2 percent, respectively, surpassing that of NAFTA (40.5 percent) and nearing the level of EU (56.3 percent).

Furthermore, many bilateral and plurilateral FTAs have been concluded among 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In particular, ASEAN concluded FTAs with China,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With the proliferation of FTAs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interest in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has risen. In fact, the idea of an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was first recommended by the East Asia Vision Group in October 2001 and it was also proposed as a mid and long term goal by the East Asia Study Group in November 2002. Then, EAFTA Study among the experts from ASEAN+3 countries and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mong the experts from ASEAN+6 countries were

conducted, and on the basis of their recommendations, the four government - level working groups were established to prepare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East Asia has already become the world's factory.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fiscal crisis, given that the economic prospects for the United States and EU are remaining rather gloomy, East Asia is expected to be the engine of world economic growth. Moreover, if the rapid growth of East Asian economies continues, we may yet witness the start of East Asia era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is study proposes two criteria for the Era of East Asia; one is that the size of its economy should recover the level in 1820 (adjusted by the change in population), i.e., before its historic decline, and the other is that its average per capita income should attain the world's average, and suggests it as a vision to be pursued by East Asian countries.

To realize the era of East Asia, East Asia has to maintain its economic growth, enlarge internal markets and create a stabl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in order to satisfy all these conditions, we need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Given many FTAs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ASEAN+1 FTAs, the remaining missing links are among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o, the most fundamental task to realize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is the formation of an FTA or FTA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This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in order to realize the era of East Asia,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is needed, and that to achieve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a CJK FTA i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vision of realizing the East Asia era could be used as an additional stimulus to push forward the formation of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and CJK FTA.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era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must strive to form a region-wide FTA in the mid and long term, and in the short term, they should focus on the formation of a CJK FT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give priority to a CJK FTA over a Korea-China FTA or Korea-Japan FTA, and take the opportunity of the 2012 Trilateral Summit Meeting to launch the CJK FTA negotiations. By choosing the trilateral FTA over the bilateral ones, the Korean government can show its will to assume an active role in improving relations in Northeast Asia.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 2011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이준규·오민아·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오승환·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오승환·정용승·박영준
  - 11-05 대외 위협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박영준·강은정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안지연·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이준원·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김영귀·박지현·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박혜리·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강준구·김혁황·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울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윤미경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운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체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2010년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김규관·오윤아·이재호·신민금·  
Siwage Dharma Negara·Latif Adam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윤서영·박광순
- 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이홍식
-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 현해정·장용준·강준구·김혁황·박철형
- 10-03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  
서정민·김영귀·박지현·김정근·금혜윤
-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윤덕룡·오승환·김소영
-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허인·이동은·이운수·양다영
-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  
박영준·이동은·오용협·안지연
-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조종화·박복영·박영준·양다영
-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지만수·박윌라·이승신
-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  
이장규·나수엽·여지나·박민숙

- 10-12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 10-13 한·중·일 역내 투자동향과 활성화 방안 / 정형근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 10-14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균태 · 오태현
-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중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10-16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 이재영 · 이철원 · 황지영 · 파벨 미나키르
- 10-17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특성과 한국의 진출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 박미숙 · 허경신
-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10-19 한·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 조충제 · 성한경 · 최윤정 · 송영철
-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 박영호 · 한바란 · 정지선 · 주진홍 · 김민희 · 전해린
-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 10-23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순철
-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 10-25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강유덕 · 손기태 · 김은지 · 이현진
-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지원 · 권 율 · 한바란 · 정지선 · 박수경 · 이계우

■ 2009년

-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 · 이형근 · 권기수 · 이철원 · 오태현 · 김진오 · 이순철
- 09-02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  
박영호 · 이철원 · 권기수 · 정재완 · 황지영
- 09-03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  
방향 / 최낙균 · 이경희 · 김정곤
- 09-0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 김준동 · 강준구 · 김혁황 · 김민성 · 이성봉
- 09-05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 정형곤 · 이성봉 · 나승권
- 09-06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09-07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09-08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강준구 · 금혜윤
- 09-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  
성한경 · 박혜리 · 남호선 · 양주영
- 09-10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  
서진교 · 최낙균 · 박지현 · 이창수 · 박순찬
- 09-11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권 울 외
- 09-12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이창재 · 김한성 · 방호경 · 노유연
- 09-13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 윤덕룡 · 문우식 · 송치영 · 유재원 · 이영섭 · 채희율
- 09-14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  
이동은 · 송원호 · 오승환
- 09-15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윤덕룡 · 허 인 · 오승환 · 이호진
- 09-16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  
오용협 · 최창규 · 박영준 · 김연실

- 09-17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 윤덕룡 · 오승환 · 이호진
- 09-18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윤창인 · 박월라 · 여지나 · 배승빈 · 박민숙 · 조현준
- 09-19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 정성춘 · 김양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재
- 09-21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 이종운
- 09-22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 박영호 · 정지선 · 허윤선
- 09-2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2, 3권) / 이장규 외

■ 2008년

-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 · 유재원 · 한홍렬 · 김수이 · 이상현
-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 이장규 · 이준규 · 이승신 · 여지나 · 배승빈
-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 · 정형곤 · 김한성
-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 Sherzod Shadikhodjaev · 이경희 · 박지현 · 윤창인
-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송백훈 · 강준구
-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 철 · 김정렬 · 김혁황 · 성한경

-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 · 김정곤 · 박혜리 · 이홍식
-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 · 김혁황 · 박철형 · 성한경
-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 · 강삼모 · 이인구
-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 · 백승관 · 김연실
-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 · 박윌라 · 이승신 · 박현정 · 최의현
-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 · 이순철 · 황지영 · 이종문
-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 · 이계우 · 이순철 · 정지선 · 박수경
-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 · 박복영 · 권 율 · 허윤선
-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홍익표 · 김지연

## 이창재(李昌在)

프랑스 파리 I 대학(Panthéon-Sorbonne)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Chairman, The Joint Expert Group on the EAFTA Phase II Study

Member, The Track Two Study Group for CEP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cjlee@kiep.go.kr)

### 저서 및 논문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공저, 2005)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공저, 2009) 외

## 방호경(方浩慶)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bassgu@kiep.go.kr)

### 저서 및 논문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연구』(공저, 2011)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공저, 2011) 외

연구보고서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2011년 12월 20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책육**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3460-1142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ISBN 978-89-322-1352-1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1072-8 (세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_____ (한문) _____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_____
담당자 연락처	전화 _____ E-mail : _____ FAX _____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_____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특기사항

# From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o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oward an Era of East Asia

Chang-Jae Lee and Ho-Kyung Bang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기능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경제통합을 살펴보고 있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능적 경제통합은 순조로이 진행되어 온 데 반해 제도적 통합은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간 제도적 통합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부각시키는 한편,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가능해 보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다가오는 한·중·일 FTA 실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 1352 1 94320  
9 788932 2 1352 1  
ISBN 978-89-322-1352-1  
978-89-322-1072-8 (세트)  
정가 7,000원